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일시: 2005. 11. 29(화) 13:00~18:00

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4층)

주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후원: 교육인적자원부

개 회 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원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변화 및 생성과 소멸의 주기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가르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교육과정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사회를 전망하면서 국가 수준의 학교 교육 목표 및 내용, 방법, 평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느냐에 따라 인재육성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요구와 필요, 학문의 발달, 학생의 요구 등을 배경으로 하여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현행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은 주기적이고 일시적·전면적 성격을 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 동안의 주기적·일시적·전면적 성격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교육이 국가·사회적 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수시·부분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표방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연동하여 학교에서의 주5일 수업제가 금년도부터 월1회 실시되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2010년경에는 전면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문제와 주5일 수업제 도입, 국가·사회적 변화, 현행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 등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원에서는 그 동안 현 정부에서 강조해 온 수시·부분 교육과정 개정 체제 하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 과정에 대한 개선안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는 교직원체 및 교사 그룹, 학

부모 단체, 교육 전문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과정을 돌이켜 볼 때 학교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의 국가 교육과정을 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현실진단, 미래전망 등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수렴하면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가 교육과정을 탐색하였습니다. 오늘,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자 교육계 관계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중핵이자 향후 교육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본 공청회 주제를 두고, 이 자리에 계신 학교 현장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관계 전문가들께서는 고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본 공청회는 국가 교육과정의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렴하고 정련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의 발표와 토론에 기꺼이 응해 주신 선생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본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5. 11. 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정 강 정

행 사 일 정

시간	차 례	사회자
13:00~13:20	등 록	
13:20~13:40	○개 회 식 국민의례 개 회 사 정강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환 영 사 윤웅섭(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이광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40~14:20	○주5일 수업제 대비 초·중등학교 공통기본 교육과정 개정 방안 발표자 : 허경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정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20~15:20	○지정 토론 토론 1 : 박혜미(신정여자중학교) 토론 2 : 김은형(영등포중학교) 토론 3 : 김영일(성동교육청) 토론 4 :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토론 5 : 김경자(이화여자대학교) 토론 6 : 김만근(성북초등학교)	
15:20~15:40	휴 식	
15:40~16:20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개정 방안 발표자 : 박순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20~17:20	○지정 토론 토론 1 : 이원춘(성남서고등학교) 토론 2 : 신성호(중앙고등학교) 토론 3 : 이경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토론 4 : 이종태(교육혁신위원회) 토론 5 : 박경옥(부산광역시교육청) 토론 6 : 김대현(부산대학교)	
17:20~18:00	○종합 토론	
18:00	○폐 회	

차 례

□ 주5일 수업제 대비 초·중등학교 공통 기본교육과정 개정 방안

발 표 : 허 경 철	1
토론 1 : 박 혜 미	45
토론 2 : 김 은 형	48
토론 3 : 김 영 일	55
토론 4 : 송 환 웅	62
토론 5 : 김 경 자	68
토론 6 : 김 만 곤	63

□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개정 방안

발 표 : 박 순 경	85
토론 1 : 이 원 춘	127
토론 2 : 신 성 호	133
토론 3 : 이 경 자	153
토론 4 : 이 종 태	157
토론 5 : 박 경 옥	160
토론 6 : 김 대 현	161

1부: 주5일 수업제 대비 초·중등학교
공통 기본교육과정 개정 방안



【발 표】

주5일 수업제 대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방안

허 경 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나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정의 필요나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비할 필요

이번 개정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성은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주5일 수업제는 주40시간 근무제도와 연동된 것으로서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교육(또는 교육과정)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적응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입각한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2005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은 기업은 2007년 7월부터 그리고 2011년에는 모든 민간 부분이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학교도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점진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게 되어 있다.

주5일 수업제를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사항을 다양하다. 가장 근본적인 준비는 아동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전체 시간의 약 1/6에 해당되는 토요일을 학교가 아니라 사회가 교육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회 교육적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일이다. 사실 이러한 준비 없이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면 우리의 아동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총량이나 그 질은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준비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 사항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육 과정적 준비인 것이다.

일단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수업일수는 줄이더라도 전체 수업시수는 현행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축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감축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나 감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정 시간을 감축한다면 현행 교육과정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나 감축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교육과정 관련 결정이며, 이러한 문제들

에 대한 결정 없이 주5일 수업제는 도입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사회적 변화의 대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5일 수업제 실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필요가 이번 개정을 해야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라고 볼 수 있다.

나. 국가·사회적 요구의 종합적 검토 및 이를 반영할 필요

한번 구성된 교육과정은 그것이 시행되는 동안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들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대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수용은 유보한 채 제기되는 요구들의 타당성을 심층 분석하면서 예의 주시하거나 혹은 요구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직접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개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적 변화의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이공계 기피 현상**이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사회 현상의 하나로써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빚어진 현상으로서 그러한 원인 중에는 교육과정적인 요인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 심화**의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사교육 심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문화의 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관계된 결과이긴 하지만 이 역시 부분적으로는 교육과정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다. **학교 교육의 부실화**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였다. 이 문제는 곧바로 사교육의 심화라는 문제의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교육과정적인 문제와 여러 경로로 연관되어 있다. **조기유학**의 문제도 두드러진 문제 중의 하나로서 사교육 심화, 학교 교실 부실화와 연결되면서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교육과정의 개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들은 아니었지만 학교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나 완화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간접적인 요구로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여러 종류의 문제 요인들이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요강화, 단순화)**에 대한 요구가 그 중의 하나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 경험으로 우리는 학교 교육의 실질적 변화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상당 정도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 위주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내용과 운영에서의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만을 제시하는 ‘요강’으로서 보다 단순화, 대강화, 명료화되어야 한다는 개정예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귀결로서 지방 수준이나 단위 학교 수준, 그리고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결

정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과정 결정의 지방화, 분권화, 자율화**가 보다 촉진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나 교육과정 결정의 자율성 확대에의 요구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한 개정에의 요구가 있다. 그것은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편제’부분**에 대한 개정의 요구이다. 예컨대, 현행 편제 속에 하나의 ‘교과’로서 자리매김 되어 있지 못한 많은 문화 영역들이 새로운 교과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선택 교과목의 위상에서 필수 교과목으로의 위상 전환 요구, 통합교과목에서 분과, 독립 교과목으로의 위상 확보를 위한 제 요구, 보다 많은 수업시수 확보를 각 교과의 요구 등이 다양하고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정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 문화적 변화의 요인과 그러한 요구에 기반을 둔 요구들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바, 이 필요가 개정의 또 다른 이유가 된다.

다. 현행 교육과정 자체의 결함을 개선할 필요

7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실제로 적용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시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며,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종류의 비판적 논의가 있어 왔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원적 체제의 타당성 문제, 수준별 교육과정의 설정 및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제의 타당성 문제, 재량활동 시간의 신설과 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 문제, 공통필수 교과구조의 타당성 문제, 교과별 시간 배분의 타당성 문제, 교과간 통합의 적절성과 타당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적 논의가 무성하게 이루어져 왔었다.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은 시행의 과정 중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 혹은 새로운 개정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신을 또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의 변화나 요구의 변화로 인한 외부의 개정 압력이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의 결함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가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새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결함을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새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결함들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은 일시적으로 한번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항시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을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결함들, 시행의 과정에서 더 명료하게 부각되는 자체 내의 결함들, 그러한 결함들을 추출, 수정, 보완함으로써 보다 개인적, 사회적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 그것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또 다른 필요인 것이다.

라. 개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필요

제7차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는 19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논의가 완료되어 교육부의 고시로서 공고된 것은 1997년 12월 말이었다. 그러므로 고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5년 현재 7차 교육과정은 고시된 지 이미 8년이 경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2000년이었으며, 중학교 1학년은 2001년, 고등학교 1학년은 2002년이 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포함한 모든 초, 중등학교의 모든 학년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것은 2004년도부터였다. 그러므로 실제로 적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7차 교육과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간 교육과정 개정이 대체로 5년 주기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육계와 학교 현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5차 교육과정은 1987년 6월 30일에 고시되었고, 6차 교육과정은 1992년 9월 30일에 고시되었으며,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되었다. 5년마다 개정 고시되었던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도 날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5년을 주기로 개정되었으며, 고등학교는 5차에서 6차는 4년 만에, 6차에서 7차는 5년 만에 개정, 고시되었다.

물론 과거의 교육과정이, 특히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이 대체로 5년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번 개정의 중요한 이유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고시된 해를 기준으로 볼 때 8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암묵적인 기대나 압력이 이번 개정의 하나의 배경적 요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여론의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가 이번 개정의 필요성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II.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성격과 방향

1. 개정의 기본 성격

이번 개정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수시개정 체제”, 보다 정확하게는 “수시·부분 개정 체제”하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개정 작업이라는 점이다. 수시개정 방식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만약 교육과정의 전 국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면 개정을 할 수 있고, 일부 국면에 대해서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분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시 개정은 대체적으로는 부분 개정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시행중인 교육과정의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교육과정 전체가 아니고 특정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되는 특정

부분을 수시로 개선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 나아가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방식이 수시개정 방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진에서는 이번 개정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되는 부분만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 개정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7차 교육과정의 지향 방향이나 기본 철학에 대하여 일부 비판은 있었으나 그것은 우리 사회 대다수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7차 교육과정의 지향 방향이나 기본 철학은 우리 교육의 지향해야 할 방향이나 철학으로서 오히려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2)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와 같이 우리 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이나 이념을 구현하는 명시적 체제이다. 7차 교육과정의 지향 방향이나 기본 철학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이러한 이념을 표현하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는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 (3)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들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이나 철학, 또는 기본적인 구조나 체제가 아니었다. 그러한 것들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부각되는 부분적인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의 대부분 7차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현실적인 교육의 여건들을 개선해 가는 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현실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당연히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다.
- (4) 교육과정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여론의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그러한 개정 방식에 반대되는 수시·부분 개정 방식이 보다 타당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으로 여론화되어 왔으며, 정부는 교육정책 공약 사항 중의 하나로 ‘일괄개편-전면수정체제’에서 ‘수시개정-상시개편체제’로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을 천명하였으며, 여론을 토대로 수시·부분 개정 방식을 이미 교육과정의 개정 방식으로 정책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 방식의 타당성은 『교육과정 개선관련 국가·사회적 요구조사』 연구(박순경 외, 2004)에 의하면 3800명의 응답자 중 전면 개정을 찬성하는 사람은 15%(550명)임에 비해 부분개정을 찬성한 사람은 85%였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교과를 일시에 다 개정하는 방식보다는 개정이 필요한 교과나 교과군에 대하여 그 때 그 때 개정하는 부분개정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이미 사회적 여론과 정부의 의지에 의하여 정책화되어 있는 수시·부분 개정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 (5) 그 동안 우리 사회·문화 체제의 변화로 인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는 온갖 사회 집단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각축하는 예리한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는 물론 조그마한 사안 하나도 심각한 논의에 근거한 대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변화시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포함한 전면 개정은 실제적으로 그 실천이 불가능하다.

2. 개정의 기본 방침 및 방향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이나 이념, 그 성격이나 지향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개정’의 기본 방향이란 개념은 그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와 같이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했던 기본 방향과 형식(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범위 안에서의 부분적 개정 작업에서는 ‘개정’의 기본 방향이라는 개념 속에 적절하게 포함되는 새로운 항목들을 열거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개정의 경우에는 ‘기본 방향’이라는 개념 보다는 ‘기본 방침’이라는 개념이 보다 적절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 ‘방침’은 부분적으로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고의 이하 부분에 제시되는 항목들은 방향의 성격과 방침의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되는 다소 명료하게 범주화되지 않은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한 상황하에서의 개정의 기본 방침 및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철학, 취지 및 체제 유지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방침은 수시개정 체제 도입에 다른 부분 개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가급적 전면적, 대폭적인 변화나 수정은 지양하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했던 개정의 기본 방향, 철학, 취지 및 체제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성, 창의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계속 추구하며, 현행 교육과정의 미래사회 변화관¹⁾ 및 교육적 인간상²⁾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원 구조도 동일한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나. 총론과 각론(교과별 교육과정)의 동시적 연구·개발

이번 개정에서는 총론과 각론을 동시에 연구, 개발한다. 7차까지는 총론을 먼저 개발한 후 각론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방식은 각론 개발이 부실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교육과정 연구, 개발의 초점을 지나치게 총론 편제 개발에 집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개정 방식의 이러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론과 각론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방침하에 연구와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7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 설정했던 미래 사회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가 보다 큰 경제적, 정치적 단위로 묶여 가면서 인간 삶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세계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본다. 둘째, 지식의 부가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전자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 정보화** 현상 역시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셋째, **문화의 독특성과 다원성**은 계속 중시될 것이며, 편협한 민족주의는 **개방적 민족주의**로 전환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넷째, **환경 친화적 세계관**은 계속 강조될 것이며, 다섯째, **과학적 논리**와 함께 **예술적 감성**에 기반한 문화를 중시하는 경향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는 사회 변화의 방향이나 미래 사회의 모습을 위에서 기술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에 적합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7차에서 설정한 교육적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둘째,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셋째,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넷째,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다섯째,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다. 이번 개정에서도 바람직한 인간상의 모습은 이와 동일하다는 관점을 취했다.

다. 교과별 교육과정(각론)의 적정화 구현

교과별 교육과정을 적정화 하는 과제는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제기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대개의 선진국에서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는 이 부분이 언제나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내용이 된다. 우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총론의 개정보다는 각론의 개정, 즉 교과별 학습 내용의 개인적, 사회적 적합성의 제고, 학습 내용 양과 난이도의 적정화, 학년 간, 학교 급간, 그리고 교과 간 내용 연계의 조정 등이 개정 작업의 핵심 부분이 된다.

라. 지역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대강화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 체제와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자율성에 비추어 규제적 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지침을 간소화 혹은 간략화 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대강화의 목적은 각 학교가 국가 등의 상위 교육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규제적인 지침에 의하지 않고 학교 특성 및 여건에 비추어 국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강화가 단순히 주의(主義)나 주장의 슬로건으로 제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사회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강화의 대상과 범위,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것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대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문장을 작성 또는 수정, 삭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 견지에서 국가·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의사결정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론(異論)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교육과정 대강화와 관련된 2005년도 설문조사 결과³⁾, 국가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향후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교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장학사들의 의견은 <표 1>과 같다.

<표 1> 총론과 각론의 대강화 및 상세화 방안에 대한 의견

	응답빈도 및 백분율(%)									
	총론과 각론 모두 대강화되어야 한다		총론은 대강화하고 각론은 상세화하여야 한다		총론은 상세화하고 각론은 대강화하여야 한다		총론과 각론 모두 상세화하여야 한다		전체	
시도 장학사	4	(14.3)	18	(64.3)	3	(10.7)	3	(10.7)	28	(100.0)
지역청 장학사	37	(14.0)	157	(59.2)	27	(10.2)	44	(16.6)	265	(100.0)

이와 같이 시도 교육청 장학사의 64.3%와 지역교육청 장학사의 59.2%가 ‘총론은 대강

3) 이 설문 조사 결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의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적용 과정 개선 연구」 보고서(미발행)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조사 대상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장학사 408명과 전국의 초·중등학교의 부장 교사 1,040명이다.

화하고 각론은 상세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총론 지침의 상세화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시·도 장학사의 57.2%, 지역청 장학사의 43.8%, 교사의 41.5%가 방해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각론 지침의 포괄화로 인해 교과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도 장학사의 50.0%, 지역청 장학사의 61.3%가 동의하고 있다. 또한 각론의 상세화로 인한 교과서 내용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 장학사의 60.7%, 지역청 장학사의 47.9%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임으로써 총론의 대강화와 각론의 상세화 논의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한편,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장학사의 약 43.0%가 특색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장애 요인으로 ‘국가수준 지침의 상세화에 따른 편성·운영의 자율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특색있는 학교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장애 요인’으로 교사들의 35.0%가 ‘국가수준 및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지나친 상세화를 지적하였으며, 행정 지시 및 요구 등과 같은 상급 기관의 지나친 감독과 지시(44.1%)에 대한 의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58)에 의하면, ‘국가 교육과정의 최소화와 학교 자율성 확대’에 대해 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의 79.8%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과정 적용의 효율성과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대강화 및 각론의 상세화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총론의 대강화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침을 국가 수준에서 ‘명료하게’ 제시해주는 것과 관련되며, 교과 교육과정의 상세화는 교과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구체적인 지침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론 및 각론 지침은 반드시 따라야 할 교육과정 의사결정에 관한 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 적용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 적용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 총론의 대강화 및 각론의 상세화에 대한 가능성을 심도있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공통성을 추구하면서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교육과정 적용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지침이 대강화 됨으로써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상세화 됨으로써 그것이 교육과정 적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대강화, 상세화 하는 것은 지양하고 선택적으로 혹은 사안별로 총론 및 각론 지침이 대강화되거나 상세화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총론 과 각론의 지침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이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대강화 및 상세화에 상관없이, 교육과정 적용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재구성하여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강화를 추구한다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게 하거나, 상세화 측면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그것이 오히려 교육과정의 적용을 구속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나치게 대강화된 결과,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 및 기능을 퇴색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실질적인 의미를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 국가·사회적 요구의 반영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종래의 교과 틀 내에 반영하는 것에 더하여 재량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범교과 학습’을 설치하여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범교과 학습 영역의 성격과 내용은 영국의 cross-curriculum 및 일본의 종합적 학습시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사회 변화 및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교육적 내용을 수용하고자 하는 교육적 시도라는 점에서 유관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범교과 학습 및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부각되어 온 범교과 학습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한다⁴⁾.

우선 초·중등학교 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범교과 학습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현행 범교과 학습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전체)

현행 범교과 학습의 문제점	집단	응답 빈도와 백분율(%)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킴	초등학교	104 (11.1)	538 (57.6)	280 (30.0)	12 (1.3)	934 (100.0)
	중학교	87 (9.4)	441 (47.7)	364 (39.4)	32 (3.5)	924 (100.0)
	고등학교	148 (7.9)	983 (52.3)	681 (36.2)	68 (3.6)	1880 (100.0)
	전체	339 (9.1)	1962 (52.5)	1325 (35.4)	112 (3.0)	3738 (100.0)
교사가 가르치는 부담을 증가시킴	초등학교	144 (15.4)	645 (68.9)	139 (14.9)	8 (0.9)	936 (100.0)
	중학교	194 (20.9)	620 (66.8)	109 (11.7)	5 (0.5)	928 (100.0)
	고등학교	236 (12.5)	1214 (64.3)	410 (21.7)	27 (1.4)	1887 (100.0)
	전체	574 (15.3)	2479 (66.1)	658 (17.5)	40 (1.1)	3751 (100.0)
교과에 비해 교육내용으로서 중요하지 않음	초등학교	67 (7.2)	455 (49.2)	379 (41.0)	24 (2.6)	925 (100.0)
	중학교	111 (12.1)	456 (49.6)	320 (34.8)	32 (3.5)	919 (100.0)
	고등학교	203 (10.8)	972 (51.7)	639 (34.0)	65 (3.5)	1879 (100.0)
	전체	381 (10.2)	1883 (50.6)	1338 (35.9)	121 (3.3)	3723 (100.0)
기존 교육내용과 유사·중복됨	초등학교	163 (17.4)	646 (68.9)	120 (12.8)	8 (0.9)	937 (100.0)
	중학교	134 (14.5)	614 (66.4)	171 (18.5)	6 (0.6)	925 (100.0)
	고등학교	197 (10.5)	1232 (65.5)	431 (22.9)	22 (1.2)	1882 (100.0)
	전체	494 (13.2)	2492 (66.6)	722 (19.3)	36 (1.0)	3744 (100.0)

4) 이에 대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연구보고 CRC 2004-4-2)」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임.

교과교육 운영에 방해가 됨	초등학교	76 (8.2)	374 (40.3)	457 (49.3)	20 (2.2)	927 (100.0)
	중학교	72 (7.9)	379 (41.4)	442 (48.3)	22 (2.4)	915 (100.0)
	고등학교	141 (7.6)	760 (40.8)	908 (48.7)	56 (3.0)	1865 (100.0)
	전 체	289 (7.8)	1513 (40.8)	1807 (48.7)	98 (2.6)	3707 (100.0)
교과외의 활동에서 충분히 다루어짐	초등학교	61 (6.6)	472 (51.0)	373 (40.30)	20 (2.2)	926 (100.0)
	중학교	49 (5.4)	351 (38.6)	466 (51.3)	43 (4.7)	909 (100.0)
	고등학교	62 (3.3)	674 (36.1)	1016 (54.4)	117 (6.3)	1869 (100.0)
	전 체	172 (4.6)	1497 (40.4)	1855 (50.1)	180 (4.9)	3704 (100.0)
지역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음	초등학교	65 (7.0)	567 (60.9)	287 (30.8)	12 (1.3)	931 (100.0)
	중학교	42 (4.6)	499 (55.0)	355 (39.1)	11 (1.2)	907 (100.0)
	고등학교	105 (5.7)	1051 (56.6)	656 (35.3)	44 (2.4)	1856 (100.0)
	전 체	212 (5.7)	2117 (57.3)	1298 (35.1)	67 (1.8)	3694 (100.0)
학교급, 학생 발달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음	초등학교	42 (4.5)	472 (50.6)	406 (43.5)	13 (1.4)	933 (100.0)
	중학교	32 (3.5)	368 (40.0)	497 (54.0)	24 (2.6)	921 (100.0)
	고등학교	70 (3.8)	804 (43.3)	940 (50.6)	44 (2.4)	1858 (100.0)
	전 체	144 (3.9)	1644 (44.3)	1843 (49.6)	81 (2.2)	3712 (100.0)

이와 같이 현행 범교과 학습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교사들의 교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과에 비해 교육 내용으로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기존 교육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지역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범교과 학습의 유용성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범교과 학습이 교과 교육을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교과 외의 활동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급이나 학생 발달 특성에 적절한 내용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범교과 학습이 사안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범교과 학습의 개선 방안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먼저 범교과 학습 중에서 교육 내용 간에 통폐합 및 조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 교육, 민주시민 교육, 환경 교육, 인성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 내용보다 더 중요하여 강화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인성 교육, 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범교과 학습 중 별도의 과목으로 독립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화 및 정보윤리 교육, 환경 교육, 인성 교육, 경제 교육 등의 순이었다. 범교과 학습 중에서 기존 교과와 중복되어 삭제해도 될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시민 교육, 환경 교육, 인성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과 내용보다 중요하지 않아 폐지해도 무방한 내용에 대한 의견으로 해양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민주시민 교육, 한국문화정체성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범교과 학습의 개선 방안에 대해 중학교 관계 집단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교육 내용 간에 통폐합 및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는 경제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교과 내용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인

성 교육, 환경 교육이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별도 과목으로 독립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환경 교육과 인성 교육이, 교과 내용보다 중요하지 않아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는 근로정신 함양 교육과 통일 교육을 지적하였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는 효도, 전통 윤리, 경로, 호국보훈, 부패방지, 무용, 청소년 보호, 양성평등, 종교, 장애인 이해, 인권, 배려, 공명선거, 지적재산권, 관광, 농어촌이해, 미디어, 연극, 여가활동, 서예, 독서, 생명공학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학교 교육에서 강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최근 국가·사회적 요구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 빈도와 백분율(%)			전체
	수용하기에 무리	일부 요구에 한하여 수용	가급적 모든 요구를 수용	
전 체	1272 (33.4)	2211 (58.0)	331 (8.7)	3814 (100.0)
초등학교	418 (43.8)	501 (52.5)	36 (3.8)	955 (100.0)
중학교	263 (28.2)	590 (63.4)	78 (8.4)	931 (100.0)
고등학교	591 (30.7)	1120 (58.1)	217 (11.3)	1928 (100.0)

이러한 국가·사회적 요구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초·중·고 집단 전체 의견에서는 ‘일부 요구에 한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가급적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가·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존 교과 교육 내용보다 교육 내용으로서의 중요도가 낮고, 상당 부분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으며, 교사의 가르치는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최근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의 적합성 차원에서 수용하되, 첫째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은 일부 요구에 한정시켜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학습 부담과 교수 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범교과 학습은 가급적 관련 교과에서 수용, 지도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교과서 개발 지침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교과 내용에 비해 중요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약화 내지 삭제하는 방안에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사회적 요구는 각 기관 및 단체의 요구에 의해 수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교육적 및 교육과정적 의미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

정 틀 내에 선점하고 있는 교과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은 각 기관 및 단체의 요구 사항으로 간주될지 모르지만, 국가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사항은 교육과정 개정의 한 동인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이 개별적, 선별적, 부분적 수용의 형태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개선의 연속성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들은 교육적 및 교육과정적 의미에서 볼 때, 장차 학습자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적 교과 이상으로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교육적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단순히 기관 및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 내용의 등장 및 필요로 보고,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교과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통해 국가 교육과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의의와 성격, 영역, 체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III.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일수와 시수 조정 방안⁵⁾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하여 연간 수업일수, 교육과정 기준 수업주수, 그리고 주당 수업시수를 조정하는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각각의 조정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수 조정 시 고려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연간 총 수업시수의 감축에 따른 학력 저하 문제, 주당 시수의 배당에 있어서는 영역별 교과별 편제의 문제점 해소, 수업 주수의 변화에 따른 방학 일수 문제, 학교 행사일 조정, 주중(평일) 학습 부담 증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 1) 연간 시수 감축 정도 : 학력 저하 문제
- 2) 주당 시수 배당(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 교과 편제
 - 현행 교육과정 편제의 문제점 해결
 - 교과서 기준 주수 조정시 교과별 교육 내용 적정화 문제
- 3) 수업 주수 증대 정도 : 방학 일수 감축
- 4) 학교 행사일 조정 : 현행 16일
- 5) 주중(평일) 학습 부담 증가 문제 : 주중 학습(수업) 부담

또한 연간 수업일수와 총 수업시수를 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최근 외국의 동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

5) 이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연구과제인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2005년 10월 25일에 열린 공청회 자료에 기초한다.

- 미국 : 학력 중시, 학업성취도 제고, 책무성 강조
- 일본 : '여유 교육'으로부터 '학력 향상'으로의 전환, 학력 고사 부활 검토
- 중국 : 창의력 및 종합적인 능력 양성을 목표로 교과 교육과정 개혁
- 프랑스 : 교육 경쟁력 강화, 연중 시험 실시, 경쟁력 강화

1. 연간 수업 일수 및 수업주수의 조정

1) 연간 수업 일수 설정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수업일수는 220일 이상으로, 교육과정 기준 주수는 학기당 17주, 연간 34주로 그리고 16일이 학교행사일로 되어 있다. 여기서 34주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학교에 출석한 주6일의 34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행사일을 포함하여 교사와 학생이 실제로 학교에 출석하는 수업일은 1주 7일로서의 주수로는 1년 52주(365÷5) 중 약 40주에 해당된다.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수업 일수를 현재와 같이 220일, 학교행사 일수를 16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교육과정 기준 주수는 34주에서 약 41주(204일÷5일)로 7주가 증가하게 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면 실제 출석하는 1주 7일로서의 수업일은 1년 중 43~44주로 대폭 증가하고 방학주수는 현재 90일 정도인 약 12~13주(1주 7일로 계산)에서 8~9주로 대폭 감축된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수업일수를 축소 조정하는 안을 구안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진에서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열린 공청회(2005년 10월 25일)를 통해, 수업일수를 190일로, 교육과정 기준 수업 주수는 34주, 학교행사일은 20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연간 수업일 190일의 산출 근거는 첫째, 2005년 현재 월1회 주5일 수업제 전국적 일괄 실시와 주 2회 우선 시행학교 그리고 전면시행 연구학교의 다음과 같은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이다.

- 2005년 월 1회 실시교의 연간 수업일 수 : 213일 내외
- 2005년 월 2회 우선 시행학교의 연간 수업일 수 : 203~206일 정도
- 향후 월 2회 실시할 경우 : 205일로 감축 조정(안)
- 2005년 현재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연구학교의 연간 수업일 수 : 198~201일 정도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는 2009년도에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되며 월 1회(현행)→ 월 2회 → 월 4회 실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박순경,2005). 그런데, 현재 월 1회 실시교의 수업일수가 이미 7일 정도 감면이 되었고 월 2회 우선시행학교는 203~206일 정도로 14~17일이 감면되어, 본 연구진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월2회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다음 <표 4>와 같이 205일의 연간 수업일수 즉, 15일이 감축되고 학교 행사일은 18일의 '여유 수업일'(가칭)로 재개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4> 주5일 수업제의 월2회 실시시 연간 수업일수 구성(안)

205일 (연간 수업 일수)	
187일 (교육과정 기준 수업 일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을 34주로 하고, 월 2회 토요일 휴업 시, 주당 수업 일수를 5.5일로 산정함에 따른 연간 수업 일수	18일 (여유 수업 일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의한 수업 일수를 제외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기 위한 여유 수업 일수

이러한 주5일 수업제 단계적 확대 실시기에 이미 연간 수업일수 220일은 213일(월 1회시)→ 205일(월 2회시)로 점차 감축 운영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현행 220일 수업일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연간 수업일 190일의 산출 근거 둘째는, 이미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수업일수에 대한 고찰 결과이다. 다음 <표 5>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수업일과 시간 등을 규정하는 국가들과 현행 우리나라와의 비교결과이다.

<표 5> 외국의 연간 수업 일수 비교

국가	일수	수업일
한국(현행)	220일(교육과정 204일)	주6일
일본	175일	주5일
중국	초등학교 195일, 중학교 200일, 고등학교 205 일	
대만	200일	
싱가폴	197일	
캐나다	190일	
핀란드	190일	
스웨덴	178일	
네덜란드	학교재량(국가수준에서는 연간 수업시수, 주당시수만 규정)	

비교 국가 모두 연간 수업일은 '최소 수업일'을 의미하며, 가장 수업일을 적게 규정한 나라는 일본 175일과 스웨덴 178일이다. 가장 많은 나라는 대만의 200일과 중국의 195-200-205일인데, 이 두 나라는 군사훈련과 노동, 사회실천활동 등이 최소 수업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의 수업일수를 비교 검토한 결과 190일 정도가 주 5일 수업제에서 가장 일반적인 국제수준의 수업일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에서 제안한

연간 수업일수로 190일 안의 구성을 현행 220일과 비교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간 수업일수 190일안과 현행 220일과의 비교

	현행	개선안	비고
연간 수업일	220일 이상	190일 이상	30일 감축 주6일제→주5일 수업제
교육과정 기준 수업일	204일	170일	34일 감축
교육과정 기준 주수	학기당 17주 연간 34주	학기당 17주 연간 34주	동일
학교행사일	16일	20일	증가, '여유수업일'로 재개념화
방학일	약 90일	약 84 ~ 85일	1주 정도 감축

<표 6>에서와 같이 교육과정 기준 주수를 현행과 같이 34주로 하면 교육과정 기준 수업일은 34주 * 5일 = 170일이 되고, 여기에 학교 행사일 20일을 더하면 연간 최소 수업일은 190일이 된다. 학교행사일을 4일 늘린 것은, 연간 수업일 190일과 연간 수업주수 34주를 맞추고, 또 학교행사일을 여유수업일로 재개념화함으로써 교육과정과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을 발휘하게 함이다.

190일을 주5일 수업제로 운영하려면 현재보다는 방학일을 1주 정도 감축해야 하고, 만약 방학일수를 줄이지 않으려면 연간 수업일수를 185일 정도로 감축하면 된다. 선행 연구 결과 주 5일 수업제 실시시 방학일수에 대해서는 다음 <표 7>에서와 같이 감축보다는 현행 유지가 많았다.

<표 7>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할 경우 방학 일수에 대한 의견

전면 실시에서의 방학 일수	현행 유지		감축 조정		합계	
전체	2541	(75.7)	816	(24.3)	3357	(100.0)
초등교사	816	(77.9)	232	(22.1)	1048	(100.0)
초등학부모	717	(70.5)	300	(29.5)	1017	(100.0)
중학교교사	319	(82.4)	68	(17.6)	387	(100.0)
중학교학부모	199	(72.9)	74	(27.1)	273	(100.0)
고교교사	321	(81.9)	71	(18.1)	392	(100.0)
고교학부모	168	(70.3)	71	(29.7)	239	(100.0)

- 전체적 경향 : 76%가 현행 유지 선호
- 집단별 : 학부모(70 ~ 73%)보다 교사(78 ~ 82%)가 현행 유지를 선호
- 지역별 : 특별시/광역시 78%, 중소도시 75%, 읍면 74%가 현행 유지 선호

2) 현행 '행사일 수(연간 16일)'의 운영 방식 개선 방안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행사일수 16일은 아래와 같이 개별학교 그리고 학교급의 형편에 따라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 2005년 학교 행사 일수 : 학교별로 다양 (5~12일)
 - 연례적 학교 행사(시업식, 방학식, 개학식, 종업식)는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
- 학교 행사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합리적인 편성·운영 방안 필요
 - 소요 시간 측면 : 일 단위 vs. 시간 단위
 - 실시 학년 측면 : 전 학년 대상 vs. 일부 학년 대상
 - 예) 전 학년 : 시업식, 방학식, 개학식, 종업식
 - 소풍 또는 현장학습, 수련회 또는 수학여행
 - 체육 대회, 사생 대회, 학교 축제 등
 - 일부 학년 : 입학식(1학년), 졸업식(6학년)
 - 학교급별 특성 측면 : 초등학교 vs. 중등학교
 - (초등) 체험중심·활동중심의 교육 활동 강조
 - (중등) 정기고사 : 향후 전면 실시할 경우 교육과정 기준 수업 일수가 204일에서 170일로 줄어들게 되면, 정기고사(연간 약 14일)나 성취도 평가 등의 고사일을 170일에서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예상됨

수업일 중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16일은 운영하기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다. 이 16일이 학교행사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급 공통으로 행사를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운용해야 하는 문제, 특별활동의 행사활동과의 중복 문제가 있다. 또한,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일 중 시험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14일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초등학교는 특별활동, 재량활동의 전일제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체험 중심, 활동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학교행사일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현행 학교 행사일 16일의 명칭 및 개념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과정 영역 구분과 수업시수 구분에 대한 재고 차원에서 학교행사일 16일의 운영방식 개선안으로서 '여유수업일'(가칭)을 20일로 제안한다.

- 기존 '행사일'의 명칭 및 개념 변화 필요

- 교육과정 기준 수업 일 외에 주어지는 “+α”에 해당, 잠정적으로 “여유 수업 일”로 명명함
- 주5일 수업제로 인한 수업 일수 감축을 고려할 때, ‘일’ 단위보다는 ‘시간’ 단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기고사를 포함하여 기존의 각종 학교 행사 활동 (시업식, 개학식 또는 입학식, 방학식, 졸업식, 체육 대회, 현장 학습, 수련회 또는 수학 여행 등),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수업 일수 감축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 필요성 부각
- 주5일 수업제로 인하여 재량활동 감축이 불가피한 반면,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증대(범교과학습 내용의 다기화, 다양화)되는 실정을 고려, 교과에 기초를 둔 선택 과목으로 수용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
-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 유지

□ 교육과정 영역 구분과 수업 시수 구분에 대한 재고

- 지금까지는 전체 교육과정을 암묵적으로 수업과 활동, 행사로 삼분하여 운영해 옴. 즉 수업은 교과 위주, 활동은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을 지칭하고, 행사(교육청 주관 또는 권장 행사와 학교 자체 행사)는 학년군 또는 전교 단위로 실시하는 활동으로 이해해 온 실정임.
- 또한 수업 일수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교육과정 기준 주수에 의한 수업 일(204일)’과 ‘학교 행사 일(16일)’로 양분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하나의 활동에 소요되는 수업 시수의 출처를 판단하는 데 혼란을 낳는 등 비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해 옴. 예로서 현재 학교 행사로 분류되어 학교행사일(16일)을 활용해 온 ‘체육 대회’는 세 가지 영역, 구체적으로 수업(체육 교과), 학교 행사, 특별 활동(행사활동에서의 보건체육행사 활동)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업일을 교육과정기준 주수에 의한 수업일과 행사일로 인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음. 연간 수업 일수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안에 교육과정 기준 주수가 34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3) 교육과정 기준 수업주수의 조정 문제

수업주수, 보다 정확히 교육과정 기준 수업주수는 현행 학기당 17주, 연간 34주로 되어 있다. 연간 수업일을 산정할 때 교육과정 기준 주수와 학교행사일(여유수업일)을 합산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교육과정 기준 주수이다.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기준 수업주수는 주당 수업시수의 결정 즉 다음 장(IV장)에서 다루어질 편제의 결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수업일, 총 수업시간수 등이 감축될 경우 교육과정 수업의 기준 주수에서 혹은 주당 시수 어디에서 감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당 시수와 교육과정 기준 주수 조정에 따른 문제는, 학교 행사일을 그대로(16일) 유지할 경우 방학과 수업일과 서로 가감이 되어 다음의 문제를 낳는다.

-주당 시수 과다 축소시 편제 개선 어려움(유지시 편제 개선 용이)
 -수업 주수 증가시 방학 일수 감축(유지시 방학 일수 유지)

연간 수업일, 교육과정 기준 주수, 여유 수업일과의 관계속에서 교육과정 기준 주수를 설정하기 위하여 연간 수업일 190일을 기초로 하여 교육과정 기준 주수를 34, 35, 36, 38주로 설정해 본 예는 다음 <표 8>과 같다.

연간 수업일 190일 하에서 34주로 할 경우 교육과정 기준 주수와 교과서 기준 주수는 현행과 같이 할 수 있으나, 여유 수업일이 4일 늘어나게 되어 이의 합리적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기준 수업주수를 35, 36주로 할 경우, 기준 주수 증대로 인한 교육 내용 양 증대, 교과 교육과정 적정화에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교과서 기준 주수와 3,4주의 차이가 생겨 1~2주 분의 수업 내실화 내지 교과서 기준 주수 자체의 향후 조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기준 수업주수를 38주로 하게 되면 여유수업일은 전혀 없게 되어 교육과정으로만 190일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학교 행사일로 사용해 오던 여유분을 고려해 연간 수업일을 190일 이상으로 늘리거나, 학교행사를 수업일과 연동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표 8> 교육과정 기준 수업 주수의 특성과 문제점

구 분		현행(34주)	34주(안)	35주(안)	36주(안)	38주
연간수업일		220일	190일	190일	190일	190일 이상
교육과정 기준 수업 일수		204일	170일	175일	180일	190일
교과서 기준 주수		32주	향후 조정이 필요함			
여유 수업 일수		16일	20일	15일	10일	0
변 화 에 따 른 문 제 점	교육과정 기준 주수	34주	34주(현행 동일)	기준 주수 증대로 인한 교육 내용 양 증대, 교과 교육과정 적정화에 불리		
	교과서 기준 주수와 차이	2주	2주(현행 동일)	교육과정 기준 주수가 증대되지 않을 경우 차이가 3주로 늘어남	교육과정 기준 주수가 증대되지 않을 경우 차이가 4주로 늘어남	6주
	기타		여유 수업일 증대에 따른 수업일의 합리적 배분과 활용 방안 필요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학기의 수업 불균형 초래	여유 수업일 과다 감축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통성 제한	여유수업일이 없음으로 연간 수업일 190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2. 주당 수업 시수의 조정

1) 주당 수업시수

7차 교육과정 문서의 편제표에는 교과별, 학년별 연간 최소 수업시수의 총량이 있을 뿐 주당 수업시수는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간 수업시수는 교육과정 기준 수업 주수와 주당 수업시수의 곱셈의 결과로 나오는 것인 만큼, 교육과정 개정시에 주당 수업시수의 고려는 편제 개발의 기초가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6일 수업제에서 주5일 수업제로 주당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수업시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주당 수업시수를 조정하는데 있어 고려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주당 수업 시수 조정에서의 고려 사안

- 학교급별 교육 목표 달성, 기본 소양과 학력 등 국가 경쟁력의 기초 형성
- 학교급간, 공·사립간, 도시와 농촌간, 가정 환경에 의한 격차 해소 문제
- 보육·보호 문제(초등), 생활지도 문제(중등)
- 학력 저하 우려
- 사교육비 증대 우려

연간 수업일수 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표 9>의 외국의 연간 총 수업시간수에 대한 검토 결과는 주당 수업시수 결정의 근거가 된다.

<표 9> 외국의 연간 수업 시수 비교

단위 : 시간(60분 기준)

구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 국	현행 교육과정기준	553	567	657	657	725	725	867	867	867	1020	1020	1020
	주당1시간 감축	531	544	635	635	703	703	842	842	842	992	992	992
	주당2시간 감축	531	544	612	612	680	680	816	816	816	963	963	963
대만	613	613	787	787	827	827	990	990	1020	1167	1167	1100	
중국 (노동활동2주 제외)	769	798	855	855	855	855	965	965	965	1140	1110	1080	
	(728)	(756)	(810)	(810)	(810)	(810)	(916)	(916)	(916)	(1083)	(1055)	(1026)	
일본	587	630	683	709	709	709	817	817	817	719	719	719	
핀란드	542	542	656	656	684	684	855	855	855	713	713	713	

중국 :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신교육과정 기준(주당 33시간, 45분, 38주)로 할 경우 941시간임

대만 :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으로 계산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경우 주당 수업시수 조정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 11-12월, 총 6,587명(초·중·고등학교 교사 3,379명, 학생 1,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관계자 320명, 교과전문가 215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주5일 수업제 대비 현행 수업 시수 조정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주5일 수업제 대비 시수처리		'감축'에 대한 집단별 학년별 반응		
	유지	감축	학생	교사	학부모
전체	36.4	63.6	.	.	.
초등학교	1, 2학년	39.0	1학년: 77.6 2학년: 75.0	81.3	21.1
	3, 4학년		3학년: 87.9 4학년: 78.7		
	5, 6학년		5학년: 86.7 6학년: 81.7		
중학교	38.7	61.3	50.1	81.3	37.0
고등학교	33.9	66.1	55.0	73.6	.

전체적 경향은 감축 63.6%, 유지 36.4%로 대체로 감축을 선호하고 있으며, '감축'에 대해서는 집단간 반응 차가 있어서 초등의 경우 교사 81.3%, 학부모 21.1%가 감축에 찬성하였고, 중등으로 갈수록 집단 간 격차는 줄어들었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시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한다면 현행 대비 감축 양은 어느 정도 해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전면 대비 주당 수업 시수 감축 양에 대한 반응 (단위 : %)

구분	전면 주5일 수업제 대비 주당 수업 시수 감축 양						
	2시간 (31.3)	4시간 (25.6)	3시간 (16.8)	1시간 (16.1)	현행 유지 (10.3)		
초등학교	1,2학년	2시간 (28.2)	1시간(30.9) 유지(29.4)	2시간(18.9)	4시간(13.1)	3시간(7.6)	
		4시간 (23.3)	유 지(31.6)	1시간(30.3)	2시간(18.5)	4시간(12.2)	3시간(7.4)
	3,4학년	1시간 (18.2)	2시간(35.8)	3시간(20.4)	4시간(19.0)	1시간(17.6)	유 지(7.1)
		3시간 (16.9)	2시간(36.5)	3시간(19.1)	4시간(18.6)	1시간(17.4)	유 지(7.1)
5,6학년	유지 (13.5)	4시간(38.1)	2시간(29.5)	3시간(23.3)	1시간(6.1)	유 지(3.0)	
		4시간(38.0)	2시간(29.3)	3시간(23.1)	1시간(6.4)	유 지(3.2)	
중학교	'유지'에는 3학년, '4시간'에는 1학년이 높게 반응	2시간(31.7)	4시간(24.9)	1시간(20.1)	3시간(14.8)	유 지(8.4)	
고등학교		2시간(33.5)	4시간(27.7)	3시간(17.9)	1시간(12.1)	유 지(8.7)	

전체적 경향은 2시간(31.3%), 4시간(25.6%), 3시간(16.8%) 1시간(16.1%), 유지(10.3%)으로 2시간 감축이 가장 많았다. 학교급간 반응 차이로는 2시간 감축에 대해 초등학교 28.2%, 중학교 31.7%, 고등학교 33.5%로 반응하였다. 초등의 경우 2시간(28.2%), 4시간(23.3%),

1시간(18.2%), 3시간(16.9%), 현행 유지(13.5%)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은 현행 유지와 1시간 감축에 대한 반응이 가장 높았다.

주5일 수업제 실시시 토요일 수업분 4시간을 모두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1~2시간을 감축한다면, 나머지 2~3시간을 언제 수업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수업 시수 유지시 토요일 수업 시수 보전 방안

구분	응답 빈도와 백분율(%)				
	평일 분산	방학 감축	평일 분산과 방학 감축 병행	기타	합계
전 체	947 (48.5)	305 (15.6)	690 (35.4)	13(0.6)	1951 (100.1)
초등학교	154 (38.2)	68 (16.9)	178 (44.2)	5(1.0)	403 (100.3)
중학교	270 (48.3)	92 (16.5)	191 (34.2)	8(1.4)	559 (100.4)
고등학교	523 (52.9)	145 (14.7)	321 (32.5)	0(0.0)	989 (100.0)

전체 반응은 평일 분산 운영 48.5%, 평일 분산과 방학 감축 병행 35.4%로 반응하였다. 학교급별 반응으로 초등학교는 평일 분산과 방학 감축 병행 선호(44.2%), 중·고등학교는 평일 분산에 각각 48.3%, 52.9%, 평일 분산과 방학 감축 병행에 각각 34.2%, 32.5%로 반응하였다. 이는 월~금요일에 토요일에서 남는 2~3시간을 일부 분산하고 일부는 방학을 줄여 충당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 가장 높음을 말한다.

2) 주당 수업시수와 수업주수에 따른 연간 수업시수 계산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할 경우 학년별 연간 총 수업시수가 현행과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보려면, 교육과정 기준 수업주수의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 기준 수업주수 34, 35, 36주에 따라 주당 1시간, 2시간, 3시간 감축함에 따른 연간 수업시수의 총량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주당 1,2,3시간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 기준 34,35,36주의 연간, 주당 수업시수

감축분	주수	모형	12년간 연간 감축 시수	초						중		고	
				1-2학년		3-4학년		5-6학년		연간	주당	연간	주당
				연간	주당	연간	주당	연간	주당				
현행	34			850	25	986	29	1088	32	1156	34	1224	36
감축	주당 1	34 A	-408	816 (-34)	24	952 (-34)	28	1054 (-34)	31	1122 (-34)	33	1190 (-34)	35
		35 B	-38	840 (-10)		980 (-6)		1085 (-3)		1155 (-1)		1225 (+1)	
		36 C	+332	864 (+14)		1008 (+22)		1116 (+28)		1188 (+32)		1260 (+36)	
	주당 2	34 D	-816	782 (-68)	23	918 (-68)	27	1020 (-68)	30	1088 (-68)	32	1156 (-68)	34
		35 E	-458	805 (-45)		945 (-41)		1050 (-38)		1120 (-36)		1190 (-34)	
		36 F	-100	828 (-22)		972 (-14)		1080 (-8)		1152 (-4)		1224 (0)	
	주당 3	34 G	-1224	748 (-102)	22	884 (-102)	26	986 (-102)	29	1054 (-102)	31	1122 (-102)	33
		35 H	-878	770 (-80)		910 (-76)		1015 (-73)		1085 (-71)		1155 (-69)	
		36 I	-464	792 (-24)		936 (-50)		1044 (-44)		1116 (-40)		1188 (-36)	

주당 1시간 감축하고 34주를 유지할 경우 초등 1,2학년은 현행에 비해 연간 34시간이 수업시수가 감축된다. 주당 2시간을 감축하고 34주를 유지할 경우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연간 68시간의 수업시수가 감축된다.

주당 1~2시간(초등 1-2학년만 주당 1시간) 감축의 경우 교육과정 기준 수업주수 34,35,36주별 토요일 수업시수분의 처리와 구체적인 시수 조정 안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주당 1~2시간 감축시의 시수조정에 따른 수업일,수업주,수업시수의 구성

구분		학교급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학년	1, 2 학년별	3, 4 학년별	5, 6 학년별	7, 8, 9 학년별	10	11	12	
현행	연간 수업시수		850	986	1088	1156	1224			
	주당 수업시수		<25>	<29>	<32>	<34>	<36>			
주당 2시간감축 1, 2학년	34주	연간 수업 시수	816(-34)	918(-68)	1020(-68)	1088(-68)	1156(-68)			
		주당 수업 시수	24(-1)	27(-2)	30(-2)	32(-2)	34 (-2)	136(-8) 단위		
		현행 대비 주당 감축 시수	-1	-2	-2	-2	-2			
	1시간감축	35주	현행 토요일 시수의 잉여분	3	2	2	2	2		
			현행 대비 주중 추가 시수	1시간 추가 3일	1시간 추가 2일	1시간 추가 2일	1시간 추가 2일	1시간 추가 2일		
			연간 수업 시수	840(-10)	945(-41)	1050(-38)	1120(-36)	1190(-34)		
36주	연간 수업 시수	864(+14)	972(-14)	1080(-8)	1152(-4)	1224(0)				

IV.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편제 조정 방안

1. 교육과정 편제 개선 방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를 대비한 수업시수 조정에 있다. 주당 수업시수 감축은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여러 차례의 설문 조사 결과 최다수의 반응을 획득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각종 선행 연구와 협의회 등을 거쳐 본 연구진은 III장에서 주당 수업시수 2시간 감축(초등 1,2학년은 주당 1시간 감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업시수 감축에 대해서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어도 현행 수업시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상당수 학부모의 견해, 초등 저학년의 경우 외국의 수업시수에 비해 우리나라 수업시수가 적은 점,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력저하 문제, 그리고 주5일 수업제 교육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구축 문제 등을 우려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당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편제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교육과정 최종 문서에서는 연간 수업시수의 총량으로 기술되지만, 주당 수업시수를 기초로 한 편제 개선 방안은 교육과정 시안 개발에 있어 연간 수업시수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 고등학교 2,3학년 선택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영역별 단위수 및 전체 단위수의 총합만을 제시한다.

편제 개선 방안으로 3가지의 안과 이를 편성·운영할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는데, 제1안은 현행 수업 시수를 유지하되 현행 교육과정 편제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한 안이다. 제2안과 제3안은 현행 수업 시수를 축소하는 안으로, 편제 조정 방안의 초점은 주당 2시간(혹은 1시간)을 감축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감축하느냐의 세부적인 문제 해결이다. 제2안은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에서 축소한 안이며, 제3안은 교과 수업 시수는 최소로 감축하고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에서 주로 감축한 안이다. 각각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안: 현행 주당 시수 유지안

제1안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주당 수업 시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다. 1안은 교과 교육의 학교급간 시수를 보다 바람직하게 연계시키고 이공계 분야 기초 능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견지에서 교과 수업 시수를 증대시키고 재량활동 시간을 감축한 안이며, 편제표에 구현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제1안: 현행 주당 시수 유지안

구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1		12			
		1	2	3	4	5	6	7	8					9	10
교과: 공통 +3	국어	7	7	7	6	6	6	5	4	4	4	선택 과목 136단위			
	도덕	2	(바생) 2	1	1	1	1	1	(-1)	2	(+1)			1	
	사회			3	3	3	3	3	3	3	4			5 (국시2)	
	수학(+1)	4	4	4	4	4	4	4	4	4	4 (+1)			4	
	과학(+1)	3	(슬생) 3	3	3	3	3	3	4 (+1)	4	4			3	
	실과			·	·	2	2	기술·가정			3				
	체육		(즐생) 6	3	3	3	3	3	3	3	2			2	
	음악			2	2	2	2	2	2	1	1			1	
	미술			2	2	2	2	2	2	1	1			(-1)	1
	외국어(영어) (+1)		우리들은 1학년 (70시간)	1	1	2	2	3	4 (+1)	4	4			4	
재량활동(-3)		2	2	2	2	2	2	선택교과·재량활동			6	·			
								3 (-1)	3 (-1)	3 (-1)					
특별활동		1	1	1	2	2	2	2	2	2	2	8 단위			
주당 수업 시수 (현행 유지)		25	25	29	29	32	32	34	34	34	36	144 단위			

<표 15>에 제시한 현행 유지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도덕과 학교급간 시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7학년까지 주당 1시간씩을 하고 8~9학년에서 2시간씩을 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 2) 수학과와 학교급간 시수 연계성을 높이고 이공계 분야의 기초 능력 형성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9학년 수학과 시수를 1시간 증가시켰다.
- 3) 중학교 과학과 3년간 시수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의 기초 형성과 긴밀히 연결되는 과학 교육 강화를 위해 7학년 과학 시수를 1시간 증가시켰다.
- 4) 미술과의 학교급간 시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초등 3학년부터 7학년까지 주당 2시간씩을 하고 8학년 이후부터 주당 1시간씩을 하도록 7학년 및 9학년의 수업 시수를 조정하였다.
- 5) 세계화 시대에서 활동해야 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8학년 영어과 시수를 1시간 증가시켰다.
- 6)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결과 중등학교 수업 시수 감축 대상 부분 1순위로 창의적 재량활동 감축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음을 고려하여 중학교 재량활동에서 3시간을 감축하였다.

현행 주당 수업 시수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안된 제1안은 학교 교육의 중핵이 되는 수업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시도한 편제안이며, 또 초·중등학교 전체 수업 시수의 학년간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을 정련하기 위해 일부 교과와 학년별 시간 배당을 교체하여 교육과정 편제 전체의 정합성을 보다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은 주5일 수업제에서도 주6일 수업제에서 시행되던 수업시수를 그대로 감축 없이 운영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안이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 부담 증가 및 학습자의 학습 부담 증가 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일으킬 것이 예상되는 안이라고 할 것이다.

2) 제2안: 교과·재량·특활 중심의 감축안

제2안과 제3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수업시수를 감축하는 안이다. 감축의 폭은 초등 1~2학년에서 주당 1시간을 감축하고 3학년 이상에서 2시간을 감축하는 안이다. 제2안은 수업 시수를 감축하되 교과와 재량시간 그리고 특별활동 시간에서 부분적으로 감축하여 학년당 전체 이수 시간에서 1-2학년은 1시간씩, 3학년 이상에서는 2시간씩을 감축하는 안이다. 제 2안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제2안: 교과·재량·특활 중심의 감축안

구분	학교 학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7	8	9	10	11
교과 (-5) 공통 -1 선택 -4	국어(-3)	7	7	6(-1)	6	5(-1)	5(-1)	5	4	4	4	선택 과목 128단위 (-4) 8단위 감축
	도덕	7 (바생)		1	1	1	1	1(-1)	1(-1)	2(+1)	2(+1)	
	사회	2	2	3	3	3	3	3	3	4	5 (국사 2)	
	수학	4	4	4	4	4	4	4	4	3	4	
	과학(+1)	(슬생)		3	3	3	3	3	4	4	4(+1)	
	실과	3	3	·		2	2	기술·가정				
	체육	(즐생)		3	3	3	3	3	3	2	2	
	음악	6	6	2	2	2	2	2	1	1	1	
	미술	우리들은 1학년 (70시간)		2	2	2	2	2(+1)	1	1(-1)	1	
	외국어(영어) (+1)			1	1	2	2	3	4(+1)	4	4	
재량활동(-16~12) 공통 -16~12	1(-1)	1(-1)	1(-1)	1(-1)	1(-1)	1(-1)	(선택과목·재량활동) 2~3 (-2~1) 2~3 (-2~1) 2~3 (-2~1) 2~3 (-4~3)				-	
특별활동(-5~1) 공통 -5~1	1	1	1	1(-1)	2	2	1~2 (-1~0)	1~2 (-1~0)	1~2 (-1~0)	1~2 (-1~0)	8 단위	
재량/특별활동 소계	2	2	2	2	3	3	4	4	4	4	8 단위	
주당 수업시수 (초1-2: 각 -1, 초3~고3: 각 -2)	24(-1)	24(-1)	27(-2)	27(-2)	30(-2)	30(-2)	32(-2)	32(-2)	32(-2)	34(-2)	136(-8) 단위	

<표 16>에 제시한 제2안의 주요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현행 초등 교육과정의 전체 교과 시수에서 국어과 시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6%에 달하고 있으며 7차 개정시 초등 국어과 수업 시수는 6차 시수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향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되는 상황에서 초등 국어과 현행 시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1~4학년에 걸쳐 국어를 1일 2시간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초등 3학년과 5, 6학년에서 1시간씩을 감축하여 총 3시간을 감축하였다.
- 2) 도덕과 학교급간 시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초등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시기에 주당 1시간씩을 일관되게 하고 9학년 이후에는 주당 2시간씩을 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 3) 국가 경쟁력의 기초 형성과 매우 긴밀히 관계되는 과학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견지에서 과학과 시수를 1시간 증가시켰고, 10학년 시수를 증대시킴으로써 8학년 이후부터 일관된 과학 시수를 유지할 수 있게 조정하였다.
- 4) 10학년 기술·가정에서 진로교육 내용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있는 직업 소양 교육이 교과 교육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 조정하였다.
- 5)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 8학년 영어를 1시간을 증대시켰다.
- 6)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으로 인해 전체 수업 시수가 감축 조정될 경우 학생들의 기초 학력 및 국가 경쟁력에 보다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교과 수업 시수를 최소한으로 감

축하기 위해 재량활동 시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공통 기본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기간 전반에 걸쳐 재량활동 시수가 감축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결과 비교적 뚜렷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되 단위학교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자율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이 안에서는 중등학교가 선택 교과 편성·운영에 있어서 보다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시수 자체를 범위로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7) 각국의 교과외 교육 동향에 대한 연구에 기초해 볼 때 향후 특별활동 교육은 학생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 보장 및 자율성 확보라는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맥락에서 학교 외부의 사회교육 기관과의 협력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감축 조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를 영역 간 균형을 유지하여 배당하라는 현행 편성·운영 지침을 학생의 요구와 지역,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할 것이며, 중등의 경우에는 특별활동 편성·운영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시수를 범위로 제시하고 재량활동과의 통합 운영을 권장하는 지침을 보완해 줌으로써 단위학교에서 특별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지와 실질적 권한이 담보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제3안: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중심의 감축안

제3안은 제2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수업시수를 초등 1~2학년에서 주당 1시간을 감축하고 3학년 이상에서 2시간을 감축하는 안이다. 제3안은 초등 1~2학년에서 주당 1시간을 감축하고 3학년 이상에서 2시간을 감축하는 전체적 조정 방향은 일관되게 견지하되, 그 감축 분량에 있어서 교과에서 축소되는 부분을 2안에 비해 더 최소화하고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에서 대부분의 감축이 이루어지게 구안한 안이다. 제3안의 구체적 편제는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제3안: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중심의 감축안

구분		학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년간 교과 (-5) 공통 -1 선택 -4	국어(-1)	7	7	6(-1)	6	6	6	5	4	4	4	선택 과 목 128단위 (-4) 8단위 감축		
	도덕	(바생)		1	1	1	1	1(-1)	1(-1)	2(+1)	2(+1)			
	사회	2	2	3	3	3	3	3	3	4	5 (극사 2)			
	수학	4	4	4	4	4	4	4	4	3	4			
	과학	(슬생)		3	3	3	3	3	4	4	3			
	실과	3	3	.	.	2	2	기술·기정						
	체육	(즐생)		3	3	3	3	3	3	2	2			
	음악	6	6	2	2	2	2	2	1	1	1			
	미술	우리들은 1학년 (70시간)		2	2	2	2	2(+1)	1	1(-1)	1			
	외국어 (영어)			1	1	2	2	3	3	4	4			
재량활동(-14~10) 공통 -14~10		1(-1)	1(-1)	1(-1)	1(-1)	1(-1)	1(-1)	(선택과목·재량활동)				-		
특별활동(-7~3) 공통 -7~3		1	1	1	1(-1)	1(-1)	1(-1)	2~3 (-2~1)	3~4 (-1~0)	2~3 (-2~1)	3~4 (-3~2)	8단위		
재량/특별활동 소계		2	2	2	2	2	2	4	5	4	5	8 단위		
주당 수업시수 (초1-2: 각 -1, 초3~고3: 각 -2)		24(-1)	24(-1)	27(-2)	27(-2)	30(-2)	30(-2)	32(-2)	32(-2)	32(-2)	34(-2)	136(-8) 단위		

제2안과 구별되는 제3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제2안에서는 초등 국어 시수를 3개 학년에 걸쳐 3시간 감축한 것에 비해 3안에서는 초등 3학년에서 1시간만 감축되도록 함으로써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인해 전체적 시수를 감축 조정하더라도 국민공통 기본교과 시수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게 하였다.
- 2) 제2안에서는 초등학교 특활이 4학년에서 1시간만 감축되도록 하였으나 3안에서는 4~6학년에서 학년별로 1시간씩 감축 조정하였다. 각국의 교과외 교육 동향을 살펴볼 때 향후 특별활동 교육은 단위학교 및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에 기초하여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의 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개선을 통해 특별활동이 학생의 요구와 지역, 학교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중등에서는 제2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범위를 둔 시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제안

여기서 제시하는 추가 사항은 앞서 제시한 주당 수업시수 유지와 감축에 따른 편제표 3가지 안 중 어떤 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제안 사항이다.

1) 과목 시수를 학년군으로 통합 제시함으로써 학년당 이수시간의 학교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

단위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안으로서, 1~10학년까지 학년별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온 시간 배당 기준을 학년군별로 나누어 제시하는 방안이다. 통합교육 위주의 초등 1~2학년, 분과된 교과교육이 전개되는 초등 3~6학년, 중학교급인 7~9학년, 국민공통 기본교과 교육을 마무리하는 시기인 10학년의 4시기로 구분하여 보다 융통적인 시간배당을 국가교육과정 기준에 제시하고자 하는 데 핵심이 있다.

현행 수업 시수를 초등 1-2학년에서는 1시간, 3학년 이후에는 2시간씩 감축한 상태에서 학년군별로 시수를 배당하는 방식을 앞서의 제2안에 적용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개선 제2안에 적용한 학년군별 통합 시수 배당

구분	학교 학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년간 교과 (-5) 공통 -1 선택 -4	국어(-3)	14 (바생) 4 8 (슬생) 6 (즐생) 12 우리들은 1학년 (70시간)	22(-3)			13			4			선택 과목 128단위 (-4) 8단위 감축
	도덕		4			4(-1)			2(+1)			
	사회		12			10			5 (국사 2)			
	수학		16			11			4			
	과학(+1)		12			11			4(+1)			
	실과		-	-	4	기술·가정 8			3			
	체육		12			8			2			
	음악		8			4			1			
	미술		8			4			1			
	외국어 (영어)(+1)		6			11			4			
재량활동(-16~12) 공통 -16~12	2(-2)	4(-4)			6~9(-6~3)			2~3 (-4~3)			-	
특별활동(-5~1) 공통 -5~1	2	6(-1)			3~6(-3~0)			1~2 (-1~0)			8단위	
재량활동 특별활동 소계	4	10			12			4			8 단위	
주당 수업시수 (초1-2: 각 -1, 초3~고3: 각 -2)	24(-1)	24(-1)	27(-2)	27(-2)	30(-2)	30(-2)	32(-2)	32(-2)	32(-2)	34(-2)	136(-8) 단위	

이러한 제안이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10개 학년을 4개의 학년군별로 묶은 상황에서 교육과정 영역별 이수 시간을 학년이 아니라 학년군별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교육과정 영역별 시간 및 주당 수업시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이나 필요에 기초하여 보다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지역화의 실질적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 2) 이 방식에서는 학년별, 학기별 집중이수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한 학년 혹은 학기에 이수해야 할 교과 수를 축소시켜 줄 수 있는 근거를 국가교육과정 편제상에서부터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체감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3) 학년별, 학기별 집중이수제의 실천이 가능함으로써 주당 1시간이 배당된 교과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교과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 4) 외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주 수준 교육과정에서도 교과수업 시수를 학년군별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게 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Canada의 앨버타에서는 1~2학년, 3~6학년의 수업시수를 묶어 제시해 주고 있으며, 호주 퀸즈랜드에서도 1~3학년, 4~7학년, 8~10

학년 수업시수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http://inca.org.uk>). 일본에서도 3년간의 고교 수업시수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핀란드에서도 매학년을 구분하여 시간배당을 하지 않고 학년군별 시간배당을 적용하고 있다.

2) 교과목 시간수의 학교 재량 증감 방안

교과목별 시간수를 학교재량으로 증감하는 방안은 현행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유사하게 제시되어 활용된 바 있다.

<1. 기본 지침>

나.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 과정

(2) 일반계 고등 학교의 교과 편성

(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 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수 단위가 4 단위인 과목은 증배 운영만 가능하다.

<학교급별 지침>

㉠ 초등 학교

① 초등 학교의 교과 중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된 교과는 주당 평균 1 시간 이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필요에 따른 창의적 재량 활동에 증배,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축된 교과의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체험 활동 등으로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의 연합으로 구성되는 안이다. 첫 번째 조건은 현행 편제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영역별과 학년별로 배당되어 있는 수업 이수 시간의 성격을 ‘최소필수시수’의 개념에서 ‘표준(혹은 기준)시수’의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즉, 편제표에 교과별,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는 수업시수는 최소 수업 시수가 아니라 표준(기준)수업 시수이기 때문에 수업시수의 증감이 가능하다는 전제다. 두 번째 조건은 “주 3시간 이상 배당된 교과의 수업시수를 1시간 이상 감축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편제 조정안에 의하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의 범위는 크게 확장될 수 있다. 학교는 주 3시간 이상 되는 교육과정 영역의 시간 수를 적절히 감축한 후, 감축된 시간들을 학교의 재량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장단점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의 경우 감축된 시수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중학교에는 증감 운영의 항목 조차 없다. 고등학교는 비슷한 의미의 단위수 증배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축된 시간을 학교 재량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의 범위는 크게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 2)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즉, 편제에 명

시된 교과영역별 수업시수는 최소필수 개념이 아니고 표준시수 개념이므로 명시된 시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학년별 총 수업시수는 의무적이라고 할지라도 교과별 수업시수는 표준시수임으로 어느 정도의 증감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단위 학교는 학교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시수 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자율의 범위가 확대된다.

3) 단위 학교, 특히 중학교 수준의 단위 학교에서의 교사 운용의 문제가 용이해진다. 교과별 수업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를 운용하는 문제가 현재보다 훨씬 용이될 수 있다.

4) ‘재량활동’시간이 확대되어 학교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다. 7차 교육과정 체제에서의 ‘재량활동’시간은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위 학교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리하여 현장의 의견은 재량활동의 축소를 찬성하는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사회적 요구들 중에서는 교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산적해 있고, 이를 그나마 소화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재량활동 시간이다. 이 제안은 이러한 의미의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5) 그러나 이 제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교과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제안이 적용되는 경우 교과서는 표준시수를 기준으로 하여 편찬된다. 만약 어느 학교의 경우 어느 특정 과목을 표준시수보다 1시간 적게 운영할 경우 교과서의 양은 그만큼 많은 셈이 되고 이는 교사-학생 모두에게 교수와 학습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4시간을 기준으로 편찬된 교과서를 3시간 가르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교과서 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모두 가르쳐야 하는 ‘최소필수의 내용’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구현하는 하나의 좋은 자료라는 관을 설정하는 일이다. 교과서는 하나의 모범적인 자료일 뿐 절대적인 경전은 아니라는 관점을 확립하고 이를 실제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이 경우 교과서의 내용은 모두 가르쳐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또는 내용이나 성취기준)에 비추어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취사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취하게 되면 4시간으로 편찬된 교과서를 3시간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

V. 총론 개정 시안 관련 향후 논의 사항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의 기본 성격과 방향, 연간 수업일수 및 시수 조정 방안, 특히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제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향후 다양한 합의적 의사결정에 의해 차기 교육과

정 총론 개정 시안이 마련될 것이다. 여기서는 총론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을 현행 교육과정 총론의 구성 체제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II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 개정임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현행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즉 5개 항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또한 6개 항의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도 현행대로 유지하며, 문구 수정 정도에 국한하여 수정하게 될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이번 개정의 기본 방침과 방향을 반영하되 그 동안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수준별 교육과정에 관한 항(‘다’ 항)은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로 전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한다.
- 다.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한다.
-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2. 학교급별 교육 목표

7차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구안되었음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에서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현행을 유지하는 안과 보다 진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현행과 같이 전문과 하위 목표로 제시하면서 학

생 중심으로 진술하는 방식과 현행과 달리 학교급별 전문 정도의 교육 목표만으로 진술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가. 현행 교육 목표의 실태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1) 현행 교육 목표의 실태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개정 당시의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에 학교급별 교육 중점 및 교육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서, 학교급에 따른 목표의 전문에 제시되어 있는 학교급별 목표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 기초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습관 형성
- 중학교 : 기본 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 고등학교 :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시민 자질 함양

이상과 같은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학교급별로 설명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교육 목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바, 학교급별 교육 목표가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면,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하위 항목을 모두 제시하기보다는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전문 정도를 실는 것이 바람직하다든가, 교육과정 체제를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눌 경우 교육 목표도 그에 따라 이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당시 개정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체제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박순경, 이광우, 김경희 외, 2002).

또한 교육 목표가 교육법에 소재하건 교육과정에 소재하건 간에 학교급별 교육 목표가 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목표에 담긴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인 데다가 포괄하는 범위 또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나아가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 목표’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초등교육 일반 목표’로 칭하여 일반적 교육 목표로서 기준적 성격을 가지게 하고, 구체적인 ‘초등학교 교육 목표’는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서 각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설정,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구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의 각 항목이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각 항에 대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 목표 진술 방식에서는 학교급별 전문과 5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은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교사 중심)에서 진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하위 항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학생 중심)에서 진술되고 있다. 또한 5개의 하위 항목을 분석해 보면 초·중·고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동일하고 그 수준만을 달리하여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첫째 교육 목표를 현행처럼 학교급별로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10년간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2년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원화 체제에 맞게 기본과정과 선택과정기로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 둘째 현행의 교사와 학생 중심의 두 가지 진술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 중심 혹은 교사 중심으로 일원화해서 제시할 것인지와 관련된 교육 목표 진술 방식의 문제, 셋째 현행처럼 학교급에 따라 내용은 같고 수준만을 달리하여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과 수준을 달리하여 차별적으로 진술할 것인지와 관련된 교육 목표 진술 내용의 범위와 포괄성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2) 현행 교육 목표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이와 함께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초·중·고등학교 교육 목표의 우선 순위에 대한 2004년의 조사 결과, 학교급별 반응을 5단계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재산출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제7차 교육과정 목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 결과(전체 학교급)

교육 목표	학교급	1순위 점수	2순위 점수	3순위 점수	4순위 점수	5순위 점수	합계
심신의 균형있는 경험	초	135	120	84	18	6	363
	중	155	112	69	22	8	366
	고	305	64	42	16	4	423
문제 해결 능력 제고와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	초	190	124	69	10	3	396
	중	215	108	54	16	4	397
	고	60	128	93	64	50	323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	초	20	36	45	66	39	206
	중	85	104	78	32	15	314
	고	90	120	87	30	9	332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	초	5	20	39	84	38	186
	중	15	32	48	76	34	205
	고	10	32	36	80	37	195
기본 생활 습관과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초	150	104	63	20	13	186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이해와 민주생활 방식 습득	중	45	44	51	50	38	228
국가공동체의 형성·발전을 위한 노력과 세계시민 의식·태도 갖기	고	45	60	45	48	38	236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은 '문제해결 능력 제고와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으로 나타났

고, 다음으로 ‘심신의 균형있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가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비해 중학교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여 적극적 진로 탐색 경험’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로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성숙한 자아의식 갖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의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급별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는 측면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목표는 5개 항이 평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우선 순위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교육 목표 개선안 및 주요 특징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현행처럼 학교급별로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10년간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2년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원 체제에 맞게 기본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둘째, 교육 목표 구성 체제 측면에서 현행의 교사와 학생 중심의 두 가지 진술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 중심 혹은 교사 중심으로 일원화해서 제시할 것인가?

셋째, 현행처럼 학교급에 따라 내용은 같고 수준만을 달리하여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내용과 수준을 달리하여 차별적으로 진술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기초하여 현행 교육 목표를 반성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술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 목표 설정 및 진술은 교육과정 개선의 ‘수시·부분 개정’ 기본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과정의 ‘수시·부분’ 개정 방식은 말 그대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리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7차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보완한다는 것이다. 교육 목표에 대한 개선의 방향도 이러한 교육과정 개선의 기본 방향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7차의 교육 목표 구성 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 목표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와 외국의 교육 목표 진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선하는 것이 교육과정 개선의 기본 방향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다.

현행 7차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육 목표는, 우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으며,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는 전문과 5개 항의 세부 목표로 진술되어 있다. 또한 세부 목표의 5개 항은 추구하는 인간상의 각 항목에 대응하여 반영되어 있으며, 전문은 가르치는 사람(교사) 중심으로, 세부 목표는 배우는 사람(학생)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학교급에 따라 항목별로 내용은 동일하고 진술의 수준을 달리하여 진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별 교육 목표 구성 체제 및 진술 방식은 부분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전문과 세부 목표 구분, 학교급간 연계, 학생 중심의 목표 진술 등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별화되지 않은 학교급간 연계, 교사 중심과 학생 중심의 이원화된 목표 진술 방식 등 수정 혹은 보완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의 논의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2) 교육 목표는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정, 제시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교육 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향후 개선될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학교급별 교육 목표 진술 방식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0년간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2년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교육 목표도 이 두 과정으로 이원화해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분리 진술 방식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기본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사춘기적 발달 특성을 고려하며, 고등학교에서는 본격적인 진로 선택을 위한 기간으로 볼 때 현행과 같이 학교급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인 10년은 학생들의 급속한 발달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학생들의 심신 발달 상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단위 학교의 목표와 독특한 운영 특성을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단계가 1년과 2년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한 학교급 안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교육 목표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과정은 학생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이러한 진로 선택의 준비 과정으로서 보다 의미있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새로운 과정이라기보다는 공통 교육과 직업 교육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또한 학교급별 교육 목적이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되어 있는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학교급별 교육 목표 설정이 가장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교급에 따라 교육 목표를 진술하더라도 현행 이원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목표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진술되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1학년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2학년과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 선택 중심의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학교급별로 차별화 하여 목표를 진술하되, 현행처럼 내용은 동일하면서도 진술상의 용어만 다르게 진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에 따라 총괄적인 수준에서 목표를 제시해 주고 단위 학교에서 세부적인 목표를 진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행 교육 목표 구성 체제 및 진술 방식을 유지하되 학교급간 연계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교육 목표는 학생 중심으로 진술한다.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단위 시간이나 교과 수준의 교육 목표보다는 일반적이고, 교육의 목적이나 추구하는 방향, 즉 교육 이념보다는 좀 더 구체성을 갖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 목표는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일반 목표로서 교과별 목표를 설정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단위 학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실천에 있어 총체적인 방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가르치는 사람, 즉 교육자의 입장에서 진술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일정 기간 교육받은 후에 기대되는 성과를 중심으로 학습자 입장에서 진술될 수 있다. 이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사역형으로 혹은 학생의 입장에서 능동형으로 진술하는 것이며, 이는 각각 교사와 학생에 의존하여 교육 목표를 진술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 교육 목표 진술 방식은 교육과정을 어떤 입장에서 보다 관련지어 볼 것이냐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이 교사의 수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교사의 입장에서 사역형으로 진술될 수 있으며, 반대로 교육과정이 궁극적으로 학생의 교육적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본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능동형으로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중전의 교육 목표는 대체로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진술되었으며, 이는 교육자들에게도 익숙한 진술 방식이다. 이 경우의 교육 목표는 ‘…하도록 한다.’, ‘…에 중점을 둔다.’ ‘…개발하도록 한다.’, ‘…노력한다.’ 등의 사역형으로 진술된다. 이러한 진술 방식은 교육자들로 하여금 보다 명확한 교육의 방향, 혹은 궁극적인 지향점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 등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학교 교육의 목표, 혹은 주요 활동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실제 단위 학교의 수업 상황에서 수업 목표 혹은 성취 목표는 일정 시간의 수업 후에 기대되는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와 진전 정도를 중심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진술될 수 있다. 이 경우의 교육 목표는 ‘…할 수 있다.’, ‘…을 지닌다.’, ‘…익힌다.’, ‘…기른다.’ 등의 능동형으로 진술된다. 이러한 능동형 목표 진술은 학생들에게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성장 방향을 제시해 주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학습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 중심의 교육 목표 진술은 학생들의 학습내용과 경험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학생의 현

재 학습 정도에 대한 진단과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관점은 교육 목표는 ‘학생의 입장’에서 진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진술 방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는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가?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현행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각각 전문과 세부 목표(하위 항목)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은 교사 중심으로 세부 목표는 학생 중심으로 진술됨으로써 목표의 진술 방식이 이원화 되어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 전문에는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첫 번째 하위 목표에서는 “몸과 마음이 균형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전문은 가르치는 사람(교사)을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고, 세부 목표는 배우는 사람(학생)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역형 진술의 전문은 학생의 입장에서 능동형으로 진술될 필요가 있다. 즉 현행의 이원화된 목표 진술 방식을 일원화 하고 학생 중심의 목표로 진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 목표의 전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는 진술문은 “초등학교의 교육에서 학생은 자신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한다.”라고 재 진술될 수 있다.

4) 초·중학교의 교육 목표는 과정어(過程語)를 중심으로 진술하고,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성취어(成就語)를 중심으로 진술한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의 이념과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종전의 교육법에서 제시했던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 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일반 교육 목표를 별도의 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행 교육 목표의 진술 방식은 전문과 세부 목표가 각각 교사 중심과 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 진술 방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교육 목표는 성취어로 진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eters, 1996). 교육 목표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교육 목표를 성취어로 진술하는 것은 상식적 사안으로 당연시 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부 학교급의 교육 목표는 성취어보다는 과정어를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등과 같이 특정한 정도의 성취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과 같이 과정어를 중심으로 교육 목표가 진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육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성취어가 아닌 과정어로 진술되어 있는 것은 교육활동이 지나치게 목적을 의식하게 될 때, 교육은 그 자체가 목

적이라기보다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등산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등산하는 것이지 ‘반드시’ 건강을 증진하고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 등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떠한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정도의 성취를 보이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과정어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 학교급의 특성상 직업 선택과 고등교육의 기반을 설정해야 하는 만큼 가능하다면 교육 목표를 성취어로 진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육 목표의 경우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진다.”는 항목은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신장시킨다.” 라고 진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진다”와 “신장시킨다”는 어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진다”는 경험이나 생각을 소극적 측면에서 갖게 되는 과정 중심어라고 볼 수 있으며, “신장시킨다”는 경험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갖게 하는 성취 중심어라고 볼 수 있다.

교육 목표를 과정어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성취어로 진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어떤 학교급에서 과정어로 혹은 성취어로 진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중학교의 교육 목표는 과정어 중심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성취어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교육과정기간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에 속하고 학교급은 고등학교에 속하는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등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교급에 따라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체로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진술하되 반드시 초·중학교는 과정어로, 고등학교는 성취어로 진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 목표의 내용에 따라서는 중학교라고 하더라도 성취어로 진술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목표의 특성에 따라서는 과정어로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현행 교육 목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된 대로 현행 교육 목표의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제안될 수 있다. 하나는 현행과 같이 전문과 하위 목표로 제시하면서 학생 중심으로 진술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현행과 다르게 학교급별 전문 정도의 교육 목표만으로 진술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덧붙여 학교급에 따라 보다 차별성이 있게 각급 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 진술하는 것과 학교급의 특성에 따라 과정어와 성취어로 진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개선안은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전문+세부 목표’의 구성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술 방식만을 ‘학생 중심’으로 수정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이 개선안은 ‘전문’의 교사 중심 진술 방식을 학생 중심으로 진술하되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성취어를

포함시켜 수정하는 것이다. 즉 현행 교육 목표 ‘전문’의 교사 중심 진술 방식을 ‘학생 중심’의 진술 방식으로 수정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가진다’라는 과정어를 ‘신장시킨다’ 혹은 ‘기른다’의 형태로 성취어를 중심으로 목표 진술문을 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개선안은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전문+세부 목표’의 구성 체제를 바꾸고 목표 진술방식도 ‘전문’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목표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개선안은 현행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체제이지만, 현행의 5개 세부 목표는 각급 학교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방향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즉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를 각급 학교 ‘일반 목표’로 제시하여 일반적 교육 목표로서 기준적 성격을 가지게 하고, 구체적인 ‘각급 학교 교육 목표’는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서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설정,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전문’과 ‘세부 목표’의 진술 형식이 국가 수준에서는 ‘전문’만 제시하고, 단위 학교에서 ‘세부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이번 개정에서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앞서 제시한 4장의 논의와 본 연구진의 다른 발표(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제 개선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제 개선안에 대한 결정은 이번 공청회와 이후의 다양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4.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이번 개정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은 현행의 기본 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하여 수업일수 및 시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편제안이 마련된 이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진이 초안 수준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개선안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 지침 개선안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대해 4개 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편성·운영 지침의 근간은 유지하되,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수준별 수업 관련 지침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량활동이 학교의 독특한 필요나 실정에 따라 보다 융통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배당 기준에 배당된 학교급별 기준수업 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는 학년집중 운영이나 학기집중 운영을 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지침을

보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보다 증진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한다. 고교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지침에서는, 일반 선택에 대한 세부지침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선택과목에 배당된 단위전체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과목을 편성하고 학생개인의 선택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지침을 보완함으로써 차기 교육과정에서 11, 12학년 학생들의 선택권 및 단위학교의 선택교육과정 편성권이 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시·도교육청 편성·운영 지침 개선안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도 편성 지침에서 시·도가 각급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시 포함시켜야 할 세부사항 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각급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작성시 포함시켜야 할 세부사항들은 몇 가지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에서 각급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과 실천중심의 장학자료를 모두 제작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확대·강화하고, 지역청에서는 실천중심의 장학자료를 제작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여 주된 역할을 장학 및 지원에 두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지역교육청 편성·운영 지침 개선안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역교육청 편성 지침에서 장학자료 등 각종 지원이라는 선언적인 의미는 단위학교의 필요 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의미의 해석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의 역할 분담체계를 고려하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역할 체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국가 및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결정 기준은 이원화 체제로 명료화하고, 운영은 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청은 지원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선안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서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교 여건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대신에 학습부진아 지도를 좀 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이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한 수준별 학습지도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준의 재편 시기는 교사와 학생들이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아니면 학기 단위로 재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적극적인 희망과 교사의 판단에 따

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학기 중에도 수준 이동 기회를 융통성 있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심화학습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기준으로 적용되지 못하므로 학교의 재량권 부여와 교사의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심화학습의 내용은 교육과정 문서에서 삭제하고 교육과정 해설서나 교사용 지도성에 예시 형태로 제시하여 교사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단위 학교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는 상위 기관의 규제지향 지침에 의존하기 보다는 학교의 특성화를 육성할 수 있는 자율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일반적인 기준제시 보다는 교육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중심 교육과정 체제 정립과 여건 조성의 전제하에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VI. 맺는 말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시개정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개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개정의 성격에 따라,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초중등학교 전반과 모든 교과목 전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일면 전면 개정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 개정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교과 중에서도 수학과 영어 교과를 우선적으로 개정, 고시한다는 점에서 부분 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나 골격, 취지나 기본 방향 등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 개정이다.

현재 개정을 위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유형의 협의회와 심의회가 개최될 것이며, 그러한 협의의 결과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연구에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보고서가 완성되는 12월 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시안과 개발 보고서는 연말에 교육부에 제출될 것이며, 교육부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다음 해 전국 규모의 공청회나 심의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게 될 것이다. 총론과 각론의 시안에 대해서는 2006년 1년 동안 전국 단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2007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며, 수학과와 영어과는 이런 일정을 1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2007년 초에 고시된 후 3년 정도는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며, 2009년이나 10년경부터 새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2005), “주5일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연구: 교육부 및 KICE 연구담당자 협의회”, 비공식 문서, 협의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1996),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교육부 위탁연구과제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RC 2003-1.

_____ (2003),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개선방안 탐색, 2003년도 학술 세미나 자료집, 연구자료 ORM 2003-3.

_____ (2004),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교육과정 세미나, 연구자료 ORM 2004-29.

_____ (2004), 교육과정 개정관련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교육부 위탁 연구 과제 보고서.

_____ (2004), 과학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연구보고 RRC 2004-1-6

【토론 1】

주5일 수업제 대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방안에 대하여

박 혜 미(한교조, 신정여자중학교)

1.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1. 교육과정의 개정은 외부환경의 변화는 물론 그 자체의 결함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5차 교육과정 개정 이래 현행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이 주기적으로 개정되어온데 따른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다는 표현은 원인을 경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한 소이로 사료된다. 이는 때가 되었으니 새 옷을 맞추어야 한다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유행의 변화나 신체의 발달과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2.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 사항이 있다. 학교에서 담당하였던 토요일을 이제 학교 아닌 학부모나 사회가 담당하게 되므로 사회의 교육적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일은 예산이나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토요일 교육을 공교육이 사교육에 내준 결과가 되고 만다.
3. 교육과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여러 종류의 요인들 중 하나는 국가 교육과정은 대강화(요강화, 단순화)하고 단위학교나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의 범위는 확대하여 교육과정 결정의 지방화, 분권화, 자율화를 촉진하도록 하자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단위 학교나 교사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원평가제도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둘째,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불어 닥치는 국제화 세계화의 바람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교육과정 결정에 어떠한 형태이던 국가적 요구가 커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결정의 자율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성격과 방향

1. 교육과정의 개정을 전면적 개정이니 수시·부분개정이니 하고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어느 정도까지 개정해야 전면적인 개정이 되는 것인지, 시수나 교과 변경 등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개정을 반대하는 여론은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수요자의 불안으로 해석해야 하며, 수시·부분개정의 당위성을 옹변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사회의 변화와 보조를 맞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잦은 개정은(수시·부분개정)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다가 일거에 시행하는 전면개정은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2. 교과별 교육과정의 적정화는 개정내용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교과별 교육과정의 조정에 있어서 만이라도 교육외적인 요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지역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과 국가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언제나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화를 이루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III.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일수와 시수 조정방안

초등 1,2학년은 주당 1시간을 감축하고,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주당 2시간을 감축하는 것이 평가원안의 핵심이다.

초등 1,2학년만 1시간을 감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초등 저학년의 경우 그동안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시수가 적었던 것을 외국과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동안 수업시수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유치원교육의 활성화와 일반화에 따른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수업적응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인가?

IV.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편제 조정방안

1. 교육과정 편제의 개선 방안은 주5일제의 전면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5일 수업제 수업이 학력저하로 귀결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설문조사가 아닌 수업시수와 학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력저하가 이루어지는 만약의 경우에도 사회적 교육 인프라의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인지 수업시수의 조정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2. 교과목 시간수를 최저 시간제 개념에서 기준 시간제 개념으로 변경하여 증감하는 방안은 학교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교과별 수업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의 교사운용의 문제가 용이해진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재량활동시간 축소의 의견이 많은 현 시점에서는 재량활동시간의 긍정적 측면과 타당성은 무시된 채 재량활동 시간을 축소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V. 총론 개정시안 관련 향후 논의 사항

1. 그동안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육현장에서 적잖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수준별 교육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입시와 관련된 내신의 문제였다. 즉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였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해결책 없이 “수준별 수업”으로 용어만 바뀌었다.

2. 교육 목표 개선안은 주로 다음의 사항들에 관한 것이다.

- 1) 개정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 2) 교육목표를 학교 급별로 설정하느냐 혹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 중심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이원화 하느냐
- 3) 교육목표의 진술을 학생중심으로 하느냐 교사중심으로 하느냐
- 4) 목표의 진술에 과정어를 사용하느냐 성취어를 사용하느냐
- 5)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느냐
- 6) 공교육이 교과교육 중심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것인가, 재량·특별활동 중심의 교육에 역점을 둘 것인가 등등

유감스럽게도 위 모든 항목들은 형식논리에 관한 내용으로 특징지어진다. 한마디로 하드웨어 중심의 개선논의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교육 목표의 진술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바뀌고 이에 따라 교육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교육목표의 개선안은 이 같은 내용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정이 되어야 한다.

【토론 2】

차기 교육과정 총론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

김 은 형(영등포중, 교과연합 정책국장)

1.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문제

- 교육과정의 개정 방식과 절차에 관한 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 교육과정의 평가, 질 관리,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적 기관설립이 필요하다.
- 현장연구 중심, 현장 교사 50%이상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미 어떤 공론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부분, 수시개정과 수준별 이동 수업을 고착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정도 정하여 평가원에 연구 수탁을 했다. 평가원은 또 임의로 연구진을 구성했는데, 교사참여를 제한하며 밀실 개정을 하던 종전의 방법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교육법 23조에 제시된 교육과정개정관련 조항은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방기한 단순 법안이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은 법적 기구 만들어져야 하며, 현장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교원단체의 참여를 50%이상 보장해야 한다.

2. 교육과정 개정 성격과 일정의 문제

- 전면개정 후 수시 개정해야 한다.
- 시안 개발의 일정을 1-2년 늦춰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수준별 단계형 교육과정의 철저한 실패, 선택형 교육과정의 허구성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총론과 각론의 괴리, 내용의 과다, 학제의 불일치’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

더라도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현장의 검증은 통해 제대로 전면 개정을 한 뒤 수시개정 체제를 봐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평가원의 시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일정에서 올 12월을 시안 개발 시한으로 잡은 것은 졸속개정이라는 문제 제기에 부딪혀 있다. 수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총론과 각론 교육과정을 7-8개월 안에 만든다는 것은, 결국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교육과정에 머물게 만들고 있다.

내년에 공청회를 거친다고 하나, 이미 만들어진 시안을 굳히는 요식행위 이상이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영어 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국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위험한 사항들은 그 과정조차도 거치지 않고 12월에 고시를 한다니 교사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시안개발 일정을 1-2년 늦추고, 시안개발팀을 재구성하고 책임있는 교육주체들을 참여시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물의로 인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하며, 교사들의 외면으로 교육과정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3. 교육 목표의 문제

- 총론 목표의 사회상과 인간상에 대해 재논의 해야 한다.
- 총론 목표와 각론 목표의 심각한 괴리가 문제다.

시안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총론 목표의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상’과 ‘인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논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상으로 제시한 ‘세계화, 지식정보화, 문화의 다원성, 개방적 민족주의, 환경친화적 세계관, 과학적 논리와 예술적 감성에 기반한 문화’ 등의 개념은 매우 불분명하고 기능적인 용어들만을 나열하고 있다. 총론의 핵심 목표라 할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에서도, ‘개성 있는 사람, 창의성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의미가 애매하거나 의미가 중복되거나 층위가 다른 개념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며, 우리가 바라는 인간상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삶이 조화롭고, 자연과도 공생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각론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하위 목표는 인권교육, 평등교육, 평화교육, 민주교육, 문화예술교육, 창의성교육 등이 될 수 있다.

교육이 지향하는 사회상과 인간상은 교육 철학의 핵심 부분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가장 큰 문제는 총론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를 각론인 교과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총론에서 지향하는 철학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각

론인 교과교육과정에서 단순 지식과 기능만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육이 된다면 이는 아무 쓸모없는 교육과정이 되고 말 뿐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총론목표-교과목표-대단원목표-소단원 목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는 그럴싸한 교육의 목표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4.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와 적정화의 문제

-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는 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 교육 내용과 방법은 교사의 자율권(수업권과 평가권) 영역이다.
- 교육 내용의 적정화는 초중등 교육의 성격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출발이다.

교육의 효율성이나 수월성은 무한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 등이 적정할 때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교육과정 대강화는, 국가는 학년별 급별 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는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교는 수업권과 평가권을 갖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의 적정화와 질 높은 수업은 여기서 담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밖에 열리지 못한 대강화 논의에서는 대강화에 대한 상호 합의하지 못했다.

학습량을 증대시킨 7차 교육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적정화’ 논의가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초중등 교육의 목적이 갖는 보통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의 관점을 분명히 세우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은 입시경쟁을 위한 무한지식습득에 있지 않다. 또 대학을 위한 하부기관이어서도 안된다.

발달단계에 따른 적정한 교육내용은 학문을 하는 학자들의 탁상공론이나 이권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해본 교사들의 교육 검증에 의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교과 지식을 중시하는 절대 지식관과 근거 없는 학력저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내용적정화와 창조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5. 국민 공통 교육과정 10교과 문제

- 국민 공통교과목은 허구다.
- 초등은 통합교과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중등은 억지 통합된 기술, 가정, 사회, 역사, 지리 교과들을 독립시켜야 한다.

학제 불일치와 함께 국민공통 10교과 설정은 억지스러우며 허구적이다. 초등에서 10교과목 설정은 과도하다. 초등은 7차 교육과정으로 교과수와 학습량이 늘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초등 1, 2학년에 이어 3, 4학년까지 통합 교과목이 확대되어야 하며 국어, 수학, 영어 등은 감축되어야 하며 나머지 교과목은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이미 초등 3, 4학년에서 실과 교과를 5, 6학년으로 집중 이수함으로써 매년 10교과를 반복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길은 열려 있다.

중등에서는 진로와 연계하여 좀더 다양한 교과목을 배울 필요도 있다. 10교과목을 맞추기 위해 전혀 성격이 다른 교과목을 강제 통합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기계적으로 통합해 놓음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기술, 가정은 성격이 전혀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또, 사람의 존재를 시간적 공간적 존재로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인문 과목인 역사, 지리를 사회교과에 통합시켜 놓은 것은 미국식 교육과정의 폐해이며, 무지의 발상이다. 그러므로 억지 통합 교과는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또 국민 공통 10교과라는 이유로 필수에서 제외된 제 2외국어, 한문 등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교과가 늘어남으로 문제가 되는 과다 수업시수의 문제는 학년별 학기별 집중 이수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학년별, 학기별 이수 과목수는 줄이되, 다양한 교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로교육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6.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편성 문제

(1) 수업 일수의 문제

- 주5일 수업제는 학습(수업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수업 시수의 조정은 교육과정의 철학과 연계된 문제다.

주5일 수업제 실시의 목적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여가 시간을 즐기고, 여유를 갖도록 하는 선진국형 삶의 질 향상이 목표다. 교육에서의 주5일 수업제 역시 학생들과 교사들의 수업 시간 단축을 하여 여가를 갖고 자유롭고 다양한 삶을 즐기게 하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면서 ‘생산력 저하’ 운운하는 것이 기본 정신에 배치되는 것처럼, ‘학력저하’ 운운은 우스운 일이다. 단,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기 위해 교육계는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삼분하여 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의 평가원은 최소 수업 일을 190일로 제시하며, 방학일수를 5-6일 단축하고, 학교 행사일을 16일에서 20일로 늘렸는데 이는 매우 모순된 일이다. 학교 행사 일을 더 확대하지 않는다면, 방학을 감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최소 수업일수는 180-185일이 적당하다.

*180÷365-90(방학)-55(39주 일요일+법정공휴일)-39일(토)

(일본이나 스웨덴의 수업일은 각각 175일, 178일이며, 중국의 경우는 군사훈련이나 노동도 최소수업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다고 본 시안에서도 밝히고 있다.)

또 학교 행사 일을 ‘여유수업일’로 명칭 짓는 일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기고사를 포함한 학교 행사들, 예컨대 백일장이나 체육대회, 현장학습이나 수련회, 시업식과 종업식 등을 수업시수로 잡지 않는데서 오는 잘못된 발상이다. 평가를 하는 일은 수업시간의 연장이다. 획일적인 일제 고사 방식으로 시험을 치루는 것은 편의적인 데서 오는 것일 뿐 실제로 수업 중에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양한 교과수업과 연동된 학교 행사들이 대부분이며, 나머지 활동들도 아주 중요한 수업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초등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수업시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수업 사수의 문제

- 특별활동 시간 감축은 문제가 있다.
- 초등은 21-28시간, 중학교 30시간, 고등학교 32시간이 적당하다.
- 주당 1시간짜리 교과목은 사라져야 한다.

주5일 수업제를 위해 재량과 특활시간에서 2시간 감축안은 문제가 있다. 현재 재량시간의 경우 초등에서는 또다른 교과부담으로 다가오고, 중등에서도 교사 수업 시수 분담 역할 정도로만 활용되는 수준이므로 문제가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또 다른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 특별활동은 자치활동과 계발활동, 학교 행사활동을 모두 묶어 놓음으로써 6차에서 확실하게 확보되었던 학급활동(HR)이 학교 행사로 위축되어 학급 내 자치와 공동체 활동이 형식화 되고, 주1시간 배치로 활동이 제한되는 계발활동도 여전히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그러므로 재량시간을 줄이는 부분은 특별활동으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이며 다양한 개성을 살리고, 진로교육 등을 운운하면서 특별활동 시간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다. 방과 후 활동이나 학교 밖 인프라를 이용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학교교육이 교과목 수업 시간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평가원의 시안은 주5일 수업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주2시간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토요일 수업 1시간 이상이 평일로 이동해야 하므로 중학교의 경우 7교시 수업일이 하루 더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수업노동 단축을 통한 삶의 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발상이다. 전체적인 시간표를 손대지 않기 위한 편의적 발상으로 재량과 특활에서 2시간 감축하는 안은 그야말로 철학이 없는 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초등의 경우 4시간 이상 감축하여(국어, 영어, 수학에서 1시간 감축하고, 바른생활, 도

덕 통폐합, 실과 통합) 21-28시간(1-2학년 21시간, 3-4학년 25시간, 5-6학년 28시간)으로, 중학교의 경우 주30시간, 고등학교의 경우 32시간으로 감축하되 앞에서 언급한대로 학년별 집중 이수를 통해서나, 입시 교과목에서 수업 시간 감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주당 1시간짜리 수업은 사라져야 한다. 한 교사가 20개 반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최소 주당 2시간 이상 배치되는 것이 적합하며, 시간수의 조절이 부득이한 경우, 학년별 집중수업으로 해소할 수 있다. 예컨대 음악은 1학년에 2시간, 미술은 2학년에 2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시안에서는 과목시수를 학년 군으로 통합 제시하여 학년 당 이수시간의 학교 재량권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전학생이 오고 갈 경우 문제가 되며, 성적 기재 방식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학년 별로 숫자가 다를 때, 교사 수급에도 차질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야말로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7.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

- 수준별 이동수업은 수업의 방법으로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
- 수준을 나누면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은 위험하다.
- 교과서, 평가, 성적기재 분리는 학생등급화이며 평등교육 침해이다.
- 교과서, 평가, 성적기재 분리는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침해이다.

교육부는 이미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실패로 확인된, 7차 수준별(단계형)교육과정에 아직도 집착하여, 기존의 우열반 편성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수준을 나누어 이동하는 수업은 협동수업이나 체험수업, 토론 수업과 같이 교사나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업 방법론에 불과할 뿐, 국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교육개발원이 연구하여 밝힌 것처럼, 평준화 지역 학생성적이 학교를 성적으로 등급화한 경쟁 지역의 학생들 보다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적으로 우열을 가려 수준별로 이동수업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성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을 일반화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학생들의 정신적 인격적 갈등이나 피해는 교육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영어 수학 교과서를 3종으로 분리하여 수준별로 따로 개발하고, 평가를 수준별로 달리하며, 학생생활기록부에도 등급을 나누어 따로 기록하는 방법 등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교과서 분리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게 강제하게 될 것

이며, 평가를 달리하고 등급을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은 학생의 인권 침해,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적 성과보다는 학생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교사의 업무 과중, 학교 교육과정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그 보다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했듯이, 교육과정의 성실한 운영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시설의 미비, 교사의 1인당 지도 학생수 과다, 총론과 각론의 괴리, 학습량의 과다, 교과 내용의 부적절성, 학교급간의 연계성 부족, 평가의 부적절성,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 개편을 위한 제도 정비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이나, 영재의 경우 특별 개별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교육청 단위에서 별도의 방학 프로그램 등으로 투자 개발해야 한다.

【토론 3】

주5일 수업제 대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방안 검토

김 영 일(성동교육청 교육장)

1. 들어가는 말

오늘 발표자이신 허경철 박사님은 서론 부분에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면에서 전면 개정이 아닌 수시-부분 개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II장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성격과 방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III, IV장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내용인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일수와 시수 조정 방안 및 교육과정 편제 조정 방안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고, V장에서 총론 개정 시안 관련 향후 논의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발표자께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향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 고시되고 언제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발표자는 서론 부분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세 가지 관점 즉, 주기적 개정 기대에 덧붙여 현행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 개선, 주5일 수업제 실시 대비, 국가 사회적 요구의 종합적 검토 및 반영 등으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한다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오늘 논의의 핵심은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과 관련한 수업일수와 시수, 교육과정 편제 조정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 모색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발표자는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서 국가 사회적 요구의 종합적 검토 및 반영 차원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 사교육 심화와 학교교육의 부실화, 조기 유학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중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같은 교육 본질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발표자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문제시하고 그의 해결책을 수학과 과학의 수업 시수를 한 시간씩 증가시키는 데에서 찾고자 하는데, 이는 이공계 기피 현상과 수학·과학 수업 시수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 검토의 원칙

이번 개정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되는 부분만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 개정임을 밝히고 그 이유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의 기본 틀이 되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부분 개정에 찬성한다. 그러나 그 부분 개정이라는 기본 성격을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의 근본에서 추출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사회 집단의 이해에서 추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교육의 본질 추구 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침 및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 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철학, 취지 및 체제유지
- 나. 총론과 각론(교과별 교육과정)의 동시적 연구 개발
- 다. 교과별 교육과정(각론)의 적정화 구현
- 라. 지역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 마. 국가 사회적 요구의 반영

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개정의 기본 방침 및 방향에서 무엇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발표자도 언급하였듯이 ‘다. 교과별 교육과정(각론)의 적정화 구현’일 것이다. 총론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며, 각론에서 교과별 학습 내용의 개인적, 사회적 적합성 제고 뿐 아니라, 학습 내용의 양과 난이도 적정화는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논의되어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 국민공통교육과정 상에서 학년간, 학교 급간, 교과 간 내용 연계의 조정은 개정 작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교과별 교육과정(각론)은 교과서 집필자뿐만 아니라 전공 교사들도 교육과정을 보면 이해하고 교육 자료를 취사·선택 구성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번 교육과정 수시 개정의 성패는 이 부분의 귀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의 적합성 차원에서 수용하되, 첫째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은 내용에 한정하여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학습 부담과 교수 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범교과 학습은 가급적 관련 교과에서 수용, 지도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교과서 개발 지침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교과내용에 비해 중요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약화 내지 삭제하는 방안에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에 제시한 개정의 기본 방침 및 방향의 내용 중 총론과 각론의 동시개발 문제는 각론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총론이 개발되지 않고 어떻게 각론이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총론 지침의 대강화와 각론의 상세화는 필요한데, 다만, 지나친 총론의 대강화는 학교교육의 무방향을, 각론의 상세화는 학교 자율성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총론은 대강화하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위학교의 수요 및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각론 지침의 상세화도 교과별로 교육과정 적용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토론자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침 및 방향에 동의하면서 발표자가 제시한 다섯 가지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침 및 방향을 준거로 하여 III장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일수와 시수 조정 방안, IV장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편제 조정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I.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일수와 시수 조정 방안 검토

1. 연간 수업 일수 및 수업 주수의 조정

발표자는 주5일 수업제 대비 연간 수업 일수 및 수업 주수의 조정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개하고 있다.

발표자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연구」를 토대로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교육과정기준 수업 주수는 34주, 학교행사일은 20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자는 연간 수업일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 이유를 첫째, 주5일 수업제 월1회, 주2회 우선 시행학교, 전면 시행 연구학교의 경험적 자료, 둘째, 이미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수업 일수에 대한 고찰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의견을 같이 한다.

발표자는 종래의 학교행사일을 ‘여유수업일’로 재개념화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행사일수의 운영 방식 개선 방안과 교육과정 기준 수업 주수의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주 6일 수업에서는 연간 수업 일수가 220일이상이기 때문에 16일은 학교행사일로 의미를 가지고 주로 학교 행사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주 5일 수업제에서는 종래 학교교육활동으로 하던 행사의 일부는 학생들의 토요일 활동으로 대체되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행사일의 교육활동 개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학교행사 수업일과 교육과정 기준 주수에 의한 수업일을 인위적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연간 수업 일수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안에 교육과정 기준 주수가 34주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학교 행사일을 ‘여유 수업일’이라고 명명하기보다 ‘교육과정 자율 운영일’이라고 명명하고 지침에 운영 내용을 제시하면 학교에서 교육과정 기준 주수 내에 이루어지는 교육의 보완활동을 하는 일수로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연간 수업일 190일 하에서는 교육과정 기준 주수 34주 내에 정기고사 일수 산정은 지나친 수업일수 감축으로 학력저하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기준 주수(34주)와 교육과정 운영 주수(36주×5일=180일)를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그렇게 되면 고사 일수가 180일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고사 일수가 180일에 포함되면, 여유수업일(10일)에는 소풍, 수련회, 수학여행, 체육대회, 사생대회 등 최소의 정련된 행사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당 수업 시수 조정

발표자는 주당 수업 시수 조정과 관련하여, 주당 수업 시수 조정에서의 고려 사안, 외국의 연간 수업 시수 비교, 주5일 수업제 대비 현행 수업 시수 조정에 대한 의견, 전면 대비 주당 수업 시수 감축 양에 대한 반응, 주당 1, 2, 3시간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 기준 34, 35, 36주의 연간 주당 수업시수 제시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 주당 2시간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토론자는 2시간 감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행수업시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상당수 학부모의 견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외국의 수업 시수에 비해 우리나라 수업시수가 적은 점,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학력저하 문제, 주5일 수업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미흡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참고로 중·고등학교에서 현행 주당 수업 시수를 주5일 수업제 실시로 2시간 감축 운영시 주당 시간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주당수업시수

가. 고등학교

- 현행 주당 36시간 ⇒ 주5일 수업제 시행시 34(2시간 감축)시간 운영
- 주당34시간의 시간표 운영 :
 - 월 - 목(4일간) ⇒ 7교시 수업 = 28시간
 - 금 ⇒ 오전4교시 수업 및 오후 2교시 특별활동=6시간

나. 중학교

- 현행 주당 34시간 ⇒ 주5일 수업제 시행시 32(2시간 감축)시간 운영
- 주당32시간의 시간표 운영 :
 - 주중 2일간 ⇒ 7교시 수업 = 14시간
 - 주중 3일간 ⇒ 6교시 수업 = 18시간

IV.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편제 조정 방안 검토

교육과정 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안. 현행 주당 시수 유지안, 2안.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중심의 감축안, 3안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중심의 감축안’이 그것이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안, 2안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학과 과학과의 시수를 늘렸으며,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외국어 시수를 늘리고 있다. 3안은 수업시수를 감축한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것으로 교과보다는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중심으로 감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력 저하를 염려하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교과만을 학력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성, 창의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 능력에서 교과만큼 중요한 것이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토론자는 1안이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당 2시간을 감축하는 제2안과 제3안의 절충안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현재 학교현장에서 재량활동 설정의 원래의 취지를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 2시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재량활동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교 내 과원 교사의 수업시수 조절용으로 활용하거나 과목 상치 교사들이 몇 시간씩 나누어 지도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다.

향후, 특별활동 교육은 학생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 보장 및 자율성 확보라는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맥락에서 학교 외부의 사회교육 기관과의 협력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학생의 요구와 지역사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등의 경우에는 특별활동 편성·운영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시수를 범위로 제시하고 재량활동과 통합 운영을 권장하는 지침을 보완해 줌으로써 단위학교에서 특별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지와 실질적 권한이 담보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안에 찬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2안과 3안 편제에서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재량 활동과 특별활동 이수 시간을 범위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목 시수를 학년 군으로 통합 제시함으로써 학년당 이수 시간의 학교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은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 교과의 학년 간 조정과 동시에 교과 간 조정도 필요하기에 단위학교에서 편성하기에 많은 어려움과 혼선이 예상된다. 학교의 자율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교

과 간 이해관계가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주당 4시간을 기준으로 구성된 교과서를 주당 3시간 기준으로 교과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하려면 많은 분량의 교과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간략히 해야 한다. 주요교과 내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다음 단계(학년) 지도에 어려움이 초래된다. 특히 위계성과 연계성이 강한 수학과 과학의 내용의 감축은 기초학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교를 옮겨 전학 가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이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관한 것이다. 현행 국가 수준 교육과정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는 “국민공통교육기간에 제시된 시간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시간수이다.”와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총 이수단위는 144단위로 선택과목에 136단위, 특별활동에 8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로 되어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는 최소 이수 시간(단위)이므로 위에 제시한 이수 시간(단위)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최소 이수 시간으로, 고등학교는 총 이수 단위(204단위)를 표준으로만 제시하고 각 학교가 실정에 맞게 최고, 최저 이수 시간(단위)은 적절히 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재량권을 주었으면 한다. 고등학교 학생 졸업 최소 이수 단위는 192단위로 완화하여 1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교육활동을 학교에 따라 별도로 하는 직업교육과정, 대안학교 위탁학생, 전문체육운동학생 등은 감축 단위를 적용하고 영재학생, AP과정(Advanced Placement Program), 희망에 따라 특정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최대 12단위까지 증배 이수하여 총 216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허경철 박사님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원고를 발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발표자의 원고가 너무나 광범하고 전반적으로 언급되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 토론 원고를 정리해야 할지 다소 부담스러웠다. 이것저것 비판하다 보면 실제 토론되어야 할 핵심과는 거리가 먼 토론을 위한 토론 원고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침과 방향에 동의하면서, 제Ⅲ장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조정 방안과, 제Ⅳ장 주5일 수업제 대비 편제 조정 방안을 학교 현장의 현실도 고려하여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Ⅴ장 총론 개정 시안 관련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서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학교급별 교육목표에서 초등학교 교육목표를 초등교육 일반 목표로 칭한다는 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교육목표 진술과 관련하여, 교육목표는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 볼 때 현행과 같이 학교급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단위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에 따라 총괄적으로 제시해 주되, 시·도교육청에서 적정하게 상세화하고, 단위학교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진술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한다. 그리고 교육목표 진술은 학생 중심으로 진술하기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으로,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학생중심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발표자는 초·중학교 교육목표는 과정어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성취어 중심으로 진술한다고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육목표의 지향 내지 성격, 내용에 따라 과정어, 성취어로 표현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며, 학교급별로 과정어, 성취어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이며 교육과정의 내실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작은 성취가 모여 커다란 성취가 이루어지며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성취라는 입장에서 모두 성취어 중심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문제는 이미 기본 방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총론은 대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으로 이관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 분명하게 국가 수준과 시·도교육청 수준을 구별하여 제시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겹치는 부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간 역할 분담 및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개발 및 시행은 개정된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에의 접맥 가능성을 매우 높이게 될 것이다.

【토론 4】

가치 있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송 환 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언론정보출판위원장)

‘주40시간 근무’라는 사회 환경변화에 교육 또한 적응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초 자료와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이만한 틀을 마련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 위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사회 교육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준비는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 받아 온 토요일을 이제 학교가 아니라 사회가 교육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회 교육적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일이다. 사실 이러한 준비 없이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면 우리의 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총량이나 그 질은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위원께서 이미 지적한 바대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치밀한 교육과정설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월1회 주5일 수업제 수업 실시만으로도 많은 학부모들은 큰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 6월에 학부모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요일휴업일에 대하여 ⇒ 찬성 (54%) / 반대 (43%)

학교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대하여 ⇒ 있음 (48%) / 없음 (33%) / 모름 (15%)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불만족 (52%) / 보통 (43%) / 만족 (3%)

프로그램의 종류 ⇒ 학습관련 (34%) / 특기적성 (32%)

토요일휴업일 보고서 제출 여부 ⇒ 제출 (46%) / 미제출 (40%) / 모름 (9%)

보고서 제출의 효율성 ⇒ 형식적 (51%) / 불필요 (25%) / 필요 (6%)

맞벌이 가정의 경우 ⇒ 혼자 지냄 (50%) / 학원 (12%) / 친척 (12%) / 이웃집 (12%)

토요휴업일로 인한 어려움 ⇒ 게임이나 TV중독 우려 (36%)

체험학습 보고서 부담 (24%)

안전사고 (16%)

사교육비 증가 (15%)

토요휴업일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점 ⇒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확충 (33%)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32%)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20%)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11%)

아직 시작 초기라고는 하지만, 대체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5일 수업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양극화 현상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주5일 수업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반시설의 구축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사회문화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많은 학부모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예산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대로 질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사안에서조차 교원의 정원관리가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관리되므로 최소한의 연차적 보충 목표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

7차 교육과정이 설정한 미래 사회관이나 교육적 인간상은 물론 훌륭한 것이고 추구해서 마땅합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연구에서도 그 기초를 유지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역시 현실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름뿐인 자율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그리고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나아가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대 등은 어느 하나 나무랄 것이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우선 생각하지 않았거나 실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2009년이나 10년경부터 적용을 목표로 연구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여건들을 개선해 가는 일로써 해

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현실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당연히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걱정스런 상황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규제와 자율

어느 사회집단이나 그 중에는 헌신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의무만을 수동적으로 감당하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교원이라는 집단에서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율에 있어서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수많은 학부모들이 교원평가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섬세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세세한 사항까지 규율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사들의 창의성과 개성 그리고 의욕을 사장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너무나 허술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아무런 평가와 점검이 불가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법적 규율이라는 체계의 일반적인 속성이랄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국가의 요구와 문화-경제-사회적 가치 또한 끊임없이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할 터인데 그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열성적인 교사들의 다양한 새로운 시도는 최소한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제도적 여러 기준의 설정

1) 연간 수업일수와 방학 일수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연간 수업일 190일 이상, 여유수업일 20일 포함’이라는 개선안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일수에 대해서는 교사는 물론 학부모조차 현행 일수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만 특별시/광역시(78%)에서 중소도시(75%)와 읍면(74%)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점과 초등학교(22.1% : 29.5%) 중학교(17.6% : 27.1%) 고등학교(18.1% : 29.7%)를 막론하고 교사보다 학부모들이 훨씬 더 방학의 감축을 원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양극화와 기반시설의

미비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계층이 좀 더 긴 방학이 필요할 경우에 ‘체험학습신청’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행사일 수’ 개선 방향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 문화적 다양한 요구와 단위학교 자체의 특성과 형편을 교육활동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일수의 확대까지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유수업일’이라는 용어는 어쩐지 느슨한 느낌이 들어서 ‘재량수업일’ 혹은 ‘재량활동일’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3) 주당 수업시수와 수업주수

매우 실질적인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주당 2시간 감축에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수업주수는 35주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4) 교육과정 편재 개선 방안

- ① ‘이공계분야의 기초능력 향상을 위하여’ 또는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혹은 ‘외국어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등등의 이유로 특정 과목의 수업시수를 늘이고 줄이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교재와 교육활동의 질 그리고 사회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틀의 흐름을 중시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② 1, 2, 3안 모두 7~10 학년 간의 ‘도덕’ 교과 시간이 제1안 (1-2-2-1), 제2안 (1-1-2-2), 제3안 (1-1-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실천과 체질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2-2-1-1 체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과목이 초등과정에서 모두 1시간이지만 이는 담임선생님 한 분에 의한 수업이라는 특성으로 중등과정과는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 ③ 직업소양 혹은 진로교육은 늦어도 9학년(중3)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의무교육의 최종학년이기도 한데다, 진학문제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대학진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중요성이 확인될 대학입학전형에서의 학과 내신 성적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진학하려는 대학과 과에 따라 중요시 하는 과목이 서로 다른 관계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학습형태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 ④ 전체적으로 제3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학년에서의 ‘사회’와 ‘과학’의 2시간

이라는 수업시수 차이 문제는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제안

과목시수를 학년군으로 통합 제시하는 안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 ① 우선 1~2학년, 3~6학년, 7~9학년, 10학년이라는 4시기 형식은 다른 기준들과의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② 2010년부터 교사에게 ‘교과서 선택권’이 주어지고 ‘교사별 평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게다가 과목에 따라 ‘수준별 학습’까지 이뤄지는데 ‘과목별 수업시수’라는 기준마저 유동적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할 것이 분명한 거주 이전으로 인한 전학-전입 시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 ③ 극히 일부의 일이겠습니까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방식을 ‘학습효과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학교운영비용의 절감’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편법적으로 활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 ④ 교과목 시간수의 학교재량 증감 방안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교과서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모두 가르쳐야 하는 ‘최소필수의 내용’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구현하는 하나의 좋은 자료”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4시간으로 편찬된 교과서를 3시간으로 가르치는 것’까지는 허용되어도 ‘4시간 분량으로 편찬된 교과서를 3시간 분량만큼만 가르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전학 평가 입시 등등의 다른 여러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5. 향후 논의 사항

1) 수준별 교육과정과 이동 수업의 활성화

“수준의 재편 시기는 교사와 학생들이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아니면 학기 단위로 재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적극적인 희망과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학기 중에도 수준 이동 기회를 융통성 있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심화학습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기준으로 적용되지 못하므로 학교의 재량권 부여와 교사의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큰 틀을 제시한 것이겠지만 이 문제는 대학수학능력고사는 물론 내신 성적과 관련하여 세심한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교실과 교사는 물론 교재의 확보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정서에 대한 배려 등 여러 가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기

초학력진단평가를 통해서 그 효율성과 영향력 그리고 파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2) 교육목표의 설정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정-제시하는 것이 ‘의미 있는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학생중심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교육의 근본목적이 결국은 ‘학생의 성장’에 있음을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취어’보다는 ‘과정어’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론과 각론의 시안에 대해 2006년 1년 동안 전국 단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2007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라는 말이 또 한 번의 줄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저 일년이라는 시간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심하고 끊임없는 점검으로 그야말로 실용적이며 실천 가능한 가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수학과와 영어과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보다 1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5.-1)에서 이미 말씀드린 이유들로 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2009년이나 10년경부터 새 교육과정을 초등학교에서부터 혼란 없이 제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사 시행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분야별 연구와 아울러 틀 전체를 아우르는 합동연구점검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5】

「주5일 수업제 대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

김 경 자(이화여대 초등교육과)

I. 들어가며

이 연구는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인한 학교 수업 일수와 시수 조정 방안, 교육과정 편제 조정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로 결정된 후 실행될 때에 이에 영향을 받는 교육청,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된다. 이 연구의 연구진들은 대규모 설문조사, 공청회,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나온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청중들에게 발표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쟁점에 몇 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따라서 토론에서 논박을 벌일 여지가 많지 않다. 그리고 교육과정 쟁점의 경우, 정답보다는 관점에 따라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수업 일수와 시수 조정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한 바가 많지 않아서 연구진이 제시한 안들 중에 왜 특정 안을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일관되면서도 통합된 의견 개진이 어렵다. 따라서 이 토론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토론자의 교육과정 지식에 기초한 직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 둔다.

II.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 일수와 시수 조정 방안

주5일 수업제는 교육과정 편제상의 수업시수의 변동을 요청한다. 초·중등 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주5일 수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5일 수업제는 현행 수업시수를 조정하지 않는 한, 일일 수업시수가 현행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일일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감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 또한 수업시수의 조정을 ‘감축’ 쪽으로 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방학 일수는 구성원 모두 현행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방안 중,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간 수업 일을 현행 대비 주5일 수업제를 월 2회 실시할 경우, 연간 수업 일은 205일(187일+18여유수업일)로, 전면 실시할 경우, 190일(170일+20여유수업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현행 220일(204일+16학교행사일)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구진이 제시한 안은 방학을 감축하지 않으면서 수업시수 조정을 한 것으로 ‘잘’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기본 수업주수는 어떻게 조정이 되던 큰 문제를 야기할 것 같지 않다. 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 1, 2학기 수업 주수 불균형 문제를 생각한다면 짝수 주수로, 현행과 같이 34주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일수와 시수조정 그리고 기본 수업주수 방안은 다른 나라의 예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리고 교사들의 요구(수업일수는 줄이면서 방학일수는 감축하지 않는)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이 안을 확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II.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편제 조정 방안

1. 교육과정 편제 개선 방안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하여 수업일수를 줄이고 시수를 감축하면서도 방학을 줄이지 않는다면,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줄어든 시수만큼 교육과정 편제 상에서 시수 조정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 시수만 피해(?) 받지 않는다면, 수업일수와 시수 조정, 편제 조정 모두 잘 된 것으로 수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1안인 현행 주당 시수 유지안, 제2안인 교과·재량·특활 중심의 감축안, 제3안인 재량·특활 중심의 감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안은 현행 시수는 그대로 두면서, 재량활동에서 3시간을 뺀 후, 초·중등학교 전체 수업 시수의 학년 간 연계성이 미흡한 일부 교과에 학년별로 시간을 배당한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수업일수와 시수가 현행대로인 것을 불만스러워 할 것이다. 평일 수업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제2안은 현행 시수에서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안이다. 이때 어느 교과에서든 시수를 줄여야 한다. 국어에서 3시간을 감축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서 부분적으로 시수를 빼고, 과학, 미술, 영어에 1시간씩을 더 주는 안이다. 초등학교 국어과는 담임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국어과 교사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줄어드는 시

수만권의 교육내용 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는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도덕과 시수를 9, 10 학년에서 늘리는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도덕과는 전 교과를 통해서 가르쳐 질 수 있는 교과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 늘어 놓은 시수나 내용은 재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수학, 과학, 영어의 시수를 6학년 또는 7학년부터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수학이 9학년에서 3시간인데 4시간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다. 미술은 중학교 1학년에 2시간이 되는 것이 현행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과 수업에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지향하는 바가 통합되는 방식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분명 타당한 요구가 있어 교육과정의 일부가 된 것이 라면 더욱 그러하다.

제3안은 대부분의 시수를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서 감축하는 것이다. 2안과 달리 국어과에서 1시간만 감축하고, 도덕을 2시간 늘리고, 감축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간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서 가져온다. 이때 시수 감축 교과가 거의 없어서 교과 담당 교사들의 불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2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덕 시간 증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교과 수업에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지향하는 바가 통합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 해의 연구를 거쳐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교육과정의 일부가 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교과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교육과정의 새로운 영역을 수립하여 성취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교과활동을 통해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1안은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일수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 수업시수가 늘어나 수업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토론자는 2안을 3안보다 ‘작은’ 변화라 생각하여 2안을 지지한다. 3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안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과목 시수를 학년군으로 통합 제시하는 안과 교과목 시간수를 학교재량으로 증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안이라 생각되지만 파생될 가능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목 시수를 학년군으로 제시할 경우, 상당 기간의 시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 학기별 집중 이수 제는 교실 배정, 수업시간표 편성, 예산 편성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 시간수의 학교 재량 증감 방안은 과목 시수를 학년군으로 통합 제시하는 것보다는 실행이 용이할 것 같다. 학교는 조건이 되면 증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7차에서는 시수 감축의 재량을 주었는데, 수시 개정에서는 증가도 가능한 것인가? 대입이 가까운

학년으로 갈수록 그 시간의 용도가 입시 위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시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시범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IV. 교육과정 개정과 시안 관련 향후 논의 사항

주5일 수업제를 학교 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 편제를 조정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시수 감축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찬성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담당 교과 시수 축소는 수용키 어려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제나 교사의 입장이나, 교과의 입장, 혹은 국가나 사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교육과정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학생에게 최선인가라는 사고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제를 위한 시수 조정은 학생의 성장과 학습에의 성공을 보장하는가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성장과 학습에의 성공을 보장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인간상, 목표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인간상, 학교급 별 목표는 의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잘’ 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의미적으로 옳은 것이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도 향후 교육과정의 계획, 실행, 평가를 ‘최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공감을 얻으면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시 개정 체제에서도 목표에 대한 연구는 의미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교사 중심’, ‘학생 중심’의 논의와 ‘과정어 중심’과 ‘성취어 중심’ 논의는 또 다른 논의와 연구를 요청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교사가 학생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제시할 것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지적인 대로 목표 진술에서는 혼재되어 있고, 교육 내용체계로 가면 학생이 알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제시된다. 교사가,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를 할 시간이 없다면, 학생이 알아야 할 교육 내용 수준을 알고 가르치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학생이 알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제시된다면, 해설서(물론 명칭 변경이 필요하겠지만)는 학생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알아야 할 교과의 구조, 핵심 개념,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등을 포함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과정어 중심’과 ‘성취어 중심’의 논의에서는, 목표는 우리가 성취하고자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때, 목표는 그 의미대로 ‘성취어 중심’으로 진술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취어라고 해서 Bloom의 행동주의적 용어만을 포함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근 Wiggins와 McTighe(2005)는 학습에 있어서 피상적인 지식의 습득을 지양하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이르도록 교육과정을 구조화하자고 한다. 이들은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를 위한 목표가 다른 일반적인 목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들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주제나 교과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지식과 기능을 세련되고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식과 기능은 이해를 위한 요소로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해의 문제는 여기에 더하여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지식과 그 심층에 있는 원리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원리와 일반화, 이론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지식과 기능을 새롭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Wiggins와 McTighe는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을 여섯 가지 성취어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을 함께 성취어로 나타낼 수 있는 용어들을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주5일 수업제는 단순히 시수 감축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과정 편제의 조정을 요청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 및 교육목표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수시 개정은 분명 부분 개정이지만, 여전히 전체 개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쪽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교육과정 체제 속의 요소요소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따져보는 일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듯하다. 이 연구도 그러한 체제적인 면에 유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과정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진의 고뇌와 수고에 큰 감사를 드린다.

【토론 6】

교육과정 개정 방향 · 주요내용 연구결과 검토 및 제안

김 만 곤(용인 성북초등학교 교장)

1. 검토의 관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년 간 제7차 교육과정의 수시부분개정을 위해 의욕에 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내용 역시 그동안 연구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표·협의된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수시부분개정체제에 의해 수정·보완되는 차기 교육과정의 분명한 윤곽을 그려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연구진에서는 그만큼 조심스러운 입장과 접근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도 편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 이 연구의 기간이 만료될 단계이므로 언제 시안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그 윤곽을 드러내거나 복수 이상의 안 속에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현장의 자율성 확대와 연계하여 토론자가 그동안 주장해온 교육과정 기준 중 지침의 대강화와 각론의 상세화에 대해서는 이 공청회에 제출된 원고에서 상당히 비중 높게 다루고 있는 점 등이다. 토론자는 연구진의 이처럼 신중한 접근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과정 발전의 도정을 감안하면서 보다 ‘멋있고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 기준(안)’을 만들겠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접근방법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으로 ‘교육과정 기준 개정체제에 대한 접근방법’,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 일수 및 교육과정기준의 편제에 대한 접근방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의 자율 재량권 확대와 책무성 강화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II. 교육과정기준 개정체제에 대하여

발표 내용을 보면 총론 개정의 기본성격이나 기본방향 설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수시·부분 개정체제에 따르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연구방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의 일시·전면 개정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호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육과정 수시부분개정체제는 이미 10년 전에 제기된 문제로,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개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기초학력 교육 강화, 교과서 정책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제안하면서 특히 교과서 제도 개선 항목에서 ‘종래의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 관행을 없애고,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지식·정보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언급하였다⁶⁾.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 관행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6차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이 대체로 교육외적 요인에 의해 전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폐해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데 따른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문교부에서는 이미 1979년 3월 1일, 그동안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이 ‘부령’으로 제정되었던 것을 ‘고시’로 바꾸어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부분 개선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나⁷⁾, 실제로는 그 취지가 구현되지 못한 결과였을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또한, 문민정부 때 만들어진 제7차 교육과정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오면서 이와 함께 수시개정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이 논리에 따라 개정에 대한 요구를 자제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안정적인 교육과정 정책에 따라 차기 교육과정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혁신위원회 또한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제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논리에 따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여 조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조급함은,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수시·부분 개정체제가 어떤 것인지 그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다가 초·중등교육정책의 핵심정책으로서의 교육과정 정책이 다시 외적요인에 의해 흔들리게 되거나 않을지, 그리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이 안정적인 개선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 (1995. 5. 31), (新), 49~50 (), 64~66 . (2)
7) (1998. 11. 28), (), 49, 72 .

우리나라는 현재 온갖 교육정책에 대하여 온 국민이 나서서 토론하는 현상이 짙어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문제를 교육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살려 토론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교육과정 정책에 대해서만은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 정부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제시된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정책은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었다.

-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개정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 연구는 일시·전면 개정체제가 아닌가? 수시·부분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한가?
- 과연 종전의 일시·전면개정에 따르는 정책적 부담이나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예상하고 연구한 것인가?
- 총론과 함께 각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전 교과에 대하여 부분수정이 되든 전면개정이 되든 개정을 기정 사실화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교과가 개정시안 개발을 당연한 것으로 하여 연구된 것은 아닌가?
- 모처럼 마련된 수시부분수정의 기회에 ‘처음의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전면개정의 형태를 취할 만큼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전체적 검토 및 개정시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가? 이러한 형태의 개정이라면, 종래의 일시적·주기적·전면적 개정과 어떤 점이 다르며, 교육과정 수시부분개정의 취지가 살아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점인가?
-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와 정책 발표(2002 홍후조, 현정부의 대선공약사항 및 2003 교육부 정책, 2004 박순경 외 등)의 결과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가? 박순경 외(2004)의 경우 대부분 모든 교과를 일시에 다 개정하는 방식보다는 개정이 필요한 교과나 교과군에 대하여 그 때 그 때 개정하는 부분개정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고 했음에도 국민공통기본교과 전체를 일시전면개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유가 있는가?
- 수시·부분 개정체제라고 한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그러한 예측은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은 종전의 교육과정 개정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수학과 영어 교육과정이 먼저 개정되는 것이 수시개정체제의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토론자는 위와 같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선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교육과정 수시부분개정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현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총론의 지침 중에서 어느 부분을 삭제, 혹은 보완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조사결과는 예를 들어 시급한 것, 개정이 쉬운 것 등

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

- 각론 또한 일시전면개정체제에 따라 전체적으로 개정연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연구진에서 우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교과를 선정하거나 영어, 수학처럼 나머지 교과목에 대해서도 정부의 확실한 구상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 이러한 작업에 따라 연차별 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 이러한 계획은 교육부의 편수조직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연구진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항상적,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이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다.

연구진의 교육과정 개정체제에 관한 접근방법은 한마디로 일시·전면 개정체제를 채택하면서도 굳이 ‘이것은 수시·부분 수정체제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전면개정체제’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Ⅲ.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일수 조정에 대하여

이웃나라가 주5일 수업제에 실패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도, 우리는 완전한 주5일 수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가지 분명히 적시되어야 할 사실은 아직 주5일 수업으로 인한 학력저하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는 앞으로 충분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항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늦게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고 그것도 월 1회, 월 2회를 거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충분한 연구 시간을 확보하고도 교육과정기준의 조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지 못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결과에 대하여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 주5일 수업에 대한 조사가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져 몇 시간을 줄이느냐만 조사되어 있다.
- 연간 수업일수 설정, 현행 행사일 수의 운영방식, 교육과정 기준 수업주수의 조정, 주당 수업시수, 주당 수업주수와 수업주수에 따른 연간 수업시수 계산 등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한다면, 이제는 현장에 맡겨도 좋을 사항, 혹은 이미 현장에서 잘 연구, 실천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시 중앙에서 걱정함으로써 오히려 자율재량권이 축소 조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5일 학교수업’은 기본적으로 ‘올라도 그냥 두자’거나 ‘조금 덜 가르치지’는 것이 아

나라, ‘주5일만 가르쳐도 주6일 수업의 효과가 있다’ ‘충분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수업 시간 등 외형적, 양적인 비교가 아니라 질적인 비교로써 판단 가능한 제도이다. 즉, 수업이란 기본적으로 잘 모르면 더 가르치고, 조금 덜 가르쳐도 제대로 배워나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양을 조절해야 한다⁸⁾. 교사들은 주6일에 가르치던 것을 주5일에 가르치라고 하면 더 열심히 혹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도 없으며 그러한 약속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토론자는 연구진의 주5일 수업에 대한 접근 자체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교사와 교과교육학자, 교육 행정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표하듯이 결정하고자 한다는 논리이면, 학부모들은 그 정도조차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대체로 주당 2시간 정도로 줄이자고 한 것만도 다행일지 모르겠다. 토론자에게는 수업시간 축소의 기준은 가르칠 내용의 양부터 결정되어야 그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학습 가능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자율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학습이 가능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각 교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수업시간을 확대·축소·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실시되지도 않은 위와 같은 조사의 결과가 공교롭게도 연구진의 주2시간 정도를 축소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일치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다. 혹은, 이웃나라 혹은 선진외국의 경우 주2시간 축소 조정을 했고 그것에 비추어보아도 추상적이지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나라들의 주5일 수업 운영이 의도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를 보면서 그 방법을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무책임한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법의 의사결정은 토론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IV.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의 자율재량권 확대와 책무성 강화에 대하여

연구보고에서 현장의 자율재량권을 확대 또는 조정하려는 의도는 ‘향후 논의사항’ 중의 ‘4. 편성·운영지침’ 부분에서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확정적이지는 않다. 토론자는 이미 이 연구의 기간이 거의 만료 단계에 있으므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침’에 대해서라도 수정·보완(안 ; 연구진의 의도대로라면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아직도 여러 계층의 의사를 타진해보려는 의도만 드러내어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8) (Carroll, 1963)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적어도 제6차 교육과정 이후 10여 년 간 현장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유지해 왔으며, 교사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에 잘 적응해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혹이나 주5일 수업제 도입을 계기로 혹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흐름을 거스르는 안을 구상해서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일이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교육과정의 개념정립을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effectiveness), 적합성(suitability), 다양성(variety)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학교교육과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professional expertise)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을 제대로 편성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또 그것은 즐거운 일입니까, 귀찮은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보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 현장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이 어렵고 귀찮고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육과정 기준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학교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국가에서 전국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 만들어 제시해주고, 여러분은 그것을 실천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답> ① 대찬성 ② 어느 정도 찬성 ③ 좀 반대 ④ 절대 반대 ⑤ 모르겠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경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가.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찬성’과 ‘어느 정도 찬성’을 합하면 아마도 80~85%가 될 것이라는 것이 토론자의 예측이다. 우리는 실제로 연구진의 조사 결과에서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 결과(예 : 고등학교 과정 설치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교육의 발전 방향을 늘 깊이 생각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교육과정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나 연구소에서는 질문할 것을 질문하고 제대로 질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예 대답을 하지 않거나 적어도 제대로 답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토론자는 이 연구결과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제6차 교육과정 및 제7차 교육과정에서 현장의 자율재량권을 신설·확대해 왔다면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자율화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현행 교육과정기준 속의 자율재량권의 취지가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접근해야 하며, 오히려 이번에는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지침 설정을 연구해야 한다. 교육과정기준과 학교교육과

9) The curriculum is mirror that reflects America's dreams for its next generation. It is through the school curriculum that American's attempt to translate their values into reality. Therefore, no area of this nation's schooling has such a difficult, complicated, and dramatic history as the school curriculum. -- Arthur K. Ellis, James A. Mackey, Allen D. Glenn, 『The School Curriculum』 (Massachusetts : Allyn and Bacon, 1988), p.3. --

정에 대하여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

- 불행하게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율·재량권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육과정기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소한 것까지 모두 언급하고 있어서, 따지고 보면 그 기준이 정교해졌을 뿐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그 정교화를 소화하는 데도 벅찼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에는 그 이전에 비해 학교교육과정의 개념을 더욱 확장·발전시켰다고 보기가 어렵다. 국가기준 자체가 이미 아주 자세한 면까지 다 언급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자율재량권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 시·도 교육청의 지침은 당연히 국가기준과 학교교육과정 사이에서 그 연계를 원활히 하는 구실을 해야 하겠지만, 그 속에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평가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제안이 들어 있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기의 지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에 관한 시·도 지침 혹은 시·도 교육청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학교교육과정은 학년·학급·교과목별 교육과정 편성에 유념할 만한 미션을 주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고 있다. 즉, 학교교육과정은 당연히 학년·학급·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되어야 하겠으나 이 네 가지가 서로간에 거의 남남처럼 있으나 마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각기 따로 작성하고 있으며, 그것도 이 학교 저 학교의 자료들을 보고 적당히 문서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은, '교육과정'을 단순히 '교육내용'으로만 보면서 '그까짓 교육과정기준이나 학교교육과정이 없어도, (또는) 그따위는 고려하지 않아도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관점을 가지고 교육과정 정책·행정을 방치하거나 아직도 교과서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 특히, 교육과정 기준에서 학업성취도와 무관하게 교과별 수업시간을 통제해온 것은, '어떠한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든 말든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여 가르치고 배우라(이해하든 못하든 시간은 때워라)"는 비논리적 규제이므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해주어야 한다.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지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시간(단위) 배당이 표시되지 않는 형태의 편제표가 이상적이며, 주5일 수업제 도입을 계기로 아예 현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볼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경우, 교육과정 평가를 강화하여 목표관리에 관한 현장의 책무성을 아울러 강화해야 한다. 어떤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먼저, 혹은 단시간에 학습과제를 잘 이수할 수 있으며, 어떤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더 짧은 시간에 정해진 과제를 이수시키고 다른 활동을 시키고 싶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각과 달리 현행 교육과정의 편제보다 더욱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량활동의 성격이 특별활동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현장에 자율재량권을 부여한 유일한 교육과정 영역에 대하여 주5일 수업제의 도입과 연계함으로써 축소 또는 폐지

하려는 움직임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잘 살려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사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량활동은 급격히 늘어나는 범교과 학습 중심의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특별활동은 전통적으로 굳어졌다하여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그 영역이나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다.

◦ 최근에 이르러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계기교육을 중심으로 현장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재 구성·활용이 국가·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과정기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일습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의 중립성 등이 침해받을 염려가 적은 교과부터 국정교과서(정부에서 굳이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싶은 경우)와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를 함께 개발하여 현장에서 선택하게 하는 방안,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교과목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자유발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교육과정기준의 지침에 포함시켜 현장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 담당자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V. 제 언

이상과 같은 토론으로써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교육과정 수시부분수정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진에서는 교육과정기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수시부분수정체제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하필이면 가장 폐단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온 일시전면개정체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는야말로 가장 순탄한 방법인 수시부분수정체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희망적인 접근방법이고,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 따라 연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유리하고, 무엇보다 현장교사들에게 이제는 교육과정기준이 안정적으로 개선되어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연차적인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그것은 앞으로 하나의 틀로서 기능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일시전면개정방법은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그러한 기회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가장 졸렬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 주5일 수업제 대비 수업일수 조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하는 방법으

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무리가 있지만 최소이수시간의 방법으로 수업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연구진의 조정방안은 수업시간의 최대치를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재량권을 속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어디서나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환경적 통제방법이지만 교육과정 운영방법만은 보편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혹이라도 교육내용을 하향 평준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몇 시간을 가르치고 배워서 목표를 달성하느냐는 문제는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그 권한을 풀어주어야 마땅하다.

◦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정책에서는 중앙에서 무엇을 정하고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을 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구조를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율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 정부에서는 내용과 방법, 평가를 수단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교육목표 달성만을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꾸로 수업일수까지 교육과정기준에서 통제하려는 것은 매우 졸렬한 방안일 수밖에 없다. 편제와 지침 등 총론을 대강화하여 현장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따르는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책무성 강화는 각 교과교육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각론의 상세화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2부: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개정 방안



【발 표】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개정 방안

박 순 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서 론

현 시점에서 현행 교육과정 개선 논의의 맥락을 짚어보면, 이전 교육과정기에 비해 교육과정 적용 과정에서의 평가와 반성을 위한 기간이 길었다고 할 수 있다.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정부와 전문 연구 기관의 책무성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그 동안 도출되어 온 교육과정의 강점과 약점,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솔한 수용 자세, 강력한 개선 의지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초·중학교 9년간의 무상의무 교육의 보장과 10년간 공통기본 교육과정 체제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생 2, 3학년의 적성과 진로 계발을 위한 선택 교육과정은 절대적,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논의 대상은 전체 학생의 69.5%를 수용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 교육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실업고,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 고교나 대안 학교에 관한 논의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밝힌다.

최근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 추세 가운데 특히 대다수 학생의 대학 진학 준비,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전환, 학생 집단 및 요구의 다양화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고등학생이 누려야 할 학습권 보호는 절실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성격상 대입시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국가수준 시험의 밀접한 관계 구도 속에서 갈수록 증대되는 국가 경쟁력의 기초 형성에 대한 요구 또한 충족시켜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입각하여 본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에서는 2002년 이후 적용되어 온 현행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의를 비롯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의 한 가지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으로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 교육과정 정책 기조가 어떤 식으로 표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은 곧 왜 국가 교육과정으로 존립해야 하는지, 최종 수혜자인 학생의 학습을 위해 국가 교육과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표현가능하며, 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II. 현행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문제

이하에 제시된 일부 통계 자료는 본 교육과정 개정(시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2004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의 수탁 연구로 수행된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결과임.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교사 3,379명, 학생 2,773명(초등 6학년생 447명, 중3학생 420명, 고3학생 1039명), 학부모 767명, 시·도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320명, 교과전문가 215명 등 총 6,617명임

1. 학습자중심의 교육과정이 실천되고 있는가?

가. 선택에 의한 초점 학습

□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에의 적합성

- 교육 목표 :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와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였으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대학입시의 지배, 고시 이후의 실행 방안 연구나 시·도 교육청의 이완된 지침만으로는 국가 교육과정으로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학습자의 현실적 요구 반영

- 예) 대학 입학 시험 준비(전체 졸업자의 81.3%, 실업고 졸업자의 62.3%가 진학)
※ 실업계 교육 감소 추이(1997년~2004년) : 학교 수는 40.8%→35.0%, 학생 수는 41.1%→29.5%로 감소, 일부 실업고의 일반고로의 전환(2005년 11개교)
- 예술·체육계 진학생의 학교 학습 기회 확충

□ 고등학교 2, 3학년 총 4학기의 운영 실태

- : 심화 과목 이수 기간은 실제로 2학기 정도에 불과하여 심화 과목의 피상 학습, 학생의 고부담 불가피, 선행 학습 조장, 사교육 부담 야기
- 2학년 1학기 : 일반선택 과목(24단위 이상) 이수
- 2학년 2학기~3학년 1학기 : 심화 과목 이수
- 3학년 2학기 : 대수능 준비

□ 학습자의 필요량에 따른 학습 미흡

- : 일부 과목의 경우 여전히 학습자의 능력이나 적성, 진로에 무관하게 동일 내용, 동일 양과 난이도로 학습해야 하는 현실

□ 학습 기피 현상 : 난이도가 높거나 내신 성적 산출에서 불리한 과목 기피 경향 증대

나. 학습자간, 과정간 최소한의 형평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 현행 교육과정과 2008학년도 대입시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문제

- 학습 부담 과다, 고난도, 내신 성적에서 불리한 과목 기피
예) 이과 학생 수 감소
- 진로에 따른 학습 기회 미흡 또는 ‘과정’간 비형평성
- 상대 평가(내신 9등급제)의 영향
: 소규모 학생 이수 과목에서의 내신 불이익 우려로 인한 과정간 학생 수의 불균형 심화. 예) 학급 소속은 문과, 대학 지원은 이과 → 문이과 중간형 양산 → 이과 학습 기초 부진 → 대학 진학 후 전공 수학 능력 미흡

<표 1> 대수능 관련 2, 3학년 문과·이과 학습 부담 비교

교과	대수능 관련 2, 3학년 심화 과목 이수 부담		학습 부담 비교
국어	언어		문과 · 이과 동일
영어	외국어(영어)		
사회 도덕	사회 탐구	최대 4과목	적성에 따른 선택으로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학의 경우 I, II의 위계에 따른 심화 학습을 요구함
과학	과학 탐구	최대 4과목	
수학	수리 ‘가’ 형	3과목(20단위)	문과는 8단위, 이과는 20단위로 시험 범위와 학습 부담 격차 발생
	수리 ‘나’ 형	1과목(8단위)	

- 교육과정에서의 과목 선택권이 일부 수능 영역에서 미반영, 학생 선택권의 실질적 명분 소멸. 예) 모든 학생이 언어 영역 응시함에 비해 언어 영역 내에서의 선택권은 부재, 이에 비해 탐구 영역의 선택권은 방만한 현실

□ 교육과정 전체 용량의 제한 (주5일 수업 대비 이수 단위 수 감축 예상)

- 주5일 수업제로 인한 이수 단위 수 감축 : 216단위→204단위
- 현행은 1102시간, 감축시 963시간
(교육과정 기준 수업 시수 외에 연간 수업 일수를 고려할 경우 약간 증대)

※ 외국과의 비교 : 정규 수업 시수는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

-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수업 시수(60분 기준)를 기준으로 할 때, 일본(719시간), 핀란드(713시간), 중국(1083시간 혹은 941시간)보다는 많고, 대만(1100시간)보다는 적은 편
- 이수 단위(현행 216단위, 감축시 204단위)는 비슷하거나 많은 편이지만, 학습의 초점은 분명하지 못함

※ 외국의 고등학교(3개 학년 기준) 졸업 이수 단위 및 취득가능 단위 수

	미국	대만	일본	핀란드	한국
졸업이수 단위	158~165단위 (4년간 210~220 단위)	160단위이상	74단위 이상 (한국식 148단위)	75단위 이상 (한국식 150단위)	216단위이상
취득가능 단위 수	진로에 따라 다양	192~218단 위	최대 94단위 (최대 20단위의 학교 설정 과목 및 교과 이수)	최소 75단위 이므로 그 이상 이수 가능	최소 216단위 이므로 그 이상 이수가능
단위 수 산정 방식	주당 5시간씩 1년 (30~36주간)	50분씩 20시간	50분씩 35시간	45분씩 38시간	50분씩 17시간

□ 소수 학습자의 정체성 인정, 학습권 보호

- 예술·체육계열 진학자, 일반계 고교내 직업계 이수자의 경우 문과나 이과 학생들에 비해 학생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학습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음. 특히 예술이나 체육계열 학생의 경우 방과 후 개인 수준에서 실기 학습을 할 수밖에 없음
- 학교 여건상 소수 학생들을 위한 과목 개설이 어려울 경우,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일정 단위 이수 후 남은 이수 분은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수하도록 지원
예) 학생 개인의 진로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 감축,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교육 기관에서의 과목 이수를 인정해주는 등 다양한 방안 강구

<표 2> 예술·체육 과정 및 직업 과정의 개선 방안에 관한
교사, 교육청 관계자, 교과 전문가, 학생의 의견

예·체능 과정 및 직업 과정의 개선 방안	응답빈도와 백분율(%)				
	크게 찬성	찬성	반대	크게 반대	합계
공통기본과정 이수 후, 진로와 무관한 심화과목 이수 부담 축소	378 (21.7)	1182 (68.0)	144 (8.3)	35 (2.0)	1739 (100.0)
개설이 어려운 분야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 학습장에서의 학습 인정	200 (11.6)	1212 (70.1)	280 (16.2)	38 (2.2)	1730 (100.0)
학교 여건을 최대한 살려 일부 과정(체육, 음악, 미술, 직업 과정 등)특화 개설	281 (16.2)	1129 (65.2)	270 (15.6)	52 (3.0)	1732 (100.0)

출처: 교육과정 개선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조사(평가원, 2004)

- 진로와 무관한 심화과목 이수 부담 축소 : 찬성 89.7%
- 공공성 있는 지역사회 학습장에서의 학습 인정 : 찬성 81.7%
-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과정 특화 개설 여부 : 찬성 81.4%

다. 진로 계발 지원 및 분야별 국가 경쟁력의 기초 형성

□ 진로에 따른 집중 학습의 필요성

- 10년간의 공통기본 교육과정 이수 후, 각 학생의 진로와 적성, 능력에 따른 집중 학습 기회 제공

<표 3>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심화과목의 이수 비중 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

구분	응답 빈도와 백분율(%)					
	크게 찬성	찬성	반대	크게 반대	합계	
전체	464 (16.1)	1653 (57.5)	644 (22.4)	114 (4.0)	2875 (100.0)	
고등학교 교사	국어	32 (11.6)	150 (54.2)	80 (28.9)	15 (5.4)	277 (100.0)
	영어	35 (13.4)	157 (60.2)	65 (24.9)	4 (1.5)	261 (100.0)
	수학	23 (9.1)	173 (68.7)	47 (18.7)	9 (3.6)	252 (100.0)
	사회	23 (8.6)	158 (59.0)	79 (29.5)	8 (3.0)	268 (100.0)
	과학	21 (8.6)	141 (57.8)	74 (30.3)	8 (3.3)	244 (100.0)
	기술·가정	15 (12.8)	67 (57.3)	31 (26.5)	4 (3.4)	117 (100.0)
	도덕	9 (10.2)	46 (52.3)	31 (35.2)	2 (2.3)	88 (100.0)
	체육	12 (9.4)	63 (49.2)	48 (37.5)	5 (3.9)	128 (100.0)
	음악	7 (12.1)	28 (48.3)	19 (32.8)	4 (6.9)	58 (100.0)
	미술	6 (10.0)	35 (58.3)	16 (26.7)	3 (5.0)	60 (100.0)
	전체	183 (10.4)	1018 (58.1)	490 (28.0)	62 (3.5)	1753 (100.0)
고등학교 교육청	3 (10.0)	23 (76.7)	4 (13.3)	0 (0.0)	30 (100.0)	
고등학교 전문가	3 (3.2)	54 (58.1)	30 (32.3)	6 (6.5)	93 (100.0)	
고등학생	275 (27.5)	558 (55.9)	120 (12.0)	46 (4.6)	999 (100.0)	

출처: 교육과정 개선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조사(평가원, 2004)

- 전체 반응 : 73.6%가 찬성
- 교과별 반응 : 수학(77.8%)과 영어(73.6%)는 찬성 비율이 높은 반면, 체육(41.4%), 음악(39.7%), 도덕(37.5%)은 반대 의견이 타 교과에 비해 높음
- 진로 준비에의 고등학교 학습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의견 : 고등학생 1000명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8.8%로 높게 나타남. 진로별로는 자연과정과 사회과정 학생들은 '도움된다'에 각각 48.3%, 47.2%, 예·체능 학생의 85.1%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

□ 분야별 경쟁력 기초 형성, 진로 계발 지원

- 고등학교 학습과 대학 진학 후 학습의 연계성 증진
- 분야별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능력 구비
- 대학 전공 영역별 정원과 고교에서의 해당 과정 이수 학생 수의 격차

<표 4> 대학 전공 계열별 입학자 수(2005 교육통계연보 참조)

계열	4년제 대학 입학자 수		전문 대학 입학자 수		총계
인문	46,842 (8.3)	138,937 (24.6)	12,212 (2.2)	67,023 (11.9)	205,960 (36.5)
사회	92,095 (16.3)		54,811 (9.7)		
공학	78,468 (13.9)		66,415 (11.7)		
자연	44,160 (7.8)		19,247 (3.4)		
의약	10,877 (1.9)		27,679 (4.9)		
예술·체육	37,851(6.7)		47,230(8.3)		85,081 (15.0)
교육	15,991(2.8)		12,006(2.1)		27,997 (4.9)
계	565,884 (100)				

- 4년제 대학 정원은 문과가 약 1,000명 많음
- 전문 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이과가 약 4,000명 더 많음
- 예술·체육계열의 경우 15.0% 차지함

<표 5> 최근 대수능 영역별 응시자의 분포

영역	2005학년도 응시자 수	'05년 9월 모의고사 응시자 수	비고
언어	56.8만	53.2만	두 영역의 응시자 수는 거의 비슷
외국어(영어)	57.0만	53.2만	
수리 '가' (이과용)	14.5만	12.1만	'가'형과 '나'형 간 응시자의 수는 약 25.7만 명의 차이를 보이며, '가'형 응시자 수는 줄어드는 경향임
수리 '나' (문과용)	35.8만	37.8만	
과학 탐구	19.5만	18.5만	
사회 탐구	33.9만	29.1만	
직업 탐구	3.5만	5.3만	
제2외국어/한문	12.3만	4.7만	

- 이공계 학습자의 감소, 과학기술 인력 부족 문제 대두
: 대수능 자연계열 응시자의 수는 '97학년도 43.3%, '02학년도 26.9%로 하락, 1996~2005년 직업계열 제외한 고교 2, 3학년 학생 가운데 자연계열 학생 약10% 감축 (1996년 48.0% → 2005년 38.5%)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4)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예술·체육 과정 이수 학생에 대한 지원 미흡
: 예술·체육계 대학 정원은 전체 정원의 15.0%를 차지함에 비해 예술고와 체육고 소속 학생은 1.1%

<표 6> 고등학교 종류별 학생 수와 비율(2005 교육통계연보 참조)

구분	학교수(비율)		전체 학생 수(비율)		3학년 학생 수(비율)	
일반고	1382	(63.5)	1,259,792	(69.7)	404,727	(69.5)
실업고	713	(32.8)	503,104	(27.9)	165,117	(28.3)
예술고	25	(1.1)	16,448	(0.9)	5,471	(0.9)
체육고	14	(0.7)	3,592	(0.2)	1,130	(0.2)
과학고	18	(0.8)	3,340	(0.2)	505	(0.1)
외국어고	25	(1.1)	19,164	(1.1)	5,747	(1.0)
계	2,177	(100)	1,805,440	(100)	582,697	(100)

(과학고 : 1학년 1480명, 2학년 1355명)

- 일반고, 실업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 학생의 비율은 2.2%에 불과

2. 교육과정 편제와 과목 개설 체계는 합리적인가?

가. 선택 과목의 체계 문제

- 일반 선택과목 26과목, 심화 선택과목 53과목으로 학습자의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수 과목 편중 현상이 나타남.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서는 주로 ‘대입과의 관련성’, ‘학습의 용이성’이 주요 변인으로 작용함
(※2004년~2005년 교과별 선택 과목의 이수 현황은 [부록 1] 참조)

□ 일반선택 과목의 이수 실태

- 교과별 누적 이수 비율은 전체적으로 대략 47.8%~68.2%
- 과목별 이수 비율은 0%~48.1%
- 30%이상의 이수율 5개 과목, 10%이상~20%미만 5개 과목, 10%미만 17개 과목

<표 7> 2005년 고 2, 3학년에서의 일반선택 과목 이수 학생 수의 분포

이수 학생 수	30만 명대	20만 명대	10만 명대	9만 명대	8만 명대	7만 명대	5만 명대	4만 명대	3만 명대	2만 명대	8천 명대	7천 명대	4천 명대	1천 명대	150명 이하
과목수	3	2	1	1	4	1	1	2	2	4	2	0	2	1	1

(※모집단은 2005년 일반계 고교 2, 3학년 재학생 821,978명)

□ 심화 선택 과목의 이수 실태

- 교과별 누적 이수 비율의 범위는 1.5%~142.2%

- 과목별 이수 비율의 범위는 0% ~ 51%
- 10%미만의 이수 비율을 보이는 과목은 26과목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함

<표 8> 2005년 고 2, 3학년에서의 심화선택 과목 이수 학생 수의 분포

이수 비율의 급간	과목 수	비율	해당 과목
50% 이상	2	15.1%	'수학 I'과 '문학' 등
45% 이상 - 50% 미만	1		
40% 이상 - 45% 미만	0		
35% 이상 - 40% 미만	1		
30% 이상 - 35% 미만	4		
25% 이상 - 30% 미만	5	18.9%	'한국지리', '화학 I' 등
20% 이상 - 25% 미만	5	17%	'미분과 적분', '체육실기', '일본어 II' 등
15% 이상 - 20% 미만	3		
10% 이상 - 15% 미만	6		
5% 이상 - 10% 미만	8	15.1%	'문법', '화법', '이산수학' 등
5% 미만	18	33.9%	'경제지리', '지구과학 II' 등

□ 일부 과목의 개설 방식 문제

- 물리적 방식의 과목 나열, 기존 과목의 내용을 분리하여 선택 과목 수 확대, 과목 간 교육 내용의 차별성 미흡 등
- 선택 과목간 연계성 미흡, 교과 내용을 편의 또는 난이도에 따라 분리.
예) '확률과 통계'는 '수학 I'의 확률과 통계 영역과 거의 동일, '이산수학'의 일부가 '수학 I'의 '순열과 조합' 영역과 동일
-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 구성상의 문제로 일부 과목은 외면되거나 고교 학습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음. 공통기본 교과와 일반선택 과목, 심화선택 과목간 연계 검토 필요

나. '수준별' 처방의 연계

□ 선택 교육과정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 아이디어 소멸

- 현행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주로 공통기본 교육과정 기간의 범위에 한정되고, 고등학교 2, 3학년에 연계되지 못한 실정임. 적성과 진로, 해당 교과에서의 학업 성취도와 무관하게 여전히 공통 필수로 이수할 경우 이전 학년에서의 수준별 수업 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예) 수학은 10학년까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임을 강조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 수학 성취도, 적성, 진로와 상관없이 2학년에서는 '수학 I'을 거의 공통 필수로 이수하는 현실임

□ 교과 학습 관련 적성과 능력,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 필요

- 적성과 수월성 여부 판단 및 그에 따른 과목 선택 처방 필요
- 미달 정도에서의 차이 인정, 당해 단계에 국한된 단순 미달자와 여러 단계에 걸친 미달자, 학습 부진아의 구분 필요, 후자의 경우 별도의 처방이 요구됨

□ 고 2, 3학년에서의 ‘수준별’ 처방의 의미 확인

-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 필요 등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 교육의 효능성 극대화 : 교육 목표 도달 경로의 다양화 외에 도달 목표에 있어서도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 필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고려하도록 다양한 수준으로 열어 두어야 함
- 선택 교육과정에서의 과목 차원에서의 수준별 처방은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의 해당 교과 성취 경력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국가수준 선택 과목 개설 방식

□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의 이원 체제의 비실효성 해소

- 당초의 “교양 증진 및 실생활 연관”이라는 일반선택 과목의 설정 취지는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대입시 준비를 하고 80% 이상의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최근 및 향후 예견되는 상황과 부합하기 어려움
-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하여 개설하고, 현행 일반선택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은 10학년의 공통 기본 교과와 선택 과목에서 수용
- 고교 2, 3학년(총 4학기) 기간의 효율적 활용 촉진
- 일반 선택 과목에서의 “거의 공통 필수” 과목
예) 체육과 건강(395,147명, 94.7%), 제2외국어 I(406,586명, 99.2%), 한문(340,449명, 85.1%)

□ ‘한문·교련·교양 과목군’의 선택 과목 조정(안)

- 이수율 저조 과목, 타 과목과의 내용 중복 측면 고려
- 교련(4.3%) : 점진적 폐지 (2004년 6.1%, 2005년 4.3%로 감축)
- 진로와 직업(6.4%) : 현행과 같이 고 2, 3학년에서 다루기에는 시점 상 부적절함. 10학년 이하에서 강조,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진로 및 과정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과목군 개념 유지

- 교사, 교육청, 교과전문가 1885명의 현행 일반선택 과목군 구분에 대한 의견 : 전체적으로 67.3% 바람직한 것으로 반응.

- 과목군 구분 방식에 대한 교사, 교육청 관계자, 교과 전문가 1150명의 반응
: 인문·사회과목군에 대해서는 88.3%, 과학·기술과목군에 대해서는 79.2%, 예·체능과목군에 대해서는 94.9%, 외국어과목군에 대해서는 90.8%, 교양과목군에 대해서는 78.0%로 긍정적 반응을 보임

(출처: 교육과정 개선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조사(평가원, 2004))

□ ‘수준별’ 처방의 범위를 고 2, 3학년까지 확대, 실효성 확보

- 고 1학년까지의 수준별 처방이 고 2, 3학년에서 합리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설득력 발휘
-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인 만큼 수업 차원의 수준별 처방과는 달리, 교육과정, 즉 과목 개설 차원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 학생 스스로 차별성을 구사할 여지를 제공해주어야 함.
- 학습자의 특성(성취도, 적성, 진로, 흥미)을 바탕으로 하는 차별적 전략 필요 : 과목 내용의 다양성과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 영역 및 난이도 수준이 다양한 과목들을 설치, 학생들로 하여금 성취 수준과 적성, 필요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장점 확대

<표 9> 교과(목) 설계를 통한 수준별 교육과정 조정 방안 예시(수학)

학년 및 과정 교과목명 (가칭)	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의 수준별 처방					선택 교육과정에서의 능력, 적성, 진로, 진학 계열에 따른 수준별 처방					비고
	초 1-6	중1	중2	중3	고1	고 2, 3					
						이학 공학	사회	인문	예체능	직업 및 기타	
기본수학(1-6)	0										학급내 수준별수업
공통수학 1		0									수준별 이동 수업 및 기타 방안 변용
공통수학 2			0								
공통수학 3				0							
공통수학 4					0						
선택수학 1						0	0	0	0		과목 선택에 의한 수준별 수업 및 기 타 방안 변용
선택수학 2						0	0				
선택수학 3						0					
선택수학 4						0					
선택수학 5 ...						0...					

- 교과의 경우 내용의 성격과 학년 진급에 따른 성취도의 상대적 차이 고려. 학생의 경우 해당 교과에서의 성취도와 적성, 진로와의 관련을 고려.

□ 수월성에 대한 처방(AP 과정 등)과 현실적 타당성 검토

- 기존 개설 선택 과목과의 연계성 확보
- 수혜 대상 집단에 대한 합리적 판정 : 일반계 고교에서의 실수요자의 규모 파악
- 지역적 여건, 차이 고려 (지역별 일반고와 실업고의 비율차)
- 이수 여부 및 결과의 대입시 반영시 해당 교과목 학습 양과 난이도의 인플레 우려
- 현행 교과 학습 부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고려
·‘부담 많다’에 대해서는 수학 55.8%, 영어 39.3%, 국어 37%, 과학 35.2%로 반응

- 학습 부담의 원인으로 ‘학습량 과다’에 대해서는 국어(58.5%), 수학(29.5%), 사회(41.2%), 과학(23.8%), 영어(38.4%), ‘학습 내용의 고난도’에 대해서는 수학(41.6%)과 과학(33.8%)이 높게 반응
- 대수능 관련 학습 부담 정도 : 989명의 학생들이 수학 I (54.3%), 수학 II (68.1%), 수험화 과목(71.8%), 영어(49.2%), 과학(44.5%)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담이 많은 것으로 인식 (출처: 교육과정 개선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조사(평가원, 2004))

□ 교과별 선택 과목 개설 방식 개선

- 이수 비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과목은 가급적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교과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수 비율이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구성함
- 교사들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60%)이 많은 반면, 학생들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64%)이 많은 경향임

3. ‘과정’에 대한 처방

가. ‘과정’ 운영의 실태 및 ‘과정’ 처방에 대한 요구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간으로서 ‘과정’ 운영의 불가피성

-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을 강조했으나, 대부분(약 91%)의 학교에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
- 과정없는 학교는 8.9%를 차지하나, 과목 편성은 대체로 인문사회 과정과 유사함

□ 과정의 제한성

- 국가수준에서 ‘과정’을 설정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하여 과정의 다양성을 기대하였으나,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정의 수는 여전히 ‘인문사회 과정’과 ‘자연이공 과정’으로 제한되어 있음 (2학년에서는 4~5개로 개설하더라도, 3학년에서 가서는 2~3개로 축소되는 경향)
- 2004년 기준, 과정을 운영하는 1227개교 가운데 2개 과정 개설(71.0%), 3개 과정 개설(21.8%), 4개 과정 개설(4.9%), 5개 이상의 과정 개설(2.3%)로 나타남
(출처: 교육인적부(2004) 비공식 자료)

<표 10> 선택 과정 개설 운영 현황

구분 \ 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이공과정	직업과정	예술체육	과정구분 없음	기타	계
2004 년	국공립	222,289 (50.3%)	142,543 (47.3%)	2,299 (54.2%)	5,219 (30.6%)	2,879 (45.3%)	2,013 (55.6%)	377,242 (48.7%)
	사립	219,672 (49.7%)	158,874 (52.7%)	1,946 (45.8%)	11,828 (69.4%)	3,481 (54.7%)	1,605 (44.4%)	397,406 (51.3%)
	총계	441,961 (57.1%)	301,417 (38.9%)	4,245 (0.5%)	17,047 (2.2%)	6,360 (0.8%)	3,618 (0.5%)	774,648 (100.0%)
2005 년	국공립	242,881 (52.1%)	149,396 (48.3%)	2,561 (57.1%)	4,618 (29.1%)	1,857 (58.8%)	2,505 (60.7%)	403,818 (50.3%)
	사립	223,065 (47.9%)	159,930 (51.7%)	1,927 (42.9%)	11,243 (70.9%)	1,299 (41.2%)	1,624 (39.3%)	399,088 (49.7%)
	총계	465,946 (58.1%)	309,326 (38.5%)	4,488 (0.5%)	15,861 (2.0%)	3,156 (0.4%)	4,129 (0.5%)	802,096 (100.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4/2005), 교육통계연보>

- 2004년: 인문·사회과정(57.1%), 자연·이공과정(38.9%), 직업과정(0.5%), 예술·체육 과정(2.2%), 기타과정(0.5%)
- 2005년: 인문·사회과정(58.1%), 자연·이공과정(38.5%), 직업과정(0.5%), 예술·체육 과정(2.0%), 기타과정(0.5%)

□ **현행 7차 교육과정 문서에서의 ‘과정’ 관련 지침의 이완성**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 다. 학교 - (1)편성 - <공통 지침> - (다)고등학교

" ④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 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시도교육청의 ‘과정’ 설치 및 예시 관련 지침

지침 지역	2001년도 지침	2001년도 이후 수정 고시된 지침
울산	국가 지침과 동일 (인문·사회과목 집중 이수과정, 과학·기술 과목 집중 이수과정·외국어 과목 집중이수과정, 예·체능 과목 집중이수과정)	국가수준 지침과 동일 (과정 예시하지 않음)
전남	세 개 과정 예시 (인문·사회과정은 어문집중모형·사회집중모형·영어집중모형으로, 자연과정은 수학집중모형·과학집중모형으로, 통합과정 추가)	국가수준 지침과 동일 (과정 예시하지 않음)
인천	국가 지침과 동일 (인문, 자연, 어문, 사회, 이공,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함).	어문, 사회, 이공 과정 삭제
경기	국가 지침과 동일 (과정 예시하지 않음)	국가수준 지침과 동일(인문·사회중심과정, 과학·기술중심과정, 외국어중심과정, 예·체능 중심과정 등 필요한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함)
경북	국가지침과 동일 (과정 예시하지 않음)	국가수준 지침과 동일(집중이수과정 예시: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외국어 과정, 예·체능 과정 등과 같이 구분하여 학교 지정 선택과목의 이수모형을 설정할 수 있음)
충남	관련 항목 없음	국가수준 지침과 부분적으로 동일 (과정은 예시하지 않음)
부산	인문·사회, 과학·기술, 외국어,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변화 없음 (과정 명만 변화: 과학·기술과정을 자연·이공과정으로 표현)
서울	국가 지침과 동일 (어문과정, 사회 과정, 이공과정, 생화학과정, 외국어과정, 예·체능과정, 직업과정 등을 제시)	변화 없음
이외 지역	국가수준 지침과 동일 (과정 예시하지 않음)	변화 없음

□ ‘과정’에 대한 정의(定義)나 처방, 과정을 특징지을 수 있는 지침 부재

- 과정명만 다양하게 제시, 나열해 놓은 수준
- 시·도 교육청의 지침도 대체로 국가 교육과정과 유사 내지 동일
 - 학교 현장에서는 ‘단위 학교 형편에 맞추어’ 과정을 운영하는 실정
- 과정별 이수 과목 분석 결과,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과목의 집중이수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나. 과정에 대한 합리적 설계 및 처방 수준 설정

□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처방에 대한 요구

-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결과(평가원, 2004)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과정(예: 인문, 자연, 예·체능, 직업)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과목을 어느 정

도 제시해주는 방안에 대한 교사, 교육청 관계자, 교과 전문가 1902명,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95명 대상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매우 찬성’과 ‘찬성’을 합하여 약 80%로 나타남. 교사의 경우 미술(90.0%), 과학(83.8%), 체육(82.6%), 음악(81.0%) 담당 교사의 찬성 비율이 더 높고, 학생의 경우 예·체능 과정 학생이 다른 과정의 학생에 비해 ‘크게 찬성’에 45.5%의 반응.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타지역보다 찬성 의견(85.7%)이 높음

※ 외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의 ‘선택’ 관련 규정 ([부록 2] 참조)

- 과목 중심 : 일본, 대만(선택 비율은 약 22% 정도)
핀란드(선택 비율은 약 25~30% 정도)
- 과정 중심 : 중국(3학년에 문과, 이과, 외국어, 예술, 체육, 직업의 6개 과정 제시)
스웨덴(2, 3학년에 사회, 자연 등 실업계 포함하여 17개 과정 제시)
네덜란드(과학기술, 과학건강, 상경, 문화예술의 4개 과정 제시)
프랑스(인문, 상경, 과학의 3개 과정 제시)

□ 발전적인 형태의 ‘과정’ 운영 유도

- 국가 교육과정에서 과정별 선택 과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둬으로써 학습자의 진로에 초점을 맞춘 교과 학습의 집중도를 높임
- 향후 ‘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첫 단계에서 크게 구분하고, 다음 단계에서 선택한 과정 내에서의 과목 선택권을 늘리는 방법 강구

<표 11>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할 바람직한 과정

구분	응답 빈도와 백분율(%)							
	인문과정	사회과정	자연과정	공학과정	예체능과정	직업과정	기타	합계
전체	1007 (68.4)	545 (37.0)	1062 (72.1)	368 (25.0)	913 (62.0)	801 (54.4)	10 (0.7)	1473 (319.5)
교사	936 (67.9)	490 (35.5)	988 (71.6)	330 (23.9)	840 (60.9)	735 (53.3)	7 (0.5)	1379 (313.7)
교육청	21 (87.5)	15 (62.5)	21 (87.5)	9 (37.5)	18 (75.0)	16 (66.7)	0 (0.0)	24 (416.7)
전문가	50 (71.4)	40 (57.1)	53 (75.7)	29 (41.4)	55 (78.6)	50 (71.4)	3 (4.3)	70 (400.0)

출처: 교육과정 개선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조사(평가원, 2004)

- 자연과정 72.1%, 인문과정 68.4%, 예·체능과정 62.0%, 직업과정 54.4%, 사회과정 37.0%, 공학과정 25.0%(세 집단 모두 자연, 인문, 예·체능과정 개설을 우선 선호함)

- 학교에서의 과정 운영과 국가 고사(대수능 등) 및 대입시에 최소한의 공통 분모 제공

※ 5,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과정’ 관련 처방의 개요

<5차 교육과정>

- 국가 수준에서 엄격한 과정 제시

-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3가지로 제시하고, 과정별 선택 과목과 이수 단위를 구체적으로 지정
- 인문·사회 과정은 국어 6단위, 사회 8단위를 자연 과정보다 더 이수, 자연 과정은 수학 8단위, 과학 14단위를 인문·사회 과정보다 더 이수
- 학교 및 학생 선택 과목 : 과정에 무관하게 적용되며, 제2외국어(10단위), 실업·가정(16단위)

<6차 교육과정>

- 과정별 선택과목과 과정 설립에 관한 지침을 교육과정 편제표의 하단과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으로 제시
-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및 기타 필요한 과정으로 제시

·편제표 하단의 지침 내용

“일반계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인문·사회 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및 기타 필요한 과정을 들 수 있다. 단, 직업과정으로의 변경은 3학년에서도 가능하다.”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

시·도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제시한다.

(가) 일반계 고등학교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① 과정별 필수과목(106단위)의 이수모형
- ② 과정별 선택과목(12단위)의 운영
- ③ 기타 필요한 과정의 설치·운영

- 과정별 선택 과목 지정 방식 : 시도 교육청 106단위, 학교 12단위
- 과정별 필수 과목 106단위, 과정별 선택 과목 8단위, 교양 선택 4단위

4. 교육과정의 지역화·자율화

가. 교육과정 지역화의 실효성 제고

□ 지역화의 의미

- 적용 과정에서의 지역 단위 교육과정 전문가 훈련 과정
-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공분모 확대 기회
- 교육과정 정책 집행을 위한 역량과 인프라 구축
- 권고와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 실질적 자율성 동반

□ 교육과정 적용에서의 지역화 노력 개선

- 국가수준 교육과정 정책 수준의 해결 과업과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수준의 해결 과업의 혼동 방지
-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정책의 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ss) 제고
- 국가, 교육청, 학교의 역할 분담 성과에 대한 평가 필요
- 성과에 대한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의 인식 차 고려

예)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의 시·도 교육청 편성·운영 지침의 도움 정도에 대한 반응 (교육과정 개선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조사(평가원, 2004) 결과)

구분		응답 빈도와 백분율(%)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합계
공통 기본	교사	120 (6.9)	989 (56.8)	552 (31.7)	79 (4.5)	1740 (100.0)
	교육청	11 (35.5)	15 (48.4)	5 (16.1)	0 (0.0)	31 (100.0)
선택	교사	61 (3.7)	812 (48.8)	675 (40.5)	117 (7.0)	1696 (100.0)
	교육청	11 (35.5)	16 (51.6)	4 (12.9)	0 (0.0)	31 (100.0)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의사결정은 국가와 단위 학교로 이원화하고, 교육청은 실질적 지원 강화에 대해 81.2%가 찬성(초등 81.2%, 중 86.2%, 고 77.2%) (출처 : 교육과정 개정관련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평가원, 2004)
- 일반선택 과목 편성·운영에 관한 결정 수준에 대한 교사, 교과 전문가 1825명 의견 : 학교수준 51.6%, 시·도교육청수준 37.4%, 국가수준 22.7%, 학생수준 11.3%로 반응
- 지역간 차이(학교 및 학생 수, 학교 규모 등 제 여건) 고려, 차별적 지원

□ 국가, 교육청, 학교의 역할 관계

-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각 수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규명
- 이와 연동하여 각 수준의 문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범위 설정
 - 국가수준 교육과정 고시 문서
 - 교육과정 해설서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나. 교육과정 자율화의 본질적 의미 확인

□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율화의 본질적 관점 확립

- ‘명목상’의 자율권’ 탈피 : 지역수준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허용
- ‘타율적으로 주어진 자율권’ 탈피 :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법제화로 인한 경직성 해소,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권 행사를 위한 교육과정 행정 기능 보강
- ‘기계적으로 행사하는 자율권’ 탈피 : 무차별성으로 인한 자율권 행사의 비효과성
- 교육과정 적용의 활성화적 장면 고려
 - 문서에서 출발하여 문서로 마감하는 관계적 절차 탈피, 실질적 지원 체제 구축
 - 교육과정 적용 과정에서의 ‘시간’이라는 유한(有限) 자원의 유실 방지

Ⅲ. 선택 교육과정의 개선 안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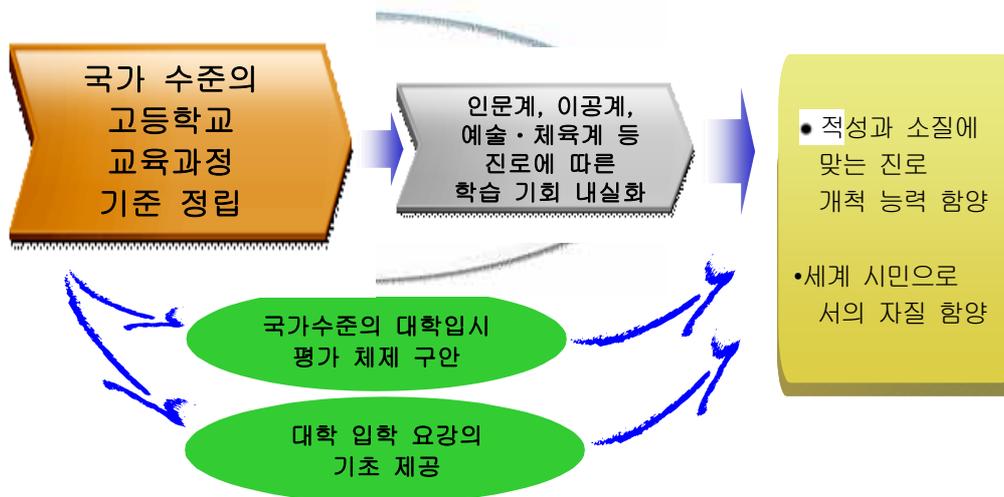
1. 개선의 지향점

□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본연의 의미 회복

-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공통적·일반적 기준”이라는 원래의 의미에 충실

□ 교육과정 개선 구상의 출발점 재확인

- 국가수준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정비 및 정체성 확보 : 국가 교육과정으로 존립 필요성, 최종 수혜자인 학생의 학습을 위해 국가 교육과정이 해야 할 본질적 역할 규명



□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국가수준 시험, 대학 입시 체제와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시 정책 유도 의 근거 마련 :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경우 국가수준 지침이나 시도 교육청 수준 지침에 의거하기보다는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소수 대학의 입시 요강에 의존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평가 체제에 의해 교육과정이 편성되는 주객전도의 불합리성 해소
- 국가 수준 시험(대수능)에서의 과정간 불균형(비형평성) 문제 해소
- 국가수준 시험 체제 개선의 근거 제공

□ 개선 방향

- 현행 교육과정 편제를 대체로 유지하여 수정 보완하는 안에서부터, 그간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을 토대로 ‘과정’에 대한 처방을 최소한으로 하여 제시하는 방안 등



2. 3개 개선(안) 구안에서의 공통 사항

- 가. 선택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136단위이며, 선택 과목 128단위, 특별활동 8단위로 편성
- 나.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 체제는 인문·사회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과학 교과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술·체육 교과군(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군, 제2외국어 교과군, 한문·교양 교과군의 6개 교과군과 각 과목으로 구성
- 다. 교과별 선택 과목을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구분하지 않고 선택 과목으로 개설
- 라. 학습 경험의 균형을 위한 현행 일반선택 과목 이수 규정은 ‘교과군 공통 선택’(가칭)으로 연계함. 10학년까지의 공통 기본 교과 이수율과 11, 12학년 선택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동시에 기본 교양을 증진하기 위해 교과군별로 1과목 이상을 이수하되, 단 한문·교양 교과군에서는 2과목 이상 이수
- 마. 향후 주5일 수업제 대비 선택 과목의 기준 단위는 4단위 또는 6단위로 설정하되, 2단위까지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단 4단위의 과목은 증배 운영만 가능함
- 바. 11, 12학년의 특별활동에 배당된 8단위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각 영역별 이수 단위를 학교 재량으로 편성함
- 사. 시도교육청 선택 28단위 지정 지침은 유보함(과목을 지정할 경우 편성·운영의 경직성 초래)
- 아. 현행 교육과정에서 지역과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 새로 시도된 발전적 성격의 지침은 그대로 승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함.
 - 예)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여 편성·운영
 - 예) 교양 과목의 ‘기타’에서 전문 교과 활용

3. 개선 안의 구안

현행 교육과정에 가해지는 변화 수위에 따라 다음의 <제 1안>은 현행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비교적 소폭으로 수정·보완한 점에서 ‘편제 개선안’으로 명명할 수 있음에 비해, <제 2안>과 <제 3안>은 각 안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 변화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러한 변화를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한지, 시도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

한지에 대한 판단과 예상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함. 이 점에서 두 가지 안은 ‘교육과정 개선 방안’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1학년의 공통 기본 교과와 이수 단위는 현재 미정인 점에서 공란으로 두며, 교과별 선택 과목의 명칭과 이수 단위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관계로 과목 명칭은 편의상 A, B, C, . . . 로 구분하고, 이수 단위 수도 잠정적으로 설정함 (교과별 선택 과목 개선 안은 [부록 3] 참조).

가. 제1안 (현행 교육과정의 소폭 수정·보완)

1) 기본 특징과 편제

-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입장 유지, 과정에 대한 국가수준의 처방은 없음

<표 12> <제 1안>에 따른 교육과정 편제표

구 분		1학년공통 기본교과	2, 3학년 선택 과목
교 과	국 어 도 덕 사 회	국어() 도덕() 사회()	국어A(6), 국어B(6), 국어C(6), 국어D(6), 국어E(6), 국어F(6) 윤리A(4), 윤리B(6) 지리A(4), 지리B(6), 역사A(4), 역사B(6), 일사A(4), 일사B(6)
	수 학 과 학 기 술 가 정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수학A(6), 수학B(6), 수학C(6), 수학D(6), 수학E(6), 수학F(6) 물리A(4), 물리B(6), 화학A(4), 화학B(6), 생물A(4), 생물B(6), 지학A(4), 지학B(6) 기술·가정A(4), 기술·가정B(4), 기술·가정C(4), 기술·가정D(4), 기술·가정E(4), 기술·가정F(4)
	체 육 음 악 미 술	체육() 음악() 미술()	체육A(4), 체육B(4), 체육C(6이상)* 음악A(4), 음악B(4), 음악C(6이상)* 미술A(4), 미술B(4), 미술C(6이상)*
	외 국 어	영어()	영어A(6), 영어B(6), 영어C(6), 영어D(6), 영어E(6), 영어F(6)
			독일어A(6), 독일어B(4), 프랑스어A(6), 프랑스어B(4), 스페인어A(6), 스페인어B(4), 중국어A(6), 중국어B(4), 일본어A(6), 일본어B(4), 러시아어A(6), 러시아어B(4), 아랍어A(6), 아랍어B(4)
	한 문 교 양		한문A(6), 한문B(4),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환경(4), 종교(4), 기타(4)
이수단위	()	128	
재량활동	()		
특별활동	()	(8)	
소계	68	136	
총이수단위		204	

* 표시한 선택 과목은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개설하여 편성·운영함

2) <제1안>에 따른 편성·운영 지침

- 앞의 ‘2. 3개 개선(안) 구안에서의 공통 사항’(‘가’~‘사’ 항) 참조
- 그 외 지침은 현행 교육과정 지침에 준하되, 보다 세부 사항은 향후 검토, 보완

나. 제2안 (‘집중 과정’ 권장)

1) 기본 특징과 편제

- <제1안>의 기본 성격을 포함하되,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 능력에 따른 보다 체계적인 과목 이수를 위해 ‘집중 과정’ 운영 권장
- 과목 이수 체계 제시
 - ‘교과군 공통 선택’ : ‘집중 과정’으로 이행하기 전 단계의 처방
 - 진로에 기반한 ‘집중 과정’ 선택 : 선택한 ‘집중 과정’에서의 과정 관련 과목 이수 강화, 진로 무관 과목 이수에 따른 학습 부담 경감
 - 학교 및 학생이 선택 주체가 되는 ‘자유’ 선택 :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중점 구현,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학생 자신의 필요에 의한 선택권 구사

<표 13> <제2안>에 따른 교육과정 편제 (<제1안>과 동일)

구 분		1학년공통 기본교과	2, 3학년 선택 과목
교 과	국 어 도 덕 사 회	국어() 도덕() 사회()	국어A(6), 국어B(6), 국어C(6), 국어D(6), 국어E(6), 국어F(6) 윤리A(4), 윤리B(6) 지리A(4), 지리B(6), 역사A(4), 역사B(6), 일사A(4), 일사B(6)
	수 학 과 학 기 술· 가 정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수학A(6), 수학B(6), 수학C(6), 수학D(6), 수학E(6), 수학F(6) 물리A(4), 물리B(6), 화학A(4), 화학B(6), 생물A(4), 생물B(6), 지학A(4), 지학B(6) 기술·가정A(4), 기술·가정B(4), 기술·가정C(4), 기술·가정D(4), 기술·가정E(4), 기술·가정F(4)
	체 육 음 악 미 술	체육() 음악() 미술()	체육A(4), 체육B(4), 체육C(6이상)* 음악A(4), 음악B(4), 음악C(6이상)* 미술A(4), 미술B(4), 미술C(6이상)*
	외국어	영어()	영어A(6), 영어B(6), 영어C(6), 영어D(6), 영어E(6), 영어F(6)
			독일어A(6), 독일어B(4), 프랑스어A(6), 프랑스어B(4), 스페인어A(6), 스페인어B(4), 중국어A(6), 중국어B(4), 일본어A(6), 일본어B(4), 러시아어A(6), 러시아어B(4), 아랍어A(6), 아랍어B(4)
		한 문 교 양	한문A(6), 한문B(4),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환경(4), 종교(4), 기타(4)
	이수단위	()	128
재량활동	()		
특별활동	()	(8)	
소계	68	136	
총이수단위		204	

2) <제2안>에 따른 추가 편성·운영 지침 : ‘집중 과정’ 관련 지침 추가

- (가) ‘집중 과정’은 11, 12학년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 소질 계발에 맞는 선택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 학교는 지역 실정과 학교 상황, 학생의 요구

를 바탕으로 교과 또는 교과군을 근간으로 집중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과 학교, 학생의 필요에 따라 보다 세분된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나) 집중 과정에서는 해당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과의 선택 과목을 교과 전체 이수 단위(128단위) 가운데 가급적 45%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예술 혹은 체육 교과와 관련된 집중 과정의 경우, 학생은 자신이 이수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목을 최소 2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집중 과정별 과목 선택 권장 사항에 대한 예시는 다음의 <표 14> 참조)

<표 14> 집중 과정에서의 과목 선택 권장(안)

구분	선택 과목	집중 과정별 과목 선택 권장 사항				
		<집중 과정 예시>				
		인문사회	수학과학	예술체육	기타....	
교과	국 어	국어A(6), 국어B(6), 국어C(6), 국어D(6), 국어E(6), 국어F(6)	택 4		택 2	
	도 덕	윤리A(4), 윤리B(6)] 택 5] 택 2~3	
	사 회	지리A(4), 지리B(6), 역사A(4), 역사B(6), 일사A(4), 일사B(6)				
	수 학	수학A(6), 수학B(6), 수학C(6), 수학D(6), 수학E(6), 수학F(6)		택 4		
	과 학	물리A(4), 물리B(6), 화학A(4), 화학B(6), 생물A(4), 생물B(6), 지학A(4), 지학B(6)		택 5		
	기 술·가 정	기술·가정A(4), 기술·가정B(4), 기술·가정C(4), 기술·가정D(4), 기술·가정E(4), 기술·가정F(4)		.		
	체 육 음 악 미 술	체육A(4), 체육B(4), 체육C(6이상)* 음악A(4), 음악B(4), 음악C(6이상)* 미술A(4), 미술B(4), 미술C(6이상)*			진로 관련 과목에서 택 4~5	
영 어	영어A(6), 영어B(6), 영어C(6), 영어D(6), 영어E(6), 영어F(6)	택 2	택 2	택 2		
제2 외국어	독일어A(6), 독일어B(4), 프랑스어A(6), 프랑스어B(4) 스페인어A(6), 스페인어B(4), 중국어A(6), 중국어B(4) 일본어A(6), 일본어B(4), 러시아어A(6), 러시아어B(4) 아랍어A(6), 아랍어B(4)					
한 문 교 양	한문A(6), 한문B(4),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환경(4), 종교(4), 기타(4)					
최소 이수 비율			45%	45%	45%	

* 표시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선택 과목은 '집중 과정' 이수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여 편성·운영함

<제2안> 관련 보충 설명 자료

■ 각 수준의 역할 분담

- ① 국가 : '집중 과정'에 관한 개괄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권장하며,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② 교육청 :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른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 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집중 과정의 설계 및 과목 개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 ③ 단위 학교 :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필요한 집중 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 주체별 선택 및 편성·운영 권한

- ①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
- '교과군 공통 선택' 영역과 '집중 과정 선택'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가능함
 - 구체적 결정 방식은 교육청이 관내 고등학교 상황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 ※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지원과 관리 기능 강화
 - 의사결정 다층화에 의한 번거로움 감안, 단위 학교 재량권 발휘 여지 확대
 - 교육과정 편성 노력 절감, 단위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과 관리 강화
 - 예술, 체육, 직업 과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원
- ②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
- '교과군 공통 선택'영역과 '집중 과정 선택'영역에서도 가능
 - 특히 '자율 선택'영역에서 가능함
- ③ 학생의 선택권
- 1차 선택 : '교과군 공통 선택' 과목군 내에서 1~2과목 부분적으로 선택
 - 2차 선택 : '집중 과정'선택 및 '집중 과정 내'에서의 과목 선택
 - ※ 학교 여건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보다 세부된 집중과정 개설 가능
 - 3차 선택 : '자율 선택'에서의 선택

■ 예술·체육과정, 일반계 고교내 직업 과정 등 소수 과정에 대한 대책

- ① 국가수준에서는 과정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제시
- ②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과정 개설 여부 및 개설 과정 결정(예술·체육 분야 가운데 수요를 반영, 교육청 및 학교가 운영가능한 과정 개설)
- ③ 단위 학교에서 예술·체육 과정 개설 불가능할 경우
- 학생의 진로 계발을 촉진하고 진학 준비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된 과정(문과 또는 이과) 이수에 필요한 과목의 차별적 이수 허용
 - 교육청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 활용 지원, 관리
 - ※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교 외 기관에서의 이수 과정 관련 지침
 -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 가. 시도 교육청 - (1) 편성
 - " (타)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 다. 학교 - (1)편성 - <공통 지침> - (다)고등학교
 - " ⑩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다. <제3안>('집중 과정' 제시)

1) 기본 특징과 편제

- <제2안>의 기본 성격을 유지하되, '집중 과정'을 편제표에 제시함으로써 <제2안>에 비해 다소 구속성을 가짐
- 단,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되는 만큼 '집중 과정'의 종류는 개괄적으로 제시함. 인문 과정이나 자연 과정, 기타 과정을 근간으로 두되, 보다 세분된 과정은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 둠
- '기타' 과정에서는 예술·체육 과정이나 직업 과정 등, 단위 학교와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개설하도록 함

<표 15> <제3안>에 따른 교육과정 편제

구 분	10학년 공통기 본 교과	11, 12학년 선택 과목	선택 영역 및 선택 방식				
			교과군 공통	집중 과정			자율
			인문	자연	기타*		
교 과	국 어	국어()	국어A(6), 국어B(6), 국어C(6), 국어D(6), 국어E(6), 국어F(6)	택 1	택 4	택 5	단위 학교가 자율적 으로 편성· 운영함
	도 덕	도덕()	윤리A(4), 윤리B(6)				
	사 회	사회() (국사)	지리A(4), 지리B(6), 역사A(4), 역사B(6), 일사A(4), 일사B(6)				
	수 학	수학()	수학A(6), 수학B(6), 수학C(6), 수학D(6), 수학E(6), 수학F(6)	택 1	택 4	택 5	
	과 학	과학()	물리A(4), 물리B(6), 화학A(4), 화학B(6) 생물A(4), 생물B(6), 지학A(4), 지학B(6)				
	기 술· 가 정	기술· 가정()	기술·가정A(4), 기술·가정B(4), 기술·가정C(4), 기술·가정D(4), 기술·가정E(4), 기술·가정F(4)				
	체 육 음 악 미 술	체육() 음악() 미술()	체육A(4), 체육B(4), 체육C(6이상)* 음악A(4), 음악B(4), 음악C(6이상)* 미술A(4), 미술B(4), 미술C(6이상)*	택 1			
	과 외국어	영어()	영어A(6), 영어B(6), 영어C(6), 영어D(6), 영어E(6), 영어F(6)		택 1	택 2	
		.	독일어A(6), 독일어B(4), 프랑스어A(6), 프랑스어B(4) 스페인어A(6), 스페인어B(4), 중국어A(6), 중국어B(4) 일본어A(6), 일본어B(4), 러시아어A(6), 러시아어B(4) 아랍어A(6), 아랍어B(4)	택 1			
	한 문 교 양	.	한문A(6), 한문B(4)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환경(4), 종교(4) 기타(4)	택 2			
이수 단위 및 비율	()	(128)			최소 이수 비율 45%		
재량활동	()	.					
특별활동	()	(8)					
소계	(68)	(136)					
총이수단위		204					

2) <제3안>에 따른 추가 편성·운영 지침 : ‘선택 영역’ 안내

- (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2, 3학년 선택 교육과정에서의 과목 이수 체제는 다음과 같이 ‘교과군 공통 선택’과 ‘집중 과정 선택’, ‘자율 선택’으로 구분한다.
- (나) ‘**교과군 공통 선택**’ : 10학년까지의 공통 기본 교과 이수와 11, 12학년에서의 집중 과정 이수를 연계하는 동시에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기본 교양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군의 균형적 이수를 위하여 ①인문·사회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②수학·과학 교과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예술·체육 교과군(체육, 음악, 미술), ④영어 교과군, ⑤제2외국어 교과군, ⑥한문·교양 교과군으로 나누어 교과군별로 최소 1 과목을 이수하되, 한문·교양 교과군에서는 최소 2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학생이 이수하고자 하는 집중 과정에 해당하는 교과군의 경우에는 이수를 면할 수도 있다.
- (다) ‘**집중 과정 선택**’ : 11, 12학년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 소질 계발에 맞는 선택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 학교는 지역 실정과 학교 상황,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과 또는 교과군을 근간으로 집중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과 학교, 학생의 필요에 따라 보다 세분된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집중 과정에서는 해당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과의 선택 과목을 교과 전체 이수 단위(128단위) 가운데 가급적 45%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예술 혹은 체육 교과와 관련된 집중 과정의 경우, 학생은 자신이 이수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목을 최소 2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라) ‘**자율 선택**’ : 학습자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단위 학교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교과군 공통 선택이나 집중 과정 선택에서 이수한 과목 이외에, 단위 학교와 학생이 필요하여 판단되는 과목을 선택하거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과목이나 활동을 단위 학교가 개설, 운영할 수 있다.

※ 이상의 <제2안>과 <제3안>에서 제안한 ‘집중 과정’과 관련해서 본 연구진은 현장 모의 적용 작업을 대·중·소규모별 고등학교를 3개교씩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지면상 규모별 1개교의 결과만 [부록 4] 에 제시하였음.

4.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추가 제안

이하의 내용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함.

앞에서 다룬 세 가지 개선 안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할 내용으로 제안하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정체성 측면,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지원 대책,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계획과 실천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교육과정 개선 안이 수렴되는 대로 모의 현장 적용을 거쳐 그 타당성을 다 각도에서 심도있게 검증해야 할 것임.

가. 고등학교 졸업 이수 단위 수의 설정

<제안 내용>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이수해야 할 총 136단위 가운데 90%이상 이수할 경우 졸업을 위한 최소 단위 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기대 효과>

- 고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촉진
- 일반계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의 다양화 추세 부응, 다양한 요구 충족
 - 예) 직업 학교 또는 기술 학원 위탁 교육 이수자
 - 예) AP 과정 이수자
 - 예) 대안학교 위탁 교육 이수자
 - 예) 예술 또는 체육 계열 진학자 등
- 이수 단위 감축으로 고등학교 학습 부담 감축

<관련 사례 1> 졸업 이수 학점 제시 : 대만, 중국, 미국의 일부 주, 호주, 일본

<관련 사례 2> 외국의 고등학교 이수 학점 규정에 비해 우리의 경우 많은 편

- 대만 : 160단위 이상
- 미국 : 158 ~ 165단위(학생의 필요와 진로에 따라 이수 단위 수가 다양함)
- 일본 : 74단위 이상
- 핀란드 : 75단위 이상

<우려 사항>

- 이수 단위 수 감축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고교 학습에서의 긴장감 상실
- 일부 교과(목) 수업 시수 감축, 교원간 수업 시수 차이 발생
- 집단간 요구나 시각 차로 인한 갈등 발생

나. 고등학교 2, 3학년 총 이수 단위 수의 증감 운영

<제안 내용>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이수해야 할 총 136단위 가운데 시도 교육감의 승인 하에 12 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기대 효과>

- 단위 학교와 학생의 필요에 따른 학교중심,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추구
- 기존의 일률적 이수 단위 규정의 경직성 탈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 부여
- 공통기본 교육과정 이수 후 개별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2, 3학년의 학습 초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학습 기회 제공

<관련 사례 1> 외국의 국가 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수업 시수 적게 배정

- 핀란드 : 중학교는 연간 914시간(60분 기준), 고등학교는 713시간
- 일본 : 중학교는 817시간, 고등학교는 719시간

<관련 사례 2> 외국의 국가 고등학교의 학년별 수업 시수 차등 설정

- 대만 : 고등학교 1, 2학년은 1100시간, 3학년은 1033시간
- 중국 : 고등학교 1학년은 1083시간, 2학년은 1055시간, 3학년은 1026시간

<우려 사항>

- 감축 운영 시 향후 주 5일 수업제 대비 수업 시수 감축과 함께 학력 저하 우려
- 감축시의 집단간(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급간 갈등이나 불만 우려
- 학교간 차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어려움

다. 선택 과목의 개설 범위 확대

<제안 내용>

필요에 따라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제표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도 단위 학교가 개설할 수 있도록 개방

<기대 효과>

-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촉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학생 집단의 필요에 따른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추구
-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 내용의 대응력 신장
- 속칭 ‘이중 시간표’ 운영의 관행 방지

<관련 사례>

- 현행 7차 교육과정

- 다. 학교 (1) 편성<공통지침> (바)항 : ‘교육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편제표 하단의 보충 설명 : ‘교양 교과에서 심화 선택 과목이 필요한 경우 [표 3]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 일본 : 국가수준에서 설정한 74단위 외에 학교 설정 과목을 20단위 범위내 증배 운영

<우려 사항>

-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된 과목 편중 우려, 교과간, 과목간 갈등 혹은 불만 야기
-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효력 상실 내지 소극적 대응
- 교육적 의도와 중립적 가치에서 벗어난 특정 관점에 의한 과목 개설 우려
- 편법 운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한선 설정 필요

라. 선택 과목의 기준 단위 폐지

<제안 내용>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교과별 선택 과목의 기준 단위를 제시하지 않고, 단위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수 단위를 설정하여 융통적으로 허용

<기대 효과>

-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단위 학교의 상황(인적·물적 수급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

<관련 사례>

- 현행 7차 교육과정 : 일반계 고등학교 대상의 보통 교과에서는 사례가 없음. 실업고, 특수목적고의 ‘전문 교과’의 경우 과목명만 제시하고 기준 단위는 설정되지 않음

<우려 사항>

- 과목별 교육 내용 양과 난이도 설정의 기준 부재, 교육 내용의 적정 기준 부재로 교과서 집필상의 어려움 초래
- 입시 관련 과목의 이수 단위 수 확대, 편중 우려, 교과간, 과목간 갈등 야기
-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구현에 앞서 단위 학교의 편익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 학교간, 지역간 격차 발생시 부작용 예상
- 대입시 관련 국가 수준 시험 범위 설정의 어려움
- 편법 운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 필요

IV. 결 론

현행 교육과정의 강점과 약점,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솔한 수용 자세, 강력한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작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선 과업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가능하고, 개선 절차 또한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산출의 80%가 투입의 20%에 의해 결정된다는 ‘파레토의 법칙’에서처럼 정확하고 다각적 문제 진단에서 출발함으로써 단순한 ‘감(感)’에 의한 문제 해결을 탈피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개선 수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이라는 실천적 맥락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복잡한 문제점들과 우선 순위 그리고 개선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 내용과 범위를 토대로 하여 교육과정 변화 수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임을 재확인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측면, 즉 교육과정 변화의 ‘내용’과 함께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가 고등학교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표방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것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고려 사항은 교육과정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수혜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역, 단위 학교, 학습자 입장에서의 해석과 이들 집단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능한 한 오류를 줄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요 참고 문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4). 우수이공계 인력 확보를 위한 고교 교육과 대입제도 개선 방안(안).
교육인적자원부(2004). 비공식 통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 2005). 교육 통계 연보.
박순경 외 3인(2002). **고등학교 필수 이수 교과목 축소 방안 연구**. 연구보고 CRC 2002-12.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박순경(2004). **수준별 이동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방안.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자료 RM 2004-43, pp. 21-39.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 (2002), (2003).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Ⅰ), (Ⅱ), (Ⅲ)**. 연구보고 RRC 2001-7, RRC 2002-1. RRC 2003-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제7차 교육과정의 쟁점 분석 연구**. 연구보고 RRC 2004-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연구보고 RRC 2004-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허경철 외 5인(2004).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 설정 연구**. 연구보고 RRC 2004-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외 문헌 생략

부록 1 : 2004~2005년 선택 과목 이수 현황

<표 1> 과목군별 일반선택과목의 이수 현황 비교표(2004 ~ 2005년)

과목군	과목명(이수단위)	모집단 대비 이수 비율			과목군 내 이수 비율			과목별 이수 비율		이수 학생수	
		2004년	2005년	비율차*	2004년	2005년	비율차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인문·사회 과목군	국어생활(4)	30.3	31.3	+1	62.4	65.5	+3.1	9.7	10.1	245,147	257,582
	시민윤리(4)	11.4	9.5	-1.9	23.4	19.9	-3.5	3.7	3.1	92,022	78,188
	인간사회와 환경(4)	6.9	7.0	0.1	14.2	14.6	+0.4	2.2	2.3	55,927	57,416
	계	48.6	47.8	-0.8	100	100		15.6	15.5	393,096	393,186
과학·기술 과목군	실용수학(4)	10.8	10.9	+0.1	18.1	18.2	+0.1	3.5	3.5	87,104	89,266
	생활과 과학(4)	11.0	10.7	-0.3	18.4	17.9	-0.5	3.5	3.5	88,758	87,770
	정보사회와 컴퓨터(4)	37.8	38.1	+0.3	63.5	63.9	+0.4	12.2	12.3	305,727	313,106
	계	59.6	59.7	+0.8	100	100		19.2	19.3	481,589	490,142
예·체능 과목군	체육과 건강(4)	46.9	48.1	+2.2	69.7	70.5	+0.8	15.1	15.6	378,877	395,147
	음악과 생활(4)	10.2	10.2	0	15.2	14.9	-0.3	3.3	3.3	82,677	83,684
	미술과 생활(4)	10.2	9.9	-0.3	15.1	14.6	-0.5	3.3	3.2	82,331	81,512
	계	67.3	68.2	+0.9	100	100		21.6	22.1	543,885	560,343
외국어 과목군	독일어 I (6)	4.9	3.8	-1.1	9.9	7.6	-2.3	1.6	1.2	39,327	31,023
	프랑스어 I (6)	3.5	3.1	-0.4	7.2	6.3	-0.9	1.1	1.0	28,457	25,343
	스페인어 I (6)	0.5	0.5	0	1.1	1.0	-0.1	0.2	0.2	4,303	4,034
	중국어 I (6)	9.0	11.9	+2.9	18.4	24.0	+5.6	2.9	3.8	72,858	97,681
	일본어 I (6)	30.9	30.1	-0.8	63.1	60.8	-2.3	9.9	9.7	249,584	247,295
	러시아어 I (6)	0.2	0.1	-0.1	0.3	0.3	0	0.0	0.1	1,219	1,210
	아랍어 I (6)	0.0	0	0	0.0	0	0	0.0	0	134	0
계	49.0	49.5	+0.5	100	100		15.7	16	395,882	406,586	
교양 과목군	한문(6)	42.1	42.3	+0.2	48.6	50.4	+1.8	13.5	13.7	340,448	347,908
	교련(6)	6.1	4.3	-1.8	6.9	5.1	-1.8	1.9	1.4	48,931	35,192
	철학(4)	3.0	2.6	-0.4	3.4	3.1	-0.3	1.0	0.9	23,824	21,661
	논리학(4)	0.9	1.0	+0.1	1.1	1.2	+0.1	0.3	0.3	7,566	8,074
	심리학(4)	1.0	1.0	0	1.1	1.2	+0.1	0.3	0.3	8,174	8,281
	교육학(4)	2.7	2.5	-0.2	3.2	3.0	-0.2	0.9	0.8	22,095	20,661
	생활경제(4)	5.3	5.5	+0.2	6.2	6.6	+0.4	1.7	1.8	43,174	45,552
	종교(4)	3.4	3.5	+0.1	4.0	4.2	+0.2	1.1	1.1	27,701	29,158
	생태와 환경(4)	15.2	15.2	0	17.5	18.2	+0.7	4.9	4.9	122,530	125,303
	진로와 직업(4)	6.1	5.4	-0.7	7.0	6.4	-0.6	1.9	1.7	48,872	44,036
	기타(4)	0.9	0.5	-0.4	1.0	0.6	-0.4	0.3	0.2	7,051	4,439
계	86.7	83.8	-2.9	100	100		27.8	27.1	700,366	1,092,412	
총계	311.2	309	-2.2	100	100		100	100	2,514,818	2,540,522	

* 비율차는 2004년도 비율을 기준으로 한 2005년도의 증감을 나타

냄.

<표 2> 교과별 심화선택과목의 이수 현황 비교표(2004 ~ 2005년)

교과별 심화선택과목		구분	모집단 대비 이수 비율			과목내 이수 비율			과목별 이수 비율		이수 학생 수	
			2004년	2005년	비율차	2004년	2005년	비율차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국어	문학(8)	49.4	50.4	+1.0	40.6	40.8	+0.2	6.5	6.5	399,313	414,096	
	독서(8)	32.7	33.0	+0.3	26.9	26.8	-0.1	4.3	4.3	264,018	271,576	
	작문(8)	24.7	25.2	+0.5	20.3	20.4	+0.1	3.2	3.3	199,855	207,157	
	문법(4)	7.5	8.2	+0.7	6.2	6.6	+0.4	1.0	1.1	60,502	67,265	
	화법(4)	7.3	6.7	-0.6	6.0	5.4	-0.6	0.9	0.9	58,672	55,157	
	계	121.6	123.5	+1.9	100.0	100		15.9	16.1	982,360	1,015,251	
수학	수학 I (8)	51.0	51.0	0	42.6	41.8	-0.8	6.7	6.6	412,265	419,114	
	확률과 통계(4)	23.0	25.1	+2.1	19.2	20.6	+1.4	3.0	3.2	185,789	206,339	
	수학 II (8)	21.5	21.3	-0.2	17.9	17.4	-0.5	2.8	2.7	173,792	174,771	
	미분과 적분(4)	18.6	18.5	-0.1	15.5	15.2	-0.3	2.4	2.4	150,146	151,846	
	이산수학(4)	5.8	6.0	+0.2	4.8	5.0	+0.2	0.8	0.8	46,701	49,557	
	계	119.9	121.9	+2	100.0	100		15.7	15.7	968,693	1,001,627	
사회	한국 근현대사(8)	32.6	34.2	+1.6	23.5	24.1	+0.6	4.3	4.4	263,461	281,039	
	사화문화(8)	27.1	27.7	+0.6	19.5	19.5	0	3.5	3.6	218,738	227,835	
	한국지리(8)	26.7	28.7	+2	19.3	20.2	+0.9	3.5	3.7	215,870	235,690	
	경제(6)	12.8	12.7	-0.1	9.2	8.9	-0.3	1.7	1.6	103,305	104,731	
	정치(8)	11.5	12.4	+0.9	8.3	8.7	+0.4	1.5	1.6	93,072	101,594	
	법과 사회(6)	10.5	10.0	-0.5	7.6	7.0	-0.6	1.4	1.3	84,949	82,416	
	세계사(8)	9.6	8.8	-0.8	6.9	6.2	-0.7	1.3	1.1	77,425	72,045	
	세계지리(8)	5.8	5.3	-0.5	4.2	3.7	-0.5	0.8	0.7	46,927	43,282	
	경제지리(6)	1.9	2.4	+0.5	1.5	1.7	+0.2	0.2	0.3	15,120	19,459	
	합계	138.5	142.2	+3.7	100	100		18.2	18.3	1,118,867	1,168,091	
과학	생물 I (4)	32.0	31.9	-0.1	22.5	22.9	+0.4	4.2	4.1	258,487	261,939	
	화학 I (4)	25.6	24.2	-1.4	18.1	17.3	-0.8	3.3	3.1	207,068	198,575	
	지구과학 I (4)	23.3	23.1	-0.2	16.4	16.5	+0.1	3.1	3.0	188,645	189,498	
	물리 I (4)	22.2	21.6	-0.6	15.7	15.5	-0.2	2.9	2.8	179,727	177,388	
	화학 II (6)	13.9	14.7	+0.8	9.8	10.6	+0.8	1.8	1.9	112,503	121,130	
	생물 II (6)	12.2	12.3	+0.1	8.6	8.8	+0.2	1.6	1.6	98,530	101,141	
	물리 II (6)	7.9	7.3	-0.6	5.5	5.2	-0.3	1.0	0.9	63,610	59,943	
	지구과학 II (6)	4.7	4.4	-0.3	3.4	3.2	-0.2	0.6	0.6	38,331	36,034	
	합계	141.8	139.5	-2.3	100	100		18.5	18	1,146,901	1,145,648	
영어	영어 I (8)	46.8	47.7	+0.9	34.4	34.3	-0.1	6.1	6.1	377,980	391,691	
	영어 II (8)	37.1	37.2	+0.1	27.3	26.7	-0.6	4.9	4.8	300,184	305,448	
	영어독해(8)	29.9	31.9	+2	22.0	22.9	+0.9	3.9	4.1	241,360	262,004	
	영어회화(8)	20.4	20.2	-0.2	15.0	14.5	-0.5	2.7	2.6	164,768	165,642	
	영작문(8)	1.8	2.2	+0.4	1.3	1.6	+0.3	0.2	0.3	14,245	18,253	
	계	136	139.2	+3.2	100.0	100		17.8	17.9	1,098,537	1,143,038	
체육	체육실기(4)	17.5	18.1	+0.6	75.0	78.9	+3.9	2.3	2.3	141,756	148,597	
	체육이론(4)	5.8	4.8	-1	25.0	21.1	-3.9	0.8	0.6	47,175	39,736	
	계	23.3	22.9	-0.4	100.0	100		3.1	2.9	188,931	188,333	
음악	음악실기(4)	1.1	0.8	-0.3	56.1	53.5	-2.6	0.1	0.1	8,521	6,852	
	음악이론(4)	0.8	0.7	-0.1	43.9	46.5	+2.6	0.1	0.1	6,672	5,945	
	계	1.9	1.5	-0.4	100.0	100		0.2	0.2	15,193	12,797	
미술	미술실기(4)	1.3	1.0	-0.3	59.4	57.0	-2.4	0.2	0.1	10,697	8,578	
	미술이론(4)	0.9	0.8	-0.1	40.6	43.0	+2.4	0.1	0.1	7,297	6,467	
	계	2.2	1.8	-0.4	100.0	100		0.3	0.2	17,994	15,045	
도덕	윤리와 사상(4)	23.7	26.7	+3	65.3	65.5	+0.2	3.1	3.4	191,863	219,467	
	전통윤리(4)	12.6	14.1	+1.5	34.7	34.5	-0.2	1.6	1.8	101,881	115,780	
	계	36.3	40.8	+4.5	100.0	100		4.7	5.2	293,774	335,247	
기술가정	가정과학(6)	8.0	7.4	-0.6	64.0	65.2	+1.2	1.0	1.0	64,481	60,649	
	공업기술(6)	2.3	2.1	-0.2	18.7	18.8	+0.1	0.3	0.3	18,820	17,502	
	기업경영(6)	1.6	1.3	-0.3	12.8	11.6	-1.2	0.2	0.2	12,880	10,758	
	농업과학(6)	0.4	0.4	0	3.6	3.3	-0.3	0.05	0.05	3,607	3,053	
	해양과학(6)	0.1	0.1	0	0.9	1.1	+0.2	0.01	0.01	934	1,003	
	계	12.4	11.3	-1.1	100.0	100		1.56	1.56	100,722	92,965	

제2외국어	일본어 II (6)	15.1	15.5	+0.4	59.4	61.9	+2.5	2.0	2.0	121,979	127,562
	중국어 II (6)	4.9	4.9	0	19.3	19.4	+0.1	0.6	0.6	39,629	40,087
	독일어 II (6)	2.8	2.4	-0.4	11.1	9.4	-1.7	0.4	0.3	22,729	19,459
	프랑스어 II (6)	2.1	2.0	-0.1	8.4	8.0	-0.4	0.3	0.3	17,282	16,393
	스페인어 II (6)	0.3	0.3	0	1.3	1.0	-0.3	0.03	0.03	2,676	2,058
	러시아어 II (6)	0.1	0.1	0	0.5	0.3	-0.2	0.01	0.01	992	627
	아랍어 II (6)	0.0	0	0	0.0	0	0	0	0	0	0
계	25.3	25.2	-0.1	100.0	100		3.34	3.24	205,287	206,186	
한문	한문고전(6)	5.7	5.8	+0.1	100.0	100	0	0.7	0.7	45,696	47,477
	계	5.7	5.8	+0.1	100.0	100		0.7	0.7	45,696	47,477
총계		764.9	775.6	+10.7	100.0	100		100	100	6,182,955	6,371,705

<표 3> 교과별 일반·심화선택과목의 이수 현황 비교표(2004 ~ 2005년)

일반·심화선택과목			구 분			모집단 대비 이수 비율			교과 내 이수 비율			이수 학생 수	
			2004년	2005년	비율차	2004년	2005년	비율차	2004년	2005년			
국어	일선	국어생활(4)	30.3	31.3	+1.0	20.0	20.2	+0.2	245,147	257,582			
		합계	151.9	154.8	+2.9	100	100		1,227,507	1,219,681			
	심선	문학(8)	49.4	50.4	+1.0	32.5	32.5	0	399,313	414,096			
		독서(8)	32.7	33.0	+0.3	21.5	21.3	-0.2	264,018	271,576			
		작문(8)	24.7	25.2	+0.5	16.3	16.3	0	199,855	207,157			
		문법(4)	7.5	8.2	+0.7	4.9	5.3	+0.4	60,502	67,265			
합계	7.3	6.7	-0.6	4.8	4.4	-0.4	58,672	55,157					
사회	일선	인간사회와 환경(4)	6.9	7.0	+0.1	4.8	4.7	-0.1	55,927	57,416			
		합계	145.4	149.2	+3.8	100	100		1,174,794	1,225,507			
	심선	한국지리(8)	26.7	28.7	+2	18.4	19.2	+0.8	215,870	235,690			
		세계지리(8)	5.8	5.3	-0.5	4.0	3.5	-0.5	46,927	43,282			
		경제지리(6)	1.9	2.4	+0.5	1.3	1.7	+0.4	15,120	19,459			
		계	34.4	36.4	+2.0	23.7	24.4	+0.7	277,917	336,388			
		한국 근·현대사(8)	32.6	34.2	+1.6	22.4	22.9	+0.5	263,461	281,039			
		세계사(8)	9.6	8.8	-0.8	6.6	5.9	-0.7	77,425	72,045			
		계	42.2	43	+0.8	29	28.8	-0.2	340,886	617,427			
		법과 사회(6)	10.5	10.0	-0.5	7.2	6.7	-0.5	84,949	82,416			
		정치(8)	11.5	12.4	+0.9	7.9	8.3	+0.4	93,072	101,594			
		경제(6)	12.8	12.7	-0.1	8.8	8.5	-0.3	103,305	104,731			
		사회·문화(8)	27.1	27.7	+0.6	18.6	18.6	0	218,738	227,835			
계	61.9	62.8	+0.9	42.5	42.1	-0.4	500,064	906,168					
수학	일선	실용수학(4)	10.8	10.9	+0.1	8.3	8.2	-0.1	87,104	89,266			
		합계	130.7	132.8	+2.1	100	100		1,055,797	2,266,843			
	심선	수학 I (8)	51.0	51.0	0	39.0	38.4	-0.6	412,265	419,114			
		확률과 통계(4)	23.0	25.1	+2.1	17.6	18.9	+1.3	185,789	206,339			
		수학 II (8)	21.5	21.3	-0.2	16.5	16.0	-0.5	173,792	174,771			
		미분과 적분(4)	18.6	18.5	-0.1	14.2	13.9	-0.3	150,146	151,846			
이산수학(4)	5.8	6.0	+0.2	4.4	4.6	+0.2	46,701	49,557					
과학	일선	생활과 과학(4)	11.0	10.7	-0.3	7.2	7.1	-0.1	88,758	87,770			
		합계	152.8	150.2	-2.6	100	100		1,235,659	1,233,418			
	심선	물리 I (4)	22.2	21.6	-0.6	14.5	14.4	-0.1	179,727	177,388			
		물리 II (6)	7.9	7.3	-0.6	5.1	4.9	-0.2	63,610	59,943			
		계	30.1	28.9	-1.2	19.6	19.2	-0.4	243,337	265,158			
		화학 I (4)	25.6	24.2	-1.4	16.8	16.1	-0.7	207,068	198,575			
		화학 II (6)	13.9	14.7	+0.8	9.1	9.8	+0.7	112,503	121,130			
		계	39.5	38.9	-0.6	25.9	26.0	+0.1	319,571	463,733			
		생물 I (4)	32.0	31.9	-0.1	20.9	21.2	+0.3	258,487	261,939			
		생물 II (6)	12.2	12.3	+0.1	8.0	8.2	+0.2	98,530	101,141			
		계	44.2	44.2	0	28.9	29.4	+0.5	357,017	725,672			
		지구과학 I (4)	23.3	23.1	-0.2	15.3	15.4	+0.1	188,645	189,498			
		지구과학 II (6)	4.7	4.4	-0.3	3.1	2.9	-0.2	38,331	36,034			
계	28.0	27.5	-0.5	18.4	18.3	-0.1	226,976	915,170					
도덕	일선	시민윤리(4)	11.4	9.5	-1.9	23.9	18.9	-5	92,022	78,188			
		합계	23.7	26.7	+3	49.7	53.1	+3.4	191,863	219,467			
	심선	전통윤리(4)	12.6	14.1	+1.5	26.4	28.0	+1.6	101,881	115,780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합계	47.7	50.3	+2.6	100	100		385,766	1,531,073
기술 가정	일선	정보사회와 컴퓨터(4)	37.8	38.1	+0.3	75.2	77.1	+1.9	305,727	313,106
		가정과학(6)	8.0	7.4	-0.6	15.9	14.9	-1	64,481	60,649
	심선	공업기술(6)	2.3	2.1	-0.2	4.6	4.3	-0.3	18,820	17,502
		기업경영(6)	1.6	1.3	-0.3	3.2	2.7	-0.5	12,880	10,758
		농업과학(6)	0.4	0.4	0	0.9	0.8	-0.1	3,607	3,053
		해양과학(6)	0.1	0.1	0	0.2	0.2	0	934	1,003
	합계	50.2	49.4	-0.8	100	100		406,449	1,936,141	
체육	일선	체육과 건강(4)	46.9	48.1	+1.2	66.7	67.7	+1	378,877	395,147
		체육실기(4)	17.5	18.1	+0.6	25.0	25.5	+0.5	141,756	148,597
	심선	체육이론(4)	5.8	4.8	-1	8.3	6.8	-1.5	47,175	39,736
		합계	70.2	71	+0.8	100	100		567,808	2,479,885
음악	일선	음악과 생활(4)	10.2	10.2	0	84.5	86.7	+2.2	82,677	83,684
		음악실기(4)	1.1	0.8	-0.3	8.7	7.1	-1.6	8,521	6,852
	심선	음악이론(4)	0.8	0.7	-0.1	6.8	6.2	-0.6	6,672	5,945
	합계	12.1	11.7	-0.4	100	100		97,870	2,570,421	
미술	일선	미술과 생활(4)	10.2	9.9	-0.3	82.1	84.4	+2.3	82,331	81,512
		미술실기(4)	1.3	1.0	-0.3	10.6	8.9	-1.7	10,697	8,578
	심선	미술이론(4)	0.9	0.8	-0.1	7.3	6.7	-0.6	7,297	6,467
		합계	12.4	11.7	-0.7	100	100		100,325	2,660,511
영어	심선	영어 I (8)	46.8	47.7	+0.9	34.4	34.3	-0.1	377,980	391,691
		영어 II (8)	37.1	37.2	+0.1	27.3	26.7	-0.6	300,184	305,448
		영어독해(8)	29.9	31.9	+2	22.0	22.9	+0.9	241,360	262,004
		영어회화(8)	20.4	20.2	-0.2	15.0	14.5	-0.5	164,768	165,642
		영작문(8)	1.8	2.2	+0.4	1.3	1.6	+0.3	14,245	18,253
		합계	136	139.2	+3.2	100	100		1,098,537	3,785,296
제2 외국어	일선	일본어 I (6)	30.9	30.1	-0.8	41.5	40.4	-1.1	249,584	247,295
		중국어 I (6)	9.0	11.9	+2.9	12.1	15.9	+3.8	72,858	97,681
		독일어 I (6)	4.9	3.8	-1.1	6.6	5.1	-1.5	39,327	31,023
		프랑스어 I (6)	3.5	3.1	-0.4	4.7	4.1	-0.6	28,457	25,343
		스페인어 I (6)	0.5	0.5	0	0.7	0.7	0	4,303	4,034
		러시아어 I (6)	0.2	0.1	-0.1	0.2	0.2	0	1,219	1,210
	심선	아랍어 I (6)	0.0	0	0	0.0	0	0	134	0
		일본어 II (6)	15.1	15.5	-0.4	20.3	20.8	+0.5	121,979	127,562
		중국어 II (6)	4.9	4.9	0	6.6	6.5	-0.1	39,629	40,087
		독일어 II (6)	2.8	2.4	-0.4	3.8	3.2	-0.6	22,729	19,459
		프랑스어 II (6)	2.1	2.0	-0.1	2.9	2.7	-0.2	17,282	16,393
		스페인어 II (6)	0.3	0.3	0	0.4	0.3	-0.1	2,676	2,058
		러시아어 II (6)	0.1	0.1	0	0.2	0.1	-0.1	992	627
		아랍어 II (6)	0.0	0	0	0.0	0	0	0	0
	합계	74.3	74.7	-0.4	100	100		601,169	4,398,068	
한문 교련 교양	일선	한문(6)	42.1	42.3	+0.2	45.6	47.1	+1.5	340,448	347,908
		심선	한문고전(6)	5.7	5.8	+0.1	6.1	6.4	+0.3	45,696
	일선	교련(6)	6.1	4.3	-1.8	6.6	4.8	-1.8	48,931	35,192
		생태와 환경(4)	15.2	15.2	0	16.4	17.0	+0.6	122,530	125,303
		진로와 직업(4)	6.1	5.4	-0.7	6.6	6.0	-0.6	48,872	44,036
		생활경제(4)	5.3	5.5	+0.2	5.8	6.2	+0.4	43,174	45,552
		종교(4)	3.4	3.5	+0.1	3.7	4.0	+0.3	27,701	29,158
		철학(4)	3.0	2.6	-0.4	3.2	2.9	-0.3	23,824	21,661
		교육학(4)	2.7	2.5	-0.2	3.0	2.8	-0.2	22,095	20,661
		논리학(4)	0.9	1.0	+0.1	1.0	1.1	+0.1	7,566	8,074
		심리학(4)	1.0	1.0	0	1.1	1.1	0	8,174	8,281
		기타(4)	0.9	0.5	-0.4	0.9	0.6	-0.3	7,051	4,439
		합계	92.4	89.6	-2.8	100	100		746,062	5,131,371

부록 2 : 외국 국가수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필수와 선택 규정

국가	최소 이수 단위/시간	현행 우리 단위로 환산시	필수과정 및 과목과 이수 단위	선택 대상	선택과정(과목) 단위수
일본	74단위	132단위 (=74×2×35÷34)	총 39~42단위 보통교과: 31단위 종합적학습: 3~6단위 특별활동: 3단위	과목중심	32~35단위
대만	180~198 학점 (졸업 이수 학점은 160학점)	188단위 (=160×40÷34)	140~142학점	과목중심 (필수 과목의 비율이 매우 높음 : 78%)	최소 40학점
핀란드	75단위	151단위 (=75×2×45÷50×38÷34)	47~51단위	과목중심 (필수 과목의 비율 높음 : 63~68%)	24~28단위
중국	168학점	169단위 (=168×19÷17×45÷50)	168학점 (필수교과12개 +한정선택 +노동기술 +사회실천)	과목중심 (1, 2학년) 과정중심(3학년) (문과, 이과, 외국어, 예술, 체육, 직업)	교과별 범위로 예시 (12개 필수 교과 중 사상정치, 체육, 예술 제외한 8개 영역에서 선택)
스웨덴	2,500단위	176.5단위 (=2500÷35.6×2×60÷50×35.6÷34)	총 750단위 (8개 핵심교과)	과정중심 (실업계열 포함 17개 과정 제시)	총 1,750단위 (과정필수1,450단위 자유선택 300단위)
네덜란드	3,200시간	226단위 (=3200÷20×60÷50×20÷17)	총 1,480시간 (8개 공통교과)	과정중심 (과학기술, 과학 건강, 상경, 문화 의 4개 과정 제 시)	총 1,720시간 (과정필수1,160시간 학생선택 560시간)
프랑스	자료 정리 중	자료 정리 중	과정에 따라 주당 25.5~ 27.5시간	과정중심 (일반고 : 인문, 경상, 과학의 3개 과정 제시 실업고 : 과학과 기술서비스 등 4개 과정 제시)	주당 27~32 시간 (과정필수, 공통선택, 자유선택으로 구분하 여 이수)

* 네덜란드의 중등학교는 5년제와 6년제이며 고등학교는 이들 학교의 후기 2-3년간 교육과정임.

부록 3 : 교과별 선택 과목 명과 이수 단위 (안) 수합 결과

※ 교과 연구진에서 제안한 이하의 교과별 선택 과목의 명칭과 단위 수는 잠정(안이며, 향후 선택 교육과정의 개선 안이 확정되는 대로 수정·보완될 것임

교과	과목 수	과목 명 및 이수 단위	비 고
국어	8	국어문화와국어생활(4), 대인관계와의사소통(4), 독서(6), 작문(6) 국어의이해와탐구(4), 문학 I (6), 문학 II(4), 미디어(매체)와언어(4)	
도덕	2	윤리와 사상(6), 가치와 사고(6)	
사회	9	한국지리(6), 세계(여행)지리(6), 지리와환경(환경지리)(6) 한국문화사(6), 세계문화사(6) 사회문화(6), 정치(6), 법과 사회(6), 경제(6)	
수학	6	수학 I -1, 수학 I -2, 수학 II -1, 수학 II -2, 실용수학A, 실용수학B	
과학	8	물리 I (6), 물리 II(4), 화학 I (6), 화학 II (4), 생물 I (6), 생물 II (4), 지학 I (6), 지학 II (4)	
기술가정컴 퓨터	6	생명과학(4) 해양과학(4) 가정과학(4), 창업과경영(4) 공학기술(4), 정보통신기술과컴퓨터(4)	
체육	3	건강관리(4), 운동과여가(4), 스포츠과학(6)	학습자 집단의 요구, 필요에 따라 교육청과 단 위 학교가 과목을 추가 개설 가능
음악	3	음악감상(4), 음악이론(4), 음악실기(6)	
미술	3	미술감상(4), 미술과미디어(4), 미술창작(6)	
영어	7	영어 I, 영어 II, 영어 III, 영어 IV, 영어 V, 영어회화, 영어작 문	
제2외국 어	14	독일어 I (6), 독일어 II(6), 프랑스어 I (6), 프랑스어 II(6) 스페인어 I (6), 스페인어 II(6), 중국어 I (6), 중국어 II(6) 일본어 I (6), 일본어 II(6), 러시아어 I (6), 러시아어 II(6) 아랍어 I (6), 아랍어 II(6)	
한문· 교양	9	한문 I (6), 한문 II(6),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환경(4), 종교(4), 기타(4) 등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요구 감안, 이외 과 목 개설 가능
계	76		

부록 4 : 고등학교 규모별 집중 과정 시뮬레이션 결과 예시

1. 대규모학교 사례- 서울 A고

A고의 일반 현황	인문과정 : 6개반, 자연과정 : 5개반, 예체능(체육)반 : 1개반 전체 : 36학급(학년당 12학급), 교사 : 71명
-----------	---

1. 집중 과정 예시안과 대규모 A고 사례의 비교

구분		<집중 과정 예시>				대규모 A고					
		교과군 공통	인문사회	수학과학	예술체육	인문사회		자연		체육	
						선택	비고	선택	비고	선택	비고
교과	국 어 도 회 사 회	택 1	택 4 택 5		택 2 택2~3	택 4 (24) 택 1 (6) 택 4 (22)		택 3(20) 택 2(10)	+ 4	택 3 (20) 택 3 (16)	0~+ 1
	수 학 과 기 가 술	택 1		택 4 택 5 -		택 2(14) 택 1(4) 택 1(4)	+ 3	택 4 (24) 택 5 (26) 택 1(4)		택 2(16) - 택 1(4)	+2
	체 육 음 미	택 1			택 4~5	택 2(8)	+ 1	택 2 (8)	+ 1	택 7 (32)	+ 1~2
	영 어	택 1	택2	택2	택2	택4 (24)	+ 1	택 4 (24)	+ 1	택 4 (24)	+ 1
	제2 외국어	택 1				택 2(12)	+ 1	택 1(6)		택 1(6)	
	한 문 교 과 교 과	택 2				택 2(10)		택 2(8)		택 2(10)	
최소 이수 비율		(45%)	(45%)	(45%)	128(51.6%)		128(48.4%)		128(51.6%)		

* 집중과정의 해당 교과군은 교과군 공동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음

2. 대규모 A고 학년별 이수단위표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체육과정
2학년	국어A(6) (1학기) 국어B(6) (2학기) 일사B(6) 수학A(6) 생물A(4) 기술가정A(4) 체육A(4) 영어A(6) (1학기) 영어B(6) (2학기) 제2외A(6) (택1) 한문A(6) 논리학(4)	국어A(8) 수학A(6) (1학기) 수학B(6) (2학기) 화학A(4) 생물A(4) 물리/지구과학A(4)(택1) 기술가정A(4) 체육A(4) 영어A(6) (1학기) 영어B(6) (2학기) 제2외A(4) (택1) 한문A(4) 논리학(4)	국어A(8) 수학A(8) 기술가정A(4) 체육A(4) 체육C(6) (1학기) 체육D(6) (2학기) 영어A(6) (1학기) 영어B(6) (2학기) 제2외A(6) (택1) 한문A(6) 논리학(4)
소계	64단위 (학기당 9과목)	64단위 (학기당 9과목)	64단위 (학기당 9과목)
3학년	국어C(6) (1학기) 국어D(6) (2학기) 윤리A(6) 일사A(4) 역사A/B(6) (택1) 지리A/B(6) (택1) 수학C(8) 체육B(4) 영어C(6) (1학기) 영어D(6) (2학기) 제2외B(6) (택1)	국어C(6) (1학기) 국어D(6) (2학기) 일사A(4) 지리A(6) 수학C(6) (1학기) 수학D(6) (2학기) 물리/지구과학A(6)(택1) (2학년에 이수 안한 과목) 화학/생물/(물리/지학)B(8)(택1) (물리/지학의 경우 2학년에 이수한 과목) 체육B(4) 영어C(6) (1학기) 영어D(6) (2학기)	국어C(6) (1학기) 국어D(6) (2학기) 일사A(4) 역사A(6) 지리A(6) 수학C(8) 체육E(4) (1학기) 체육F(4) (1학기) 체육G(4) (2학기) 체육H(4) (2학기) 영어C(6) 영어D(6)
소계	64단위 (학기당 9과목)	64단위 (학기당 8과목)	64단위 (학기당 8과목)
총계	128단위	128단위	128단위

3. 대규모 A고 과정별 이수과목과 단위 도표

○ A고 인문사회과정

30															
28															
26		지리A/B (택1)													
24	국어D	역사A/B (택1)					영어D								
22															
20	국어C	도덕A	수학C				영어C								
18															
16															
14	국어B	일사B	수학C				영어B	2외국어B	논리학						
12															
10	국어A	일사A	수학A	생물A	기술가정A	체육B	영어A	2외국어A	한문A						
8															
6															
4	국어A	일사A	수학A	생물A	기술가정A	체육A	영어A	2외국어A	한문A						
2															
단위/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음/미	외국어	제2외국어	교양						

○ A고 자연과정

30															
28															
26															
24			수학D	물, 화, 생, 지 B(택1)			영어D								
22	국어D				수학C	지/물A				영어C					
20															
18															
16	국어C		수학B	생물A			영어B								
14															
12	국어A	일사A	수학A	화학A	체육B		영어A	2외국어A	한문A						
10															
8															
6	국어A	지리A	수학A	물/지A	기술가정A	체육A	영어A	2외국어A	한문A						
4															
2															
단위/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음/미	외국어	제2외국어	교양						

○ A고 예체능과정(체육과정)

32						체육H										
30						체육G										
28						체육F	영어D									
26						체육E										
24	국어D					체육D	영어C									
22																
20	국어C	일사A	수학C				영어B		논리학							
18																
16																
14	국어A	역사A	수학A				영어A	2외국어A	한문A							
12																
10	국어A	역사A	수학A		기술가정A	체육A	영어A	2외국어A	한문A							
8																
6																
4	국어A	역사A	수학A		기술가정A	체육A	영어A	2외국어A	한문A							
2																
단위/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음/미	외국어	제2외국어	교양							

4. 대규모 A고의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표

교과	과목	국민 공통 교과	기준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주당 시수 합계	과목 시수	과목 인원 (기준 71)	개인 별 시수	과목 구분	비고				
				공통12		인사 6		체육1		자연5		인사 6								체육1		자연5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국어	국어	8	8	4	4																		
	국어A		6			6		4	4	4	4												
	국어B		6			6																	
	국어C		6										6		6								
	국어D		6										6	6		6							
한문	한문A		6			3	3	3	3	2	2												
교양	논리학		4			2	2	2	2	2	2								수업 적은 분 담당				
도덕	도덕	4	4	2	2																		
	윤리A		4									3	3						도				
	윤리B		6																				
사회	사회	8	8	4	4														사24, 지24				
	일사A		4								2	2	2	2	2	2							
	일사B		6			3	3																
	국사	4	4	2	2																		
	역사A		4								3	3	3	3					역사				
	역사B		6								③	③											
	지리A		4								3	3	3	3	3	3			지리				
지리B		6								③	③												
수학	수학	8	8	4	4																		
	수학A		6			3	3	4	4	6													
	수학B		6																				
	수학C		6								4	4	4	4	6				수학				
	수학D		6													6							
과학	과학	8	8	4	4														2학년				
	물리A		4							2	2								물A/지A 택1				
	화학A		4							2	2								화,생 필수				
	생물A		4			2	2			2	2								2학년에 물A				
	지구과학A		4							②	②				3	3			(지A)선택				
	물리B		6											4	4	35	125	2	14.1	과학 ->3학년 지A			
	화학B		6											④	④				(물A)선택				
생물B		6											④	④				물B(지B)/화B/생B					
지구과학B		6											④	④				중 택 1					
기타	기술가정	6	6	3	3																		
	기술가정A		4			2	2	2	2	2	2												
예체 미	체육	4	4	2	2																		
	체육A		4			2	2	2	2	2	2												
	체육B		4								2	2			2	2			체				
	체육C		6~					6															
	체육D		6~						6														
	체육E		6~											4									
	체육F		6~											4									
	체육G		6~											4									
	체육H		6~											4									
	음악	2	2	1	1															음			
미술	2	2	1	1															미				
영어	영어	8	8	4	4																		
	영어A		6			6		6		6													
	영어B		6			6		6		6													
	영어C		6								6		6	6		72	192	12	16	영			
	영어D		6								6		6	6									
제2 외국 어	중국어A		6			3	3	3	3	2	2												
	프랑스어A		6			③	③	③	③	②	②												
	일본어A		6			③	③	③	③	②	②												
	중국어B		4									3	3							외			
	프랑스어B		4									③	③										
일본어B		4									③	③											
특별활동	4	8	2	2	2	2	2	2	2	2	2	2	2	2	2								
재량 선택	2	4	1	1			③	③	⑨	⑨	②	②	⑨	⑨	⑧	⑧	④	④		수업 적은 분 담당			
합계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1,224	1,224	71	17.2	특활 +0.5 추가			
과목 수			10	10	9	9	9	9	11	11	9	9	8	8	8								

II. 중규모학교 사례- 충남 B고

B고의 일반 현황	인문과정 : 3개반, 자연과정 : 3개반, 예체능(미술)반 : 1개반 전체 : 21학급(학년당 7학급), 교사 : 43명
-----------	--

1. 집중 과정 예시안과 중규모 B고 사례의 비교

구분	<집중 과정 예시>				중규모 B고						
	교과군 공통	인문사회	수학과학	예체능	인문사회		수학과학		미술		
					선택	비고	선택	비고	선택	비고	
교과	국어	택1	택4	택2	택5(32)		택2(12)		택2(12)		
	도덕 사회		택5	택2~3	택1(4) 택6(28)	+2		+1	택1(4) 택3(12)	0~+1	
	수학 과학	택1		택4 택5	택2(12) -	+2	택5(34) 택7(34)	+2	택1(4)	0	
	기술·가정			-	택1(4)		택1(4)		택1(4)		
	체육 음악 미술	택1			택4~5	택2(8)	+1	택2(8)	+1	택9(56)	+1~2
	영어	택1		-		택4(24)	+3	택4(24)	+3	택4(24)	+3
	제2외국어	택1				택1(4)	0	택1(4)	0	택1(4)	0
한문 교양	택2				택3(12)	+1	택2(8)	0	택2(8)	0	
최소 이수 비율		(45%)	(45%)	(45%)	128 (47%)		128 (53%)		128 (64%)		

2. 중규모 B고 학년별 이수단위표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미술과정
2학년	국어A(7) 국어B(7) 지리A(4) 일사A(4) 역사A(4) 수학A(6) 기술가정A(4) 체육A(4) 영어A(6) 영어B(6) 제2외A(4) 한문A(4) 교양(4)	국어A(6) 수학A(7) 수학B(7) 물리A(4) 화학A(4) 생물A(4) 기술가정A(4) 체육A(4) 영어A(6) 영어B(6) 제2외A(4) 한문A(4) 교양(4)	국어A(6) 윤리A(4) 역사A(4) 수학F(4) 기술가정A(4) 체육A(4) 음악A(4) 미술A(7) 미술B(7) 영어A(6) 영어B(6) 제2외A(4) 한문A(4)
소계	64단위	64단위	64단위
3학년	국어C(7) 국어D(7) 국어E(4) 윤리A(4) 지리B(6) 일사B(6) 역사B(4) 수학B(6) 체육B(4) 영어C(6) 영어D(6) 한문B(4)	국어B(6) 수학C(7) 수학D(7) 수학E(6) 물리B(6) 화학B(6) 생물B(6) 지구과학A(4) 체육B(4) 영어C(6) 영어D(6)	국어B(6) 지리A(4) 일사A(4) 체육B(4) 미술C(6) 미술D(8) 미술E(8) 미술F(8) 영어C(6) 영어D(6) 교양(4)
소계	64단위	64단위	64단위

3. 중규모 B고 과정별 이수과목과 단위 도표

○ B고 인문사회과정

32	국어E	역사B								
30										
28										
26	국어D	일사B								
24										
22							영어D			
20	국어C	지리B								
18										
16		역사A						영어C		
14										
12	국어B	일사A	수학B							교양
10										영어B
8	국어A	지리A	수학A			체육B				한문B
6										
4		윤리A	수학A		기가A	체육A	영어A	제2외국어A	한문A	
2										
단위/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음/미	영어	제2외국어	교양	

○ B고 자연과정

34			수학E	생물B						
32										
30			수학D	화학B						
28										
26			수학C	물리B				영어D		
24										
22			수학B	지학A				영어C		
20										
18			수학A	생물A				영어B		
16	국어B									
14			수학A	화학A		체육B				교양
12										
10	국어A		수학A	물리A	기가A	체육A	영어A	제2외국어A	한문A	
8										
6										
4										
2										
단위/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음/미	영어	제2외국어	교양	

○ B고 예체능과정(미술전공)

56						미술D(8)				
~						미술E(8)				
32						미술F(8)				
30						미술C				
28										
26										
24						미술B				
22							영어D			
20										
18										
16		역사A				미술A		영어C		
14										
12	국어B	일사A					음악A	영어B		
10										
8	국어A	지리A				체육B				교양
6										
4		윤리A	수학F			기술가정A	체육A	영어A	제2외국어A	한문A
2										
단위/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음/미	영어	제2외국어	교양	

4. 중규모 B고의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표

교과	과목	기준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주 당 수 계	교 과 별 시 수 계	교 과 별 교 사 수	교 과 별 평 균 시 수	
			공통과정		인문과정		자연과정		예체능과정		인문과정		자연과정		예체능과정						
			7 개 반 1 학 기	2 학 기	3 개 반 1 학 기	2 학 기	3 개 반 1 학 기	2 학 기	1 개 반 1 학 기	2 학 기	3 개 반 1 학 기	2 학 기	3 개 반 1 학 기	2 학 기	1 개 반 1 학 기	2 학 기					
국어	국어	8	4	4	0	0	0	0	0	0	0	0	0	0	0	0	0	28	94	6	15.6 7
	국어A	6			7	0	3	3	3	3	0	0	0	0	0	0	0	30			
	국어B	6			0	7	0	0	0	0	0	0	3	3	3	3	12				
	국어C	6			0	0	0	0	0	0	7	0	0	0	0	0	18				
	국어D	6			0	0	0	0	0	0	0	7	0	0	0	0					
	국어E	6			0	0	0	0	0	0	2	2	0	0	0	6					
	국어F	6			0	0	0	0	0	0	0	0	0	0	0	0					
도덕	도덕	2	1	1	0	0	0	0	0	0	0	0	0	0	0	0	7	15	1	15	
	윤리A	4			0	0	0	0	2	2	2	2	0	0	0	8					
	윤리B	6			0	0	0	0	0	0	0	0	0	0	0	9					
사회	사회	6	3	3	0	0	0	0	0	0	0	0	0	0	0	21	55	4	13.7 5		
	지리A	4			2	2	0	0	0	0	0	0	0	2	2	8					
	지리B	6			0	0	0	0	0	0	3	3	0	0	0	9					
	일사A	4			2	2	0	0	0	0	0	0	0	2	2	8					
	일사B	6			0	0	0	0	0	0	3	3	0	0	0	9					
	국사	6	3	3	0	0	0	0	0	0	0	0	0	0	0	21	35	2	17.5		
	역사A	4			2	2	0	0	2	2	0	0	0	0	0	8					
	역사B	6			0	0	0	0	0	0	2	2	0	0	0	6					
수학	수학	8	4	4	0	0	0	0	0	0	0	0	0	0	0	28	91	6	15.1 7		
	수학A	6			3	3	7	0	0	0	0	0	0	0	0	27					
	수학B	6			0	0	0	7	0	0	3	3	0	0	0	9					
	수학C	6			0	0	0	0	0	0	0	7	0	0	0	18					
	수학D	6			0	0	0	0	0	0	0	0	7	0	0	0					
	수학E	6			0	0	0	0	0	0	0	3	3	0	0	9					
	수학F	6			0	0	0	0	2	2	0	0	0	0	0	0					
과학	과학	8	4	4	0	0	0	0	0	0	0	0	0	0	0	28	79	6	13.1 7		
	물리A	4			0	0	2	2	0	0	0	0	0	0	0	6					
	물리B	6			0	0	0	0	0	0	0	3	3	0	0	9					
	화학A	4			0	0	2	2	0	0	0	0	0	0	0	6					
	화학B	6			0	0	0	0	0	0	0	3	3	0	0	9					
	생물A	4			0	0	2	2	0	0	0	0	0	0	0	6					
	생물B	6			0	0	0	0	0	0	0	3	3	0	0	9					
	지학A	4			0	0	0	0	0	0	0	2	2	0	0	6					
	지학B	6			0	0	0	0	0	0	0	0	0	0	0	0					
기술가정	기가	8	4	4	0	0	0	0	0	0	0	0	0	0	0	28	42	3	14		
	기가A	4			2	2	2	2	2	2	0	0	0	0	0	14					
	기가B	4			0	0	0	0	0	0	0	0	0	0	0	0					
	기가C	4			0	0	0	0	0	0	0	0	0	0	0	0					
	기가D	4			0	0	0	0	0	0	0	0	0	0	0	0					
	기가E	4			0	0	0	0	0	0	0	0	0	0	0	0					
체육	체육	4	2	2	0	0	0	0	0	0	0	0	0	0	0	14	42	3	14		
	체육A	4			2	2	2	2	2	2	0	0	0	0	0	14					
	체육B	4			0	0	0	0	0	0	2	2	2	2	14						
	체육C	6			0	0	0	0	0	0	0	0	0	0	0	0					
음악	음악	2	1	1	0	0	0	0	0	0	0	0	0	0	0	7	11	1	11		
	음악A	4			0	0	0	0	2	2	0	0	0	0	0	2					
	음악B	4			0	0	0	0	0	0	0	0	0	0	0	2					
	음악C	6			0	0	0	0	0	0	0	0	0	0	0	0					
미술	미술	2	1	1	0	0	0	0	0	0	0	0	0	0	0	7	27	1	27		
	미술A	4			0	0	0	0	7	0	0	0	0	0	0	8					
	미술B	4			0	0	0	0	0	7	0	0	0	0	0	0					
	미술C	6			0	0	0	0	0	0	0	0	0	3	3	12					
	미술D													8	0						
	미술E													0	8						
	미술F													4	4						
영어	영어	8	4	4	0	0	0	0	0	0	0	0	0	0	0	28	112	6	18.6 7		
	영어A	6			6	0	6	0	6	0	0	0	0	0	0	42					
	영어B	6			0	6	0	6	0	6	0	0	0	0	0	0					
	영어C	6			0	0	0	0	0	6	0	6	0	6	0	42					
	영어D	6			0	0	0	0	0	0	6	0	6	0	6	0					
	영어E	6			0	0	0	0	0	0	0	0	0	0	0	0					
	영어F	6			0	0	0	0	0	0	0	0	0	0	0	0					
제2외국어	특어A	4			2	2	2	2	2	2	0	0	0	0	0	14	14	1	14		
	특어B	6			0	0	0	0	0	0	0	0	0	0	0	0					
	일어A	4			0	0	0	0	0	0	0	0	0	0	0	0					
	일어B	6			0	0	0	0	0	0	0	0	0	0	0	0					
한문	한문A	4			2	2	2	2	2	2	0	0	0	0	0	14	20	2	10		
	한문B	6			0	0	0	0	0	0	2	2	0	0	0	6					
교련	교련	4			0	0	0	0	0	0	0	0	0	0	0	0					
교양	철학	4			2	2	2	2	0	0	0	0	0	2	2	14	14	1	14		
	논리학	4			0	0	0	0	0	0	0	0	0	0	0	0					
	심리학	4			0	0	0	0	0	0	0	0	0	0	0	0					
특별활동	동1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합계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723	651	43	15.1 4		

III. 소규모학교 사례- 경기 C여고

C고의 일반 현황	인문과정 : 2개반, 자연과정 : 1개반, 예체능반 : 미편성 전체 : 9학급(학년당 3학급), 교사 : 19명
-----------	---

1. 집중 과정 예시안과 소규모 C고 사례의 비교

구분	<집중 과정 예시>				소규모 C고			
	교과군 공통	인문사회	수학과학	예체능	인문사회		수학과학	
					선택	비고	선택	비고
교과	국어 도덕 사회	택1	택4 택5	택2 택2~3	택4(28) 택1(4) 택5(30)	0	택2(14) 택1(6)	+2
	수학 과학기술 가정 음악 미술	택1	택4 택5 -		택2(12) 택1(6) -	+2	택4(30) 택5(32)	-1*
	영어	택1		택4~5	택2(8)	+1	택2(8)	+1
	제2외국어	택1			택4(24) 택1(6)	+3 0	택4(24) 택1(6)	+3 0
	한문 교련 교양	택2			택2(10)	0	택2(8)	0
	최소 이수 비율		(45%)	(45%)	(45%)	128 (48%)		128 (48%)

2. 소규모 C고 학년별 이수단위표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2학년	국어A(7) 국어B(7) 윤리A(4) 일사A(6) 역사B(6) 수학A(6) 체육A(4) 영어A(6) 영어B(6) 제2외국어A(6) 한문(6)	국어E(6) 수학A(7) 수학B(7) 화학A(6) 생물A(6) 물리A(6) 체육A(4) 영어A(6) 영어B(6) 제2외국어A(6) 한문(4)
소계	64	64
3학년	국어C(7) 국어D(7) 일사A(6) 일사B(6) 역사A(6) 수학C(6) 화학A(6) 체육B(4) 영어C(6) 영어D(6) 교양A(4)	국어F(8) 일사A(6) 수학C(8) 수학D(8) 화학B(7) 생물B(7) 체육B(4) 영어C(6) 영어D(6) 교양A(4)
소계	64	64

3. 소규모 C고 과정별 이수과목과 단위 도표

○ C고 인문사회과정

36										
34		역사A								
32										
30										
28	국어D	일사B								
26										
24										
22							영어D			
20	국어C	일사A								
18										
16							영어C			
14	국어B	역사B								
12										
10				수학C				영어B		교양A
8		일사A								
6	국어A	윤리A					체육B			
4				수학A	화학A			영어A	제2외국어A	한문
2							체육A			
단위/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음/미	영어	제2외국어	교양	

○ C고 자연과정

32									
30			수학D	생물B					
28									
26									
24									
22			수학C	화학B			영어D		
20									
18									
16				물리A			영어C		
14	국어F		수학B						
12									
10					생물A			영어B	
8									교양A
6						체육B			
4	국어E	일사A	수학A	화학A			영어A	제2외국어A	
2									체육A
단위/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음/미	영어	제2외국어	교양

4. 소규모 C고의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표

교과	과목	국민 통기 기본 교과	기준 단 위	1학년 (2005입학)		2학년 (2004입학)				3학년 (2003 입학)				주당시 수합계	자격 증 과 목 총 시 수	소요 교 원 수	요 구 교 원 수 (A)	현 원 (B)	비 고 (증감) B-A
				공통 4		인문사회 3		자연과학 1		인문사회 3		자연과학 1							
				시 간 수	학 급 수	시 간 수	학 급 수	시 간 수	학 급 수	시 간 수	학 급 수	시 간 수	학 급 수						
국어	국어			4	4								16	국어	59	3.37	4	4	0
	국어A					3.5	3						10.5						
	국어B					3.5	3						10.5						
	국어C									3.5	3		10.5						
	국어D									3.5	3		10.5						
	국어E							3	1				3						
	국어F										4	1	4						
도덕	도덕			1	4								4	윤리	10	0.57	1	1	0
	윤리A					2	3						6						
	윤리B												0						
사회	사회			3	4								12	공통 지리	42	2.4	2	3	-1
	지리A												0						
	지리B												0						
	일사A					3	3			3	3	3	1	21	일사				
	일사B									3	3		9						
	국사			3	4								12	역사	30	1.71	2	2	0
	역사A									3	3		9						
	역사B					3	3						9						
수학	수학			4	4								16	수학	48	2.74	3	3	0
	수학A					3	3	3.5	1				12.5						
	수학B							3.5	1				3.5						
	수학C									3	3	4	1	13					
	수학D											4	1	4					
	수학E												0						
	수학F												0						
과학	과학			4	4								16	공통 물리	40	2.29	1	1	
	물리A							3	1				3						
	물리B												0						
	화학A							3	1	3	3		12	화학			1	1	
	화학B												3.5	1	3.5				
	생물A							3	1				3	생물					
	생물B											3.5	1	3.5					
	지구과학A												0	지학					
	지구과학B												0						
기술· 가정	기술·가정			4	4								16	기 가	16	0.91	1	1	0
	기술·가정A												0						
	기술·가정B												0						
체육	체육			2	4								8	체 육	24	1.37	1	2	-1
	체육A					2	3	2	1				8						
	체육B									2	3	2	1	8					
	체육C												0						
음악	음악			1	4								4	음 악	4	0.23	0	1	-1
	음악A												0						
	음악B												0						
	음악C												0						
미술	미술			1	4								4	미 술	4	0.23	0	1	-1
	미술A												0						
	미술B												0						
	미술C												0						
영어	영어			4	4								16	영 어	64	3.66	4	4	0
	영어A					3	3	3	1				12						
	영어B					3	3	3	1				12						
	영어C									3	3	3	1	12					
	영어D									3	3	3	1	12					
	영어E												0						
	영어F												0						
제2외국어	제2외국어A					3	3	3	1				12	제2A	12	0.69	1	1	0
	제2외국어B												0	제2B	0	0	0	0	0
한문 /교양	한문					3	3	2	1				11	한문	11	0.63	1	2	-1
	교양A									2	3	2	1	8		8	0.46	0	0
	교양B												0		0	0	0	0	
	특별활동			2		2		2		2		0		0		0		0	0
합계		0	0	34	44	34	33	34	11	34	33	34	10		372	21.3	22	27	-5
과목수						11		11		11		10	6.20						

【토론 1】

고교 선택교육과정 개정에 대하여

이 원 춘(성남서고등학교)

1. 현실을 보는 눈

1. 7차 교육과정의 문제

1) 학교의 문제

교육과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교육과정이란,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목표를 가르칠 것이며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공통적·일반적 기준을 말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과 실태를 반영한 지침을 만들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시·도별 지침에 따라 각 학교의 실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역과 학교,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7차 교육과정의 외형상 절차와 기준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학교단위의 문제점은 많다. 발표자께서 지적하였듯이, 예를 들면 과학 과목의 경우 심화 과목(II과목)이수 기간은 두 학기도 채 되지 못한다. 사실상 3학년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3학년 1, 2학기에 배우는 내용을 대학 수능 준비로 인하여 1학기에 모두 끝내려는 조급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1학기 수시에서 전 과목에 대한 심층 면접문제가 출제되므로 6월까지 마쳐야 하는 부담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겪고 있는 현실이며 심화 과목의 피상 운영 및 선행학습과 보충학습의 필연성으로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2002년도 이후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교사들에 의해 수없이 제기되었다. 상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시 개정을 기본으로 하려는 운영의 시도는 있어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으며 이제나마 개정의 노력

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듯해 꽤 다행한 일이다.

2) 학생의 문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11, 12 학년에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 능력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여 편성·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뿐만 아니라 흥미나 장래 진로를 감안하여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라는 의미에서 가치 이상적이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학습자들의 교육적 요구에 학교 교육이 대응해 나가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 수월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실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택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고등학교 학습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발표자께서 언급하였듯이 오히려 학생의 적성과 진로와는 상관없이 난이도가 높거나 내신 성적에서 불리한 과목의 학습을 학생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소규모 학생 수강 과목이나 문과와 비교하여 단위수가 높은 대수능 수리 “가”형에 해당하는 과목의 학습은 기피하게 되며, 결국 이과 과정 이수 학생 수는 점차 감소되고 있고, ‘과정’간 비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3) 교사의 문제

최근의 교사평가와 더불어 교사들은 제대로 가르쳐 보고 평가 받고 싶다는 말을 한다. 교사들은 자신이 전공한 과목을 개설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가르치고 평가받기를 원한다. 이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일부과목의 폐지와 더불어 시간 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해에 개설되었던 과목이 다음해에 없어지는 현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불안한 입지에 교사들은 서있기 때문에 상치과목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단기연수를 받고 타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상치과목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가르치게 되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부족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서 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은 항상 뒤따를 것이다.

4) 입시제도의 문제

적어도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과 고등학교가 종속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교사가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시제도는 언제나 늘 개정되어 왔고 또 개정되어도 늘 문제점은 나타난다. 입시제도와 관련된 현행 교육과정이 학습자간, 과정간에 형평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은 여러 번 제기된 내용이다. 이과 기피현상과 어려운 과목이수 기피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다. 또한 수시 모집에 의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파행운영은

교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며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1학기 수시 모집의 폐지와 2학기 수시 모집도 학기 내내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개정의 필요

현재도 월1회 주5일 수업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매주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것으로 본다면 과목별 단위 수 감축은 물론 전체 이수 단위수와 수업일수도 함께 줄이는 가운데 선택교육과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물론 과목 구성의 타당성과 과목간의 연계, 교과내용의 양과 질이 적절하고 위계성이 확립된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도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과학기술인력 부족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시점은 이미 지나있다.

II. 개정안과 고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확대 제안에 대하여

1. 개정안에 대하여

7차 교육과정이 단위학교에 자율이 주어진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기 보다는 어느 특정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구속성을 갖고 최소 단위이수 비율을 정한다면 대학에 종속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3안이 고등학교에 적합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집중과정에 포함된 내용에 한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정이수 기준이 고시된다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의 적성에 알맞은 과정과 내용을 개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교과군 공통 선택이 교과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대학입시와 연결시키든 연결시키지 않든 국어, 도덕, 사회 군에서는 당연히 국어를 선택할 것이고, 수학, 과학, 기술·가정교과군에서는 당연히 수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과 공통선택에서 국어를 제외한 도덕, 사회교과군에서 선택, 수학을 제외한 과학, 기술·가정교과군에서 선택하도록 한다면 국어나, 수학에 편중되는 현상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집중과정에서 최소 이수 비율이 45%정도라면 나머지 55%에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은 과목을 추가로 충분히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소수의 학생이 신청하여도 그 과목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집중과정을 도입한다 해도 지금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우려에 불과할지 생각하게 된다.

2. 교육과정 편성 제안에 대한 의견

1) 고등학교 졸업 이수 단위 수의 설정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의 다양화에 따른 졸업 이수 단위 수 설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 학교 내에서 일부 교과목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과 교사간의 수업시수 차등에 의한 불균형으로 교원간의 위화감과 교사의 표준시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 시수가 과다한 교사에게는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2) 고등학교 2, 3 학년 총 이수 단위수의 증감운영

아마도 개별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은 단위수의 증감운영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학교별로 단위수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고등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정되는 학교의 이수단위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는 학부모의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3) 선택과목의 개설 범위 확대와 기준단위 폐지에 대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여 단위학교의 특성화를 촉진시키는 측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과 얼마나 학생이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가를 보고 담당교사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학교마다 특성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것이고, 다른 학교나 또는 대학의 눈치를 보고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고 얼마든지 단위학교마다 특색있는 과정을 개설 운영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준단위 폐지에 대하여는 쉽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단위학교의 특성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이상을 추구한다지만 대안학교를 제외한 일반계 고교치고 대학진학과 관계없이 특성화 학교로만 운영되기 어렵고, 대부분이 입시관

련과목의 이수 단위수를 확대하거나 별도 수준별 반편성의 미명 아래 대학희망별 학급 편성을 통해 지금보다도 더욱 대학에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사회구조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와의 합의와 우리 사회구조가 자율적인 체제로 점차 정착된다면 그리고 학교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성숙된다면 얼마든지 기준단위 폐지를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7차에서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편성 자율권을 확보했으나 이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사회구조상 자율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려움), 대략적으로 서로 눈치를 보며 작성한 교육과정이 비슷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III. 더 깊은 생각을...

교육과정 개정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선택중심의 대응 개념은 ‘필수 부과’이다. 이러한 개념은 주체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데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선택의 의사 결정 참여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학생 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상위 순위자의 선택은 하위 순위자의 필수 지정(필수 이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중간의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지원체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둘째, 선택의 주체에 따라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 학교의 선택권 행사 방식에 따라 학생의 선택권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이나 학교가 여러 개의 과목 중에서 한 두 개의 과목을 선택하거나, 여러 단위 중에서 일부 단위를 선택하게 하는 개방적(소극적)이고 미확정인 방식으로 선택권을 행사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많이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개인이 선택권을 주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여야 하고, 선택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일정 지역의 학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의 교사와 시설(교실 수) 여건에 의해 학교가 제공하는 과정과 과목의 다양성에 따라 학생의 선택 범위가 결정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특정 교과 영역 혹은 교과목군, 혹은 몇 개의 과목 중에서 몇 단위 식으로 학생들에게 선택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생각하여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선택의 대상에는 과목과 과정,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학생이 선택권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과 과정은 물론, 자기가 원하는 과정이 설치된 학교를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교사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선택영역 및 선택방식

에서 균형 잡힌 이수와, 집중적인 계통 학습과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학습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길 바란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개개인의 지력과 창의력, 국가 지적 자산의 양과 질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도 다양성과 창의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흘러가야 하며,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이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최적의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데 역점을 두는 학교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입이 중심이 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야하는 편성과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한 교육적 합의를 바탕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라는 절실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토론 2】

일반계고 선택 교육과정 개정 방안에 대하여

신 성 호(중앙고등학교)

I. 선택 교육과정 개정 방안 요약

1. 현행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원의 진단

- 학교와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였으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학입시의 지배, 소수 대학의 입시 요강에 지배(필자 주: 서울대의 과정별 최소 이수 단위수 요구, 일부 대학 이공과정에서 ‘미분과 적분’ 필수, 일부 대학에서 과학II 중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요구, 일부 의대에서 ‘생물II’, 혹은 ‘화학II’ 필수 요구 등)
- 예술·체육계 진학생의 학교 학습 기회가 미흡
- 진로에 따른 학습 기회가 2학기에 불과(2, 3학년 4학기 중 2학년 1학기 동안 일반선택 24단위를 이수하고, 3학년 2학기에는 대수능 준비로, 실제 심화과목 이수는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 일부 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능력,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동일 내용, 동일 양과 난이도로 학습해야 하는 현실(대수능에서 언어나 외국어(영어)의 경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문·이과 동일한 부담(필자 주: 과목 선택권을 줄 필요가 없음))
- 일반 선택과목 26과목, 심화 선택과목 53과목으로 학습자의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실에 부적합
 - 이수 과목 편중 현상이 나타남.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준은 주로 대입과의 관련성, 학습의 용이성, 내신 성적 산출의 유·불리 여부(소규모 학생 수강 과목 기피) 등이 주요 변인으로 작용)
 - 심화 선택 과목에서 10% 미만의 이수 비율을 보이는 과목이 26과목으로 전체 53과목 중 49.1%를 차지함(10% 미만 : 경제지리, 지구과학II, 문법, 화법, 이산수학 등,

20% 미만의 이수 비율 과목 35과목, 전체 과목 중 66% 차지)

- 일부 과목의 개설 방식 문제(물리적 방식의 과목 나열, 기존 과목의 내용을 분리하여 선택 과목 수 확대(필자 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사회), 과목 간 교육 내용의 차별성 미흡('확률과통계'는 '수학'의 확률과 통계 영역과 거의 동일, '이산수학'의 일부가 '수학'의 순열과 조합 영역과 동일))

2. 현행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평가원의 시안

- 수준별 처방의 범위를 고 2, 3학년까지 확대
 - 고1까지의 수업 차원의 수준별 처방이 고2, 3학년까지 연계, 고 2, 3학년은 과목 개설 차원에 주안점을 두어 학생 스스로 차별성을 구사할 여지를 제공해주어야 함 (과목 선택에 의한 수준별 수업 및 기타 방안 변용)
 - 학습자의 특성(성취도, 적성, 진로, 흥미)을 바탕으로 하는 차별적 전략 필요 : 과목 내용의 다양성과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 영역 및 난이도 수준이 다양한 과목들을 설치, 학생들로 하여금 성취 수준과 적성, 필요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장점 확대
- 집중 과정별 과목 선택 제시
 - 고·교 학습과 대학 진학 후 학습의 연계성 증진(고교생 설문 결과 고등학교 학습이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8.8%)
 - 분야별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능력 구비할 필요성
 - 대부분의 학교(약 91%)에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정이 없는 학교는 8.9%를 차지하나, 과목 편성은 대체로 인문사회과정과 유사함, 2005년: 인문·사회과정(58.1%), 자연·이공과정(38.5%), 직업과정(0.5%), 예술·체육 과정(2.0%), 기타과정(0.5%), 과정 구분 없음(0.4%))
 - 과정별 이수 과목 분석 결과,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과목의 집중 이수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과정(예: 인문, 자연, 예·체능, 직업)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과목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는 방안에 대한 교사, 교육청 관계자, 교과 전문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매우 찬성'과 '찬성'을 합하여 약 80%로 나타남.
 - 국가 교육과정에서 과정별 선택 과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둬으로써 학습자의 진로에 초점을 맞춘 교과 학습의 집중도를 높임
 - 학교에서의 과정 운영과 국가 고사(대수능 등) 및 대입시에 최소한의 공통분모 제공

- 일반계 고교에서 예술·체육계 진학생에 대한 학습 기회 확충(필자 주: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음)
-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 구분 없애고 선택 과목으로 통일하고, 이수 비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과목은 가급적 축소 또는 폐지(교련 과목)하거나 통합하고, 교과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수 비율이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구성함(필자 주 :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음)
- 선택 과목 이수에 있어 과목군 개념 도입(설문조사 결과 67.3% 찬성)
 - 인문·사회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과학 교과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술·체육 교과군(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군, 제2외국어 교과군, 한문·교양 교과군의 6개 교과군
 - 학습 경험의 균형을 위한 현행 일반선택 과목 이수 규정은 ‘교과군 공통 선택’(가칭)으로 연계함. 10학년까지의 공통 기본 교과 이수와 11, 12학년 선택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동시에 기본 교양을 증진하기 위해 교과군별로 1과목 이상을 이수하되, 단 한문·교양 교과군에서는 2과목 이상 이수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의사결정은 국가와 단위 학교로 이원화하고, 교육청은 실질적 지원 강화(설문 결과 81.2% 찬성) (필자 주: 아직 확정하지 않음)

II. 선택 교육과정 개정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

앞에서 정리한 현행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원의 진단에 대해 동의하고,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선택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정 절차, 일정의 문제점, 고2~3학년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얘기하고자 한다.

1. 선택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정 절차, 일정의 문제점

1) 민주적인 평가 방식이 아니다.

현행 7차 선택 교육과정을 개정하려면 먼저 7차 선택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평가는 교육 주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주체들이

모두 참여해서 즉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부, 교육연구기관, 교육과 관계된 다양한 집단 등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가는 교육부와 교육연구기관만이 주체가 되어 하고 있다.

2) 현실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성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 교원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평가 주체에 현장 교원은 한 명도 없다.

3) 일방적인 평가와 일방적인 개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 주체들이 처해있는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개정안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들 즉 선택 교육과정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끼리 모여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교육부와 교육연구기관만이 모여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협의회·공청회 몇 번, 인터넷 공지 등의 방법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서 참여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4) 졸속적인 개정 일정이다.

다양한 가치관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 사이에 합의점을 찾고 최선의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도 있고 충분한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에 합당한 일정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에 선택 및 전문교과 시안을 개발하고 2007년 2월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고시하는 걸로 되어 있다. 10학년까지의 국민공통 10개 교과와 교육과정을 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 개발하고 11~12월에 심의회, 공청회를 열고 2006년에 의견 수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도 매우 촉박하여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 일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선택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2006년, 단 1년 동안에 시안 개발, 심의회, 공청회,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이 너무나 졸속적인 교육과정 일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선택 교과 교과서는 2012~13년에 사용하게 되므로 여유를 갖고 충실한 개발이 되도록 일정을 정해야 한다.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을 한꺼번에 고시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두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따로 고시함으로써 내용의 충실을 기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에 합당하다고 본다.

2. 고2~3학년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점

1)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은 학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10학년까지의 과정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고, 11~12학년 과정은 대학 예비 교육 과정으로서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논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10학년까지 교육을 받으면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기본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며, 또 모두가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다고 볼 수 있을까? 일반계, 실업계를 막론하고 국어, 한문, 도덕, 사회, 지리, 역사,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2외국어 교사 아무한테나 질문해보자. 과연 10학년까지 마치면 자기 담당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10학년까지 교육을 마친 국민 아무한테나 질문해보자. 만약 대다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학제 개편이 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과정을 나누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첫 번째 전제가 타당하다면 그에 맞춰 학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10학년까지를 초·중학교로 나누고, 고등학교(2년)를 대학 예비 교육기관으로 나누는 것으로 학제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2)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대학 입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학제 개편 문제가 해결(앞 장에서 말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과 학제의 일치 문제가 해결)된 이후라 할지라도 교육환경, 교사, 교실, 평가 문제 등 제반 물리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3) 현실은 ‘학습자의 특성(성취도, 적성, 진로, 흥미)에 맞는 선택 교육과정’이 되지 않는다.

평가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수 과목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준은 주로 대입과의 관련성, 학습의 용이성, 내신 성적 산출의 유·불리 여부(소규모 학생 수강 과목 기피) 등이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성취도, 적성, 진로, 흥미)을 바탕으로 하는 과목 내용의 다양성과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 영역 및 난이도 수준이 다양한 과목들을 설치, 학생들로 하여금 성취 수준과 적성, 필요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 하더라도 평가원이 지적한 점들 때문에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장점 확대’라는 목적과 ‘학생 스스로 차별성을 구사할 여지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대학 입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 교육과정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선택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배하지 않을 때 추진을 논의

해야 하는 것이다.

평가원에서는 ‘성취 수준(필자 주: 일반 학생, 기초학력 부진아, 영재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기초학력 부진아나 영재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단지 몇 개 과목의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4) 선택 교육과정은 결국 우열반 편성, 혹은 우열반 이동 수업이 되기 쉬우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선택별 반 편성, 선택별 이동 수업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의사 수렴을 한 후 정하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첫째 기준은 입시 관련성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친구들의 선택에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즉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끼리, 못하는 학생들은 못하는 학생들끼리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우열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보통 선택 과목에 따라 반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부 과목의 선택 때문에 학생 전체가 1년 동안 우열반 편성이 되는 것이다. 많이 몰리는 과목의 반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증가와 수업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등 수업 환경이 열악해진다. 그리고 열반의 경우 당연히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리고 반당 학생 수가 많은 반과 적은 반 사이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다.

물론 1년 동안 우열반 편성으로 하지 않으려면 해당 시간에만 이동 수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교사 수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간표의 경직성이 초래되기 때문에 보통 선택별로 반 편성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설령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해당 시간에만 이동 수업을 하는 선택별 이동 수업을 하더라도 선택 과목별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거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수업의 경우, 수업 환경이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 방안은 일부 보완이 아니라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을 폐기하는 것이다.

5) 평가원에서 지적한 문제점 중에서 일부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소수 대학의 입시 요강에 지배당하는 것은 교육부 정책 차원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술·체육계 진학생의 학교 학습 기회가 미흡한 점은 향후 예체능 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면 해결될 것이다.

일부 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능력,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동일 내용, 동일 양과 난이도로 학습해야 하는 현실(대수능에서 언어나 외국어(영어)의 경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문·이과 동일한 부담(필자 주: 과목 선택권을 줄 필요가 없음))의 문제점은

교육부 정책 차원에서 인문사회과정과 예체능과정, 자연과정 별로 대학 입시 과목을 달리 하면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처럼 자연과정은 국어·영어 A, B만 보는 식으로 입시 시험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다).

일부 과목의 개설 방식 문제나 과목 간 교육 내용의 차별성 미흡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잘하면 해결될 것이다.

선택 과목에서 저조한 이수 비율을 보이는 과목은 조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6) ‘집중 과정’ 안을 내놓는 것은 선택 교육과정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과정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바꾸자.

7차 교육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평가원에서도 인정하였듯이 2~3개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으며, 그 과정 내에서 일부 과목에서 선택권을 주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선택 단위수는 규정상 최저 선택 단위인 28단위에 가까웠다고 본다.

그리고 평가원의 개정안 기초도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실제 내용과 현실이 맞지 않는데 그 명칭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7) 선택 교육과정 편제 개정안의 문제점을 볼 때 개정안은 선택 교육과정이 아니라 국민공통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구 분	10학년 공통 기본 교과	11, 12학년 선택 과목	선택 영역 및 선택 방식					자율
			교과군 공통	집중 과정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기타	
교 과	국 어 도 덕 사 회	국어A(6), 국어B(6), 국어C(6), 국어D(6), 국어E(6), 국어F(6) 윤리A(4), 윤리B(6) 지리A(4), 지리B(6), 역사A(4), 역사B(6), 일사A(4), 일사B(6)	택 1	택 4 택 5		택 2 택 2~3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 로 편성 운영함
	수 학 과 학 기 술 가 정	수학A(6), 수학B(6), 수학C(6), 수학D(6), 수학E(6), 수학F(6) 물리A(4), 물리B(6), 화학A(4), 화학B(6), 생물A(4), 생물B(6), 지학A(4), 지학B(6) 기술·가정A(4), 기술·가정B(4), 기술·가정C(4), 기술·가정D(4), 기술·가정E(4)	택 1		택 4 택 5			
	체 육 음 악 미 술	체육A(4), 체육B(4), 체육C(6이상), 음악A(4), 음악B(4), 음악C(6이상) 미술A(4), 미술B(4), 미술C(6이상)	택 1			진로 과목 에서 택 4~5		
	외국어	영어	택 1	택 2	택 2	택 2		
	제2외국어	독일어A(6), 독일어B(4), 프랑스어A(6), 프랑스어B(4), 스페인어A(6), 스페인어B(4), 중국어A(6), 중국어B(4), 일본어A(6), 일본어B(4), 러시아어A(6), 러시아어B(4), 아랍어A(6), 아랍어B(4)	택 1					
	한 문 교 양	한문A(6), 한문B(4)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환경(4), 기타(4)	택 2					
	이수 단위 및 비율	()	(128)		45%	45%	45%	
재량 활동	()							
특별 활동	()	(8)						
소계	(68)	(136)						
총 이수 단위							204	

● 현실에 맞지 않은 교과군 편제 방안

설문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지만 필자가 보기에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외국어, 한문, 교양 등을 골고루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교과군과 군별 선택 과목 수를 다음과 같이 현실을 반영하여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국어·한문 과목군에서 3과목(국어 2과목 12단위, 한문 1과목 6단위), 수학과목군에서 2과목(12단위), 기술·가정 과목군에서 1과목(컴퓨터 과목 4단위), 체육과목군에서 2과목(8단위), 영어 과목군에서 2과목(12단위), 2외국어 과목군에서 1과목(6단위), 교양 과목군에서 1과목(4단위), 도덕·사회 과목군, 과학 과목군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학생들이 고2~3학년에서 이렇게 이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64단위가 된다. 고2~3학년 128 단위(32단위*4학기) 중에서 정확히 50%를 차지한다. 따라서 2개 학년 중 1개 학년 분량은 공통 교육과정이다.

다음으로 집중 과정을 살펴보겠다. 인문사회과정은 국어 2과목(12단위) 추가 (교과군 공통과 합 4과목), 도덕·사회 과목군에서 4과목만 택해도(16~24단위) 합 28~36단위, 즉 1학기 분량이 과정별 교육과정이다.

자연과정은 수학 2과목(12단위) 추가 (교과군 공통과 합 4과목), 과학 과목군에서 4과목만 택해도(16~24단위) 합 28~36단위, 즉 1학기 분량이 과정별 교육과정이다.

나머지가 자율 과목인데 약 1학기 분량이다.

현실에서 4학기 중 1학기 분량만 과정별 교육과정인데, 과정별 교육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1학기 분량을 가지고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문 교육과 국어 교육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양 과목군과 묶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편제 개정안의 문제점

편제표에 의하면 고 2~3학년에서 인문 과정은 수학과 기술·가정(컴퓨터), 체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연 과정은 국어, 기술·가정(컴퓨터)을 이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체능과정은 수학, 기술·가정(컴퓨터)을 이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고1까지 해당 과목에서 국민공통 기본교육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0학년을 마친 국민들에게 질문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 보다 현실적인 편제 방안 제안 (이 편제표를 보면 선택 교육과정이 아니다)

구분	10학년 공통 기본 교과	11, 12학년 선택 과목	선택 영역 및 선택 방식					자율
			교과군 공통	집중 과정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기타	
교과	국어	국어A(6), 국어B(6), 국어C(6), 국어D(6), 국어E(6), 국어F(6) 한문A(6), 한문B(4)	택 2 (12) 택 1 (6)	+ 택 2 (12)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함
	도덕 사회	윤리A(4), 윤리B(6) 지리A(4), 지리B(6), 역사A(4), 역사B(6), 일사A(4), 일사B(6)		택4 (영역별 택1) (16~24)		택 2 (8~12)		
	수학	수학A(6), 수학B(6), 수학C(6), 수학D(6), 수학E(6), 수학F(6)	택 2 (12)		+ 택 2 (12)			
	과학	물리A(4), 물리B(6), 화학A(4), 화학B(6), 생물A(4), 생물B(6), 지학A(4), 지학B(6)			택 4 (영역별 택1) (16~24)			
	기술·가정	기술·가정A(4), 기술·가정B(4), 기술·가정C(4), 기술·가정D(4), 기술·가정E(4)	택 1 (4)					
	체육	체육A(4), 체육B(4), 체육C(6이상)	택 2 (8)			진로 과목에서 택 4 (16~24)		
	음악 미술	음악A(4), 음악B(4), 음악C(6이상) 미술A(4), 미술B(4), 미술C(6이상)						
	외국어	영어A(6), 영어B(6), 영어C(6), 영어D(6), 영어E(6), 영어F(6)	택 2 (12)					
	제2외국어	독일어A(6), 독일어B(4), 프랑스어A(6), 프랑스어B(4), 스페인어A(6), 스페인어B(4), 중국어A(6), 중국어B(4), 일본어A(6), 일본어B(4), 러시아어A(6), 러시아어B(4), 아랍어A(6), 아랍어B(4)	택 1 (6)					
	교양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환경(4), 기타(4)	택 1 (4)					
	이수 단위 및 비율	()	(128)	64 (50%)	28~36 (22~28%)	28~36 (22~28%)	24~36 (19~28%)	
재량 활동	()							
특별 활동	()		(8)					
소계	(68)		(136)					
총 이수 단위			204					

III. 선택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선택형 교육과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인정한다고 치고, 개정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 시도교육청의 단위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권한을 폐지하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의사결정은 국가와 단위 학교로 이원화하고, 교육청은 실질적 지원 역할로 바꾸자.

● **재량 시간을 확대하는 방법 (이 부분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사 수렴을 거친 후 정하자)**

최소한 집중 과정별 과목 선택은 단위 학교에 구속력있게 작용하는 대신에 선택 교육과정에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선택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34단위 중에서 단위 학교 재량 단위 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국가 수준에서 내용까지 제시해주는 창의적 재량 시간처럼 논란이 많은 방안이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특색을 살리고 학생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하거나 학습 결손 학생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적어도 3시간을 확보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전제 조건은 현행 7차 교육과정 때처럼 교과 시간에 심화 보충 재량 시간으로 덧붙여 운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입시 과목의 심화 보충 시간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졸업 이수 단위수 설정하는 방법 (이 부분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사 수렴을 거친 후 정하자)**

평가원의 취지대로 고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 촉진하고 학습자 집단의 다양화 요구를 충족하고 학습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또한 이 제도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학습 부진아에 대한 대책이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의 교육과정 목표 달성을 책임져야한다고 볼 때, 학습 부진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학습 부진아에 대한 대책은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장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졸업이수 단위수를 현행의 90% 정도로 설정하고 여유 시간(10% 주당 3시간)을 학교 재량 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학습결손 학생에 대한 보충 학습 시간으로서 주당 3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졸업 이수 단위수 비율을 80% 정도로 줄이고 여유 시간 비율을 20%(주당 6시간)로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참고(다른 나라 졸업이수 학점 수, 평가원 자료) : 미국 158~165, 대만 160, 일본 148, 핀란드 150),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경우 192단위(34*6=204단위에서 12단위 감소))

프랑스에서는 중학교 2~3학년의 경우 보통반에 비해 학습 결손반은 프랑스어, 수학, 외국어, 역사-지리-시민교육, 과학 기술, 음악, 미술, 체육과목 등 전 과목의 학습 시간이 1시간씩 더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결손이 누적된다고 본다. 따라서 초등에서는 정규 시간 외에 즉 방과 후에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습 결손에 대한 보충을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정규 시간 중에도 학습 결손에 대한 보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졸업이수 단위수를 현행보다 줄이고 학교 재량 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11~12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폐기하고, 공통 교육과정과 집중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부분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사 수렴을 거친 후 정하자)

1)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의 경우

국어 교과목의 경우 자연 과정 학생들이 10학년까지 국어의 기본 내용을 배웠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족한 기본 내용을 2과목 정도로 나누어 구성한 후 11~12학년에 걸쳐 학년당 1과목씩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선택권을 줄 필요가 없다.

인문 과정 학생들은 앞서 언급한 공통 2과목 외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2과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합 4과목을 1학기에 1과목씩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인문사회 계통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택권을 줄 필요가 없다.

영어 교과목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11~12학년에 걸쳐 적어도 한 학년에 1과목씩 2과목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 구별없이 하는 것은 과정별로 달리 적용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영역을 적당히 나누어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면 되는 것이지 선택권을 줄 필요가 없다.

수학 교과목의 경우 인문 과정 학생들이 10학년까지 수학의 기본 내용을 배웠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족한 기본 내용을 2과목 정도로 나누어 구성한 후 11~12학년에 걸쳐 학년당 1과목씩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선택권을 줄 필요가 없다.

자연 과정 학생들은 앞서 언급한 공통 2과목 외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2과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합 4과목을 1학기에 1과목씩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자연 계통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택권을 줄 필요가 없다.

2) 사회, 과학 교과목의 경우

● **인문사회과정은 윤리·사회 과목군들을, 자연과정은 과학 과목군들을 공통으로 이수해야 한다.**

자연과정 학생의 경우 과학 과목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에 상관없이 아무 과목이나 택해도 된다는 전제 조건은 10학년까지 과학 과목 학습을 통하여 대학 수학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11~12학년에서 추가로 자기 흥미와 적성에 따라 영역 구분없이 물, 화, 생, 지, II 8과목 중 아무 것이나 택해도 되겠지만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동의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인문과정 학생의 경우 윤리·사회 과목군의 윤리, 일사, 지리, 역사 영역의 과목에 대해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도 적응할 수 있도록 각 과정별로 해당되는 4개 영역을 이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시기가 고1학년 1학기 6~7월 경이다. 이때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을 파악하여 진로를 정하고 그에 연관된 과목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학생들은 진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령 진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 할지라도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알지 못하여 과목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진로 교육을 충분히 받고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회, 과학의 각 과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아 적성과 흥미, 진로대로 과목 선택을 잘 했다할지라도 대입시에서 그에 합당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미 택한 과목은 무용지물이 되고,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적성과 흥미도 변하는 것이고 원하는 대학과 진로도 바뀌기 때문에 적성과 흥미,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다.

● **그렇다면 집중 과정에서 도덕, 사회 과목군이나 과학 과목군에서 ‘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역별 택1’로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선택 교육과정을 인정한다고 치고)**

즉 도덕, 사회 과목군에서는 윤리, 지리, 역사, 일사 영역에서 각각 택 1로 하고 과학 과목군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지구과학I, 지구과학II) 영역에서 각각 택 1로 하는 것이다.

이것과 맞물려 과정별 선택 과목 수도 앞 항목에서 언급한대로 과정별 택 4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평가원에서도 ‘과정별 이수 과목 분석 결과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과목의 집중 이수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진단하고 있다.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과목’에 대한 교육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의 경우 윤리, 지리, 역사, 일사 영역에서 반드시 한 과목씩 이수하고, 자연과정 학생들은 물리I, 물리II 중에 1과목, 화학I, 화학II 중에 1과목, 생물I, 생물II 중에 1과목, 지구과학I, 지구과학II 중에 1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본다.

여기서 각 영역별 1과목으로 구성하지 않고 영역별 I, II로 만든다면 영역별 1가지씩 이수해야 한다.

만일 선택 교육과정을 고수하기 위해서 물, 화, 생, 지 I, II 중에서 선택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I, II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해도 대학 수학 능력이 갖춰진다고 보면 I 과목만 이수해도 되는 것이지 굳이 심화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물, 화, 생, 지 II를 이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물I, II를 택한다고 했을 때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I은 기본 과정, II는 심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물, 화, 생, 지 I만 이수해서는 대학 수학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만 이수해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복 교육을 피하고 대학 수학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물, 화, 생, 지II를 자연과정 학생용으로 일원화하여 개발하고 4 과목 모두 이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문사회과정에서 일사 영역을 예로 들면 일사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사회라는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1~12학년에서 심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4개 과목을 개설한 후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10학년까지 4개 소영역의 기본 내용을 모두 배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7~10학년까지 4년간 3.5~4시간(7~8단위)의 시수로 이를 결코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1~12학년에서 4개 소영역에 걸쳐 부족한 부분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일사 영역 4개 과목을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고 나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10학년까지 연간 주어진 시간에서 일사 영역을 충분히 이수하면 국민공통 기본교과인 다른 교과들의 이수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제 조건은 충족될 수가 없는 것이다.

4. 선택을 인정한다손치더라도 집중 과정별 과목 선택을 구속성을 가지도록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 정하자)

제2안처럼 집중 과정별 과목 선택을 ‘예시’,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3안처럼 구속성을 가지도록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가원의 진단처럼

첫째, 고교 학습과 대학 진학 후 학습의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과정별로 필요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둘째, 과정별 이수 과목 분석 결과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과목의 집중 이수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권장’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의문이다.

셋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과정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과목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 ‘매우 찬성’과 ‘찬성’이 약 80%로 나타날 정도로 사회적 요구가 강하므로 구속성이 있도록 ‘제시’해도 된다고 본다.

넷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과정별 선택 과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둬으로써 학습자의 진로에 초점을 맞춘 교과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다섯째, 학교에서의 과정 운영과 국가 고사(대수능 등) 및 대입시에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위 학교에서 구속성이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권장’으로 하고 단위 학교에서 될 수 있는 한 따르면 좋겠지만, 대학입시 체제가 강한 구속력을 갖는 현실에서, 단위 학교의 ‘실정’과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따르지 않아서 문제점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없는 나라들에 비춰볼 때 ‘권장’으로 할 충분한 명분도 있지만, 위에서 말한 현실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구속력이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와 더불어 선택 교육과정을 인정한다고 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집중 과정에서 도덕·사회 과목군이나 과학 과목군에서 ‘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역별 택1’로 바꾸어야 한다.

만약 최소한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4개 영역을 골고루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실정에 따라’ 즉 교사 수급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특정 영역으로 치우쳐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입시 체제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학습의 용이성’, ‘내신 성적 산출의 유·불리 여부(소규모 학생 수강 과목 기피)’ 등에 따라 균형있게 이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각 과목별 이수 비율이 매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다.

평가원의 진단처럼 첫째, 고교 학습과 대학 진학 후 학습의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과정별로 필요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고 둘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과정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과목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하며 셋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과정별 선택 과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둬으로써 학습자의 진로에 초점을 맞춘 교과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고 넷째, 학교에서의 과정 운영과 국가 고사(대수능 등) 및 대입시에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역 구분없이 단순히 아무 영역이나 4개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기타

● **향후 예체능 과정과 직업 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학교 밖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평가원에서 제안한 ‘고등학교 졸

업이수 단위수'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체육과정이나 과목 선택 학생수는 한 학교에서 보통 최소 기준으로 잡는 20명 정도는 쉽게 도달하는데, 음악, 미술 과목의 경우 극히 소수의 학생이 선택하여 개설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더욱 더 '졸업이수 단위수'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졸업이수 단위수'를 90%로 설정할 경우 고2~3학년의 10%, 12.8단위(즉 12단위) 밖에 되지 않아 2학년 1학기 때부터 주당 3시간의 여유가 생긴다. 이 시간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80%로 설정하면 여유분 205% 25.6단위(즉 25단위)가 되어 실질적으로 학교 밖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고등학교에 '졸업이수 단위수'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단위학교에서 예체능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는 그대로 두고 그렇지 못한 경우 예체능 과정을 택한 학생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예체능 과정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자칫하면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임무를 사교육이 담당하는 것으로 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 '집중 과정'에서 '택 5'를 '택 4', 혹은 '택 4~5'로 바꾸자. (이 문제는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 정하자)

'집중 과정'에서 인문사회과정의 이수 과목이 도덕, 사회 과목군에서 택 5로 되어 있는데 택 4로 바꾸자. 왜냐하면 4개 영역이므로 각 영역에서 1과목씩 하면 된다. 과목 수 제시는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율 선택' 택 1을 할 수 있다. 택 5로 한다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자연과정의 과학 과목군에서도 택 4로 하자.

혹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최소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혹은 예술·체육과정에서도 진로 관련 과목에서 택 4~5로 되어 있듯이 택 4~5로 바꾸자.

● 집중 과정의 이수 비율이 '최소 이수 비율' 45%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권장 이수 비율'로 바꾸자.

'최소'로 한정지으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이 제약받게 된다. 더구나 6단위 과목은 2단위 축소하여 4단위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수 비율을 한정지으면 안된다.

● 향후 선택 과목을 정할 때 각 과목별 교육과정 개발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계 주체들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하자.

이는 선택 교과 교육과정 개발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 교양 과목은 단위 학교의 재량 시간이나 '자율 선택'으로 운영할 수도 있게 하자.(이 문제는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 정하자)

교양 과목은 이수만 하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실한 교수와 수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 학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양 과목’이라는 것은 다양한 과목을 모아놓은 과목군에 불과하다.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환경, 종교 등의 과목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학과를 나온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지정하든지, 대부분 학교에서는 해당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없다. 어차피 전공 교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 교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 시수가 부족한 교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의적 재량’ 시간과 마찬가지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양 증진이라는 과목 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당 2시간 하는 교양 과목 이수 단위를 없애고 주당 32단위로 줄이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단위 학교 재량 시간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혹은 ‘자율 선택’ 이수시간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선택 과목 중 하나를 이수하는 것이다. 교양 과목 수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본다.

물론 개설한 교양 과목의 전공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위와 같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7차 교육과정 때처럼 교과 심화보충 재량시간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입시 과목 단위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IV.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안에 대하여

1. 졸업이수 단위수 설정 취지에 적극 찬성

(이 문제는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 정하자)

평가원의 취지대로 고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 촉진하고 학습자 집단의 다양화 요구를 충족하고 학습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또한 이 제도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미진하나마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고등학교 2, 3학년 총 이수 단위 수의 증감 운영 방안, 선택 과목의 개설 범위 확대, 선택 과목의 기준 단위 폐지 방안은 현장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연구가 필요

(이 문제는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 정하자)

증감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소 운영했을 때 학력 저하라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 될 것이고 혹은 타학교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증가해서 운영하려는 학교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다 보면 많은 학교에서 34단위에서 3단위 추가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감해서 운영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

부록 4 : 고등학교 규모별 집중 과정 시뮬레이션 결과 예시

1. 대규모학교 사례- 서울 A고

A고의 일반 현황	인문과정 : 6개반, 자연과정 : 5개반, 예체능(체육)반 : 1개반 전체 : 36학급(학년당 12학급), 교사 : 71명
-----------	---

1. 집중 과정 예시안과 대규모 A고 사례의 비교

구분		<집중 과정 예시>				대규모 A고					
		교과군 공통	인문사회	수학과학	예술체육	인문사회		자연		체육	
						선택	비고	선택	비고	선택	비고
교과	국 어 도 덕 회 사 회	택 1	택 4 택 5		택 2 택2~3	택 4 (24) 택 1 (6) 택 4 (24)		택 3(20) 택 2(10)	+ 4	택 3 (20) 택 3 (16)	0~+ 1
	수 학 과 기 가 체 음 미 육 악 술 미 술	택 1		택 4 택 5 -		택 2(16) - 택 1(4)	+ 2	택 4 (24) 택 5 (26) 택 1(4)		택 2(16) - 택 1(4)	+2
	영 어	택 1	택2	택2	택2	택4 (24)	+ 1	택 2 (8) 택 4 (24)	+ 1	택 7 (32) 택 4 (24)	+ 1~2
	제2 외국어	택 1				택 2(12)	+ 1	택 1(6)		택 1(6)	
	한 문 교 문 양	택 2				택 2(10)		택 2(8)		택 2(10)	
	최 소 이 수 비 율		(45%)	(45%)	(45%)	128(51.6%)		128(48.4%)		128(51.6%)	

* 집중과정의 해당 교과군은 교과군 공통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음

2. 대규모 A고 학년별 이수단위표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체육과정
2학년	국어A(6) (1학기) 국어B(6) (2학기) 일사B(8) 수학A(8) 기술가정A(4) 체육A(4) 영어A(6) (1학기) 영어B(6) (2학기) 제2외A(6) (택1) 한문A(6) 논리학(4)	국어A(8) 수학A(6) (1학기) 수학B(6) (2학기) 화학A(4) 생물A(4) 물리/지구과학A(4)(택1) 기술가정A(4) 체육A(4) 영어A(6) (1학기) 영어B(6) (2학기) 제2외A(4) (택1) 한문A(4) 논리학(4)	국어A(8) 수학A(8) 기술가정A(4) 체육A(4) 체육C(6) (1학기) 체육D(6) (2학기) 영어A(6) (1학기) 영어B(6) (2학기) 제2외A(6) (택1) 한문A(6) 논리학(4)
소계	64단위 9과목	64단위 11과목	64단위 9과목
3학년	국어C(6) (1학기) 국어D(6) (2학기) 윤리A(6) 일사A(4) 역사A/B(6) (택1) 지리A/B(6) (택1) 수학C(8) 체육B(4) 영어C(6) (1학기) 영어D(6) (2학기) 제2외B(6) (택1)	국어C(6) (1학기) 국어D(6) (2학기) 일사A(4) 지리A(6) 수학C(6) (1학기) 수학D(6) (2학기) 물리/지구과학A(6)(택1) (2학년에 이수 안한 과목) 화학/생물/(물리/지학)B(8)(택1) (물리/지학의 경우 2학년에 이수한 과목) 체육B(4) 영어C(6) (1학기) 영어D(6) (2학기)	국어C(6) (1학기) 국어D(6) (2학기) 일사A(4) 역사A(6) 지리A(6) 수학C(8) 체육E(4) (1학기) 체육F(4) (1학기) 체육G(4) (2학기) 체육H(4) (2학기) 영어C(6) 영어D(6)
소계	64단위 9과목	64단위 8과목	64단위 8과목
총계	128단위	128단위	128단위

3. 대규모 A고 과정별 이수과목과 단위 도표

○ A고 인문사회과정

32									
30		지리A/B (택1)							
28									
26									
24	국어D	역사A/B (택1)					영어D		
22									
20									
18	국어C	도덕A	수학C				영어C		
16									
14									
12	국어B	일사B	수학A				영어B	2외국어B	논리학
10									
8						체육B			
6	국어A	일사A	수학A				영어A	2외국어A	한문A
4									
2									
단위/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음/미	외국어	제2외국어	교양

○ A고 자연과정

32									
30									
28									
26									
24			수학D	물,화,생,지 B(택1)			영어D		
22									
20	국어D		수학C	지/물A			영어C		
18									
16									
14	국어C		수학B	생물A			영어B		
12					일사A				
10									
8	국어A	지리A	수학A	화학A		체육B			논리학
6									
4				물/지A	기술가정A	체육A	영어A	2외국어A	한문A
2									
단위/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음/미	외국어	제2외국어	교양

○ A고 예체능과정(체육과정)

32						체육H			
30									
28						체육G			
26									
24						체육F	영어D		
22									
20	국어D					체육E	영어C		
18									
16		일사A	수학C			체육D			
14	국어C								
12			지리A	수학A			체육C	영어B	논리학
10									
8	국어A	역사A	수학A			체육A	영어A	2외국어A	한문A
6									
4					기술가정A				
2									
단위/교과	국어	도덕/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음/미	외국어	제2외국어	교양

4. 대규모 A고의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표(사8,역4 단위 가정)

교과	과목	국영통교과	기준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주당시수합계	과목시수	과목인원(기준 71)	개인별시수	과목구분	비고
				공통 12		인문사회 6		체육 1		자연 5		인문사회 6		체육 1		자연 5		인문사회 6		체육 1		자연 5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어	국어	8	8	4	4																		48										
	국어A		6			6		4	4	4	4												60										
	국어B		6			6																											
	국어C		6														6		6		6		72	211	13	16.2	국,한						
	국어D		6														6		6		6												
한문	한문A		6			3	3	3	3	2	2											31											
교양	논리학		4			2	2	2	2	2	2											24	24				수업 적은 분 담당						
도덕	도덕	4	4	2	2																	24											
	윤리A		4														3	3					18	42	3	14	도						
	윤리B		6																														
사회	사회	8	8	4	4																	48					사24, 지24						
	일사A		4														2	2	2	2	2	2	24	72	4	18	사회						
	일사B		6			4	4															24											
	국사	4	4	2	2																	24											
	역사A		4														3	3	3	3			21	45	3	15	역사						
	역사B		6														③	③															
	지리A		4														3	3	3	3	3	3	36	60	4	15	지리						
	지리B		6														③	③															
수학	수학	8	8	4	4																	48											
	수학A		6			4	4	4	4	6													58										
	수학B		6																														
	수학C		6														4	4	4	4	6		58	164	10	16.4	수학						
	수학D		6																			6											
과학	과학	8	8	4	4																	48					2학년						
	물리A		4							2	2												30				물A/지A 택1						
	화학A		4							2	2																화,생 필수						
	생물A		4							2	2																2학년에 물A						
	지구과학A		4						②	②											3	3					(지A)선택						
	물리B		6																			4	4	35	113	2	14.1	과학					
	화학B		6																			④	④				(물A)선택						
	생물B		6																			④	④				물B(지B)/화B/생B						
지구과학B		6																			④	④				중 택 1							
기타	기술가정	6	6	3	3																	36											
	기술가정A		4			2	2	2	2	2	2												24	60	4	15	기타						
예체능	체육	4	4	2	2																	24											
	체육A		4			2	2	2	2	2	2											24											
	체육B		4														2	2				22	84	5	16.8	체							
	체육C		6~					6														6											
	체육D		6~						6																								
	체육E		6~																				4										
	체육F		6~																				4										
	체육G		6~																														
	체육H		6~																														
	음악	2	2	1	1																		12	12	1	12	음						
미술	2	2	1	1																		12	12	1	12	미							
영어	영어	8	8	4	4																	48											
	영어A		6			6		6		6												72											
	영어B		6			6		6		6																							
	영어C		6														6		6		6		72	192	12	16	영						
	영어D		6														6		6		6												
제2외국어	중국어A		6			3	3	3	3	2	2											31											
	프랑스어A		6			③	③	③	③	②	②																						
	일본어A		6			③	③	③	③	②	②																						
	중국어B		4														3	3					18	49	3	16.3	외						
	프랑스어B		4														③	③															
일본어B		4														③	③																
특별활동	4	8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72	72										
재량	2	4	1	1																		12	12				수업 적은 분 담당						
선택					③	③	⑨	⑨	②	②	⑨	⑨	⑧	⑧	④	④																	
합계		68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1,224	1,224	71	17.2		특활 +0.5 추가						
과목수					10	10	9	9	9	9	11	11	9	9	8	8	8	8	8	8	8												

【토론 3】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이 경 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초, 중, 고 12년의 교육기간을 통해 우리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대로 가르쳐 상급학교나 사회로 학생을 배출해 내는 것은 당연한 국가교육의 의무이다. 그러나 요즘 국가의 책무를 통한 교육과정에 대해 불만과 염려의 소리가 높고 특히 국민 공통교육과정이 과연 합당하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나 하는 물음이 계속 되고 있는 시점에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학교만 보내면 알찬 교육 과정을 잘 배울 것으로만 알고 있던 학부모로서 엄청난 학습량과 어려워진 학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랄 때 보다 더 못한 아이들의 실력과 당연히 배우는 줄 알았는데 안 배워서 모른다는 아이들의 항변에 당황해하며 7차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이즈음의 교육과정에 대해 품은 회의를 문제로 제기 하고 싶다.

우선적으로 설문조사결과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고교의 학습이 진로에 도움이 안 된다(58.8%)는 통계와 일반선택은 비교적 높은 이수율을 보이나 심화선택 과목은 과목별 이수율에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듯이 우리나라는 고교의 수업이 적성과 진로의 선택 보다는 일차적으로 대학의 입학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그 동안의 교과체계가 너무 이상에 흐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공통 기본교과와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간의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개선안에서는 체계적인 학업이수를 위해 교과군 공통선택과 집중 과정 선택 운영을 제안, 권장한 것은 학생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보여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발제원고는 너무 어려워 학부모로서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많아 정확한 지적은 힘들지만 상식선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1. 대학입시와 괴리된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발제에서 제기되었듯이 현재 7차 교육과정은 학교와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여 일반 선택 26과목, 심화선택 53과목으로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했으나 지나친 세분화가 오히려 선택과목 간의 연계를 미흡하게 하고 고 2-2, 3-1의 짧은 이수기간을 통해 학생의 고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어 선택교과의 난이도가 높거나 내신 성적에서 불리한 과목의 경우 기피하는 경향이 커 졌다. 또 인원이 적은 계열(자연계열)은 내신 불이익이 우려 되어 이과인데도 문과를 택해 높은 내신 등급을 얻으려 하여 이과에 필요한 학생이 문과 공부로도 입학이 가능한 현재의 대학 입시(문, 이과 교차지원)와 모든 학생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현실에서 교육과정의 실효성은 대학입시와 별개로 운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과정은 대학입시와 조화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의 부조화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킴으로 이러한 현실을 교육과정 개편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한다.

교육은 미래지향적이며 대 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는 선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물론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갖추고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재 양성 측면의 수준 높은 교육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8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 국민들의 보편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이 원칙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개정안에서 제시된 교과군 공통선택의 목적이 10학년까지의 공통 기본교과 이수와 11, 12학년의 집중 이수 과정을 연계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교양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데 진정한 기본교양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 한다. 꼭 교육과정을 인문사회교과군, 수학 과학교과군, 예술 체육교과군, 영어교과군, 제2외국어 교과군, 한문교양교과군의 6개 교과군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한 예로 그동안 관습적으로 음악, 미술, 체육을 하나로 묶어 예술이라는 묶음으로 생각 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렇지 음악, 미술, 체육은 엄연히 확실한 다른 독립적 영역이고 각각의 장르의 독창성과 중요성이란 현대의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모두 다 꼭 배워야만 하는 기본이고 이것이야말로 교양이며 필수인 것이다.

요즘은 건강, 웰빙, 문화적 생활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아닌가? 그동안 슬그머니 체육이 기본 공통교육과정에서 소외되고 선택과목이 되는 중에 어느새 인지 모르게 청소년의 체격은 월등히 커졌음에도 체력은 형편없이 저하되고 각종 성인병에 침범 당했으며 비만과의 전쟁이 국가적 과제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추구하는 가치가 음악, 미술, 연극, 문화 등 여가를 즐기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과목들을 하나로 묶어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줄이는 것은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것이고 이 과목들이야말로 공통 기본교과로 졸업할 때 까지 필수로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또한 여차하면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학력의 저하 우려”라는 그 학력에 대한 고정관념도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올바른 삶을 통한 건전한 사고, 건강한 신체, 바른 가치관, 문화의식이 곧 사회의 힘이며 학력이고 경쟁력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꼭 학습교과만이 학력이 되고 예체능은 비교과가 되는 그래서 학력이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더 깊고 다양한 학문의 선택 기회와 특전을 주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자산인 인재를 길러 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를 주면 열을 받아들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고효율의 생산성 있는 진정한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3. 예·체능계열에 대한 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하다.

예·체능 계열의 학습권 보장 또는 교육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다. 특히 예·체능 학생의 85% 이상이 진로준비에 학교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대학의 예·체능 계열 비율이 15%에 이르는데 예·체능 고등학교는 1.5%라는데 이 차이가 학생 개개인의 노력과 부담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니 사교육 증가와 현장과 유리된 교육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시 바빠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전체의 15%라는 비율을 차지하는 예·체능 계열의 학생의 요구와 앞으로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추세를 생각할 때 예·체능 교과를 교과과정으로 채택토록 하는 것은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예술, 체육 등 소수과정에 대한 대책에서 관련 지침대로 각 학교가 개설하지 못하거나 않은 과목은 지역사회 공공교육시설을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수한 과정을 인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은 물론 환영하지만 가능하면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개설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제시한 대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

- 구체적인 안의 제시 및 설명 필요

2안과 3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집중 과정을 편제표에 제시하여 구속성을 갖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 세밀한 시행 지침 필요

기존의 7차 교육과정 지침은 개별자율 선택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그 결과는 지침이 부재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경험이 있음에도 새로운 개선안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다만 단위학교에 세분된 과정과 과목, 활동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과연 경험이 없는 단위 학교들이 학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단지 학교에만 모른 것을 자율이란 이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건 마련과 재정적 지원 또 세밀한 지침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교육과정평가원등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일 것 같다. 학교가 자율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학생의 기회 불평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교과군으로 과목 묶음에 대한 검토

앞에서 제기한 교과군의 묶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학생들이 편중된 지식과 교육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 하여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토론 4】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

이 중 태(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

○ 현행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

○ ‘현행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문제’ 진단에 관한 의견

- 학습자중심의 교육과정 실천 미흡(형평성 부족, 진로개발 지원 및 국가경쟁력 기초 형성 미흡 등), 교육과정 편제와 과목 개설 체계의 미비(선택과목 체계 불합리, 수준 별 처방 결여, 국가수준 선택과목 개설 방식의 개선 필요 등), ‘과정’에 대한 처방의 필요성 등에 공감
- 그러나 이는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를 현행 고등학교 체제 안에서만 파악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좁게는 고등학교 2,3학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일반계 외의 고등학교까지 포괄하는 시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넓게는 사회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예: 현행 일반계-실업계 구분을 지속할 것인가?)나 장차 학제 변화의 필요성까지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

○ 개선안에 대한 의견

- 접근 시각에 관하여 : ‘현행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을 통하여 실제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어떤 측면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교육과정 운영자의 입장에서 그간 드러난 몇 가지 불합리한 측면을 손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본래 현행 교육과정 도입 당시 지향했던 취지가 얼마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지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 공통사항 ‘교과군 공통선택’안에 관하여 : 대학의 교양 선택 아이디어와 유사한 것으로 긍정적 발상이라 생각됨. 그러나 학교별 교사의 구성이나 현행 수능시험 과목의

구성에 비추어 현장에서의 실제 이수 형태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교과군’ 개념을 도입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이전의 경우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임.

- 제1안에 대하여 :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제1안은 실질적인 개선의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임.
- 제2, 3안의 ‘집중 과정’ 설치안에 대하여 :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집중 과정’을 설치한다는 아이디어는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됨. 이런 입장에서 보면 2안보다는 3안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이 경우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사와 시설공간의 공급 여부가 현실성을 좌우할 것임(현행 체제하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이라는 당초 취지가 교사와 교실의 제약으로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과 동일한 전철 가능성)
- 졸업 이수단위 설정에 관하여 : ‘136단위 이상’이 이미 졸업 이수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90% 이상 이수’로 규정하는 것은 규정의 기술상 불합리. 최소 졸업 이수단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대만의 경우처럼 최소 기준인 ‘136’을 낮추고 최대 이수단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이는 다음 제안인 ‘학교별 총 이수단위 증감 운영 방안과 상치)
- 선택과목의 개설 범위 확대 : 단위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됨(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 사례 참조). 다만, ‘우려사항’에서 지적하는 문제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별 교육의 특성화를 위한 과목의 개설’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목의 기준단위 폐지에 관하여 : 단위학교별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이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려사항’에서 예상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나 기능 등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봄.

○ 추가적인 의견

-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위한 적극적인 고려 : 고 2, 3단계와 와서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하고 이를 위해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나아가 ‘집중과정’을 개설한다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준비에 의미가 있는가?

- ⇒ 고 1이하의 과정에서 이미 선택과목 개설이나 개별 과목에서의 진로관련 내용 강화 등과 같은 진로 탐색과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 제1기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교육과정·교과서 개편안 참조)
- ⇒ 이를 위해서는 10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 구성, 개별 교과와 교육과정 내용 및 교과서 형태 등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할 것임.

- 교육과정 개편 논의 방식의 전환 필요 :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직결되는 교사(과목별, 지역별, 단위학교별 교사 수급 상황/ 교수 인력 운용 방식 등), 시설 공간(다양한 선택과목 수업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보 상황/ 또는 학교 밖 시설 대체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제도 도입 등), 대학입시제도(입시 과목 조정, 경쟁 방식에 따른 과목 선택 경향의 변화 가능성 등) 등의 개편안과 동시 진행

- ※ 제안 : ①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들의 보완을 위한 응급처방으로서의 개편 외에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재검토하기 위한 논의 시작 ② 초중등 단계 (특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관심 제고

【토론 5】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

박 경 옥(부산광역시 교육청)

【토론 6】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

김 대 현(부산대)

발제자는 현행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3가지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1안을 지지하며, 1안에 2안의 일부 장점을 보완하는 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아래에서는 개선안 전체에 대하여 동의하는 점, 생각을 달리하는 점, 보충 설명이 필요한 점 등을 제시하였다.

1. 개선안에 동의하는 점

첫째, 개선안은 현행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분석을 위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연구를 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밝히는 데 어느 때보다 중점을 두었고, 교육과정 계획 단계에서 운영의 환경까지 고려하는 체제적인 접근을 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교육과정 편제 면에서는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을 없애고 선택과목으로 통일하였으며, 국가와 학교의 교과 및 과목 설정권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28단위를 지정하는 유명무실한 지침을 유보시킨 장점이 있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이수 최소단위 수의 설정, 선택과목 개설 범위의 확대, 자율선택 영역의 제안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2. 개선안에 생각을 달리하는 점

첫째, 교육과정 편제안을 구상할 때는 가장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의 성격과 교육목적을 검토하게 된다. 고등학교의 교육은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전문교육(specialized education)을 강조하는가? 고등학교 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졸업자들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지극히 낮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고등학교 2, 3학년과정을 전문교육에 중점을 둔 선택중심(집중과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토론자는 고등학교를 일반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므로 집중과정을 설정하는 2, 3안보다 학생들에게 교과나 과목 선택권을 개방하는 1안을 지지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와 같은 선택교육과정 체제보다는 일반교육을 지향하는 공통교육과정(common curriculum) 체제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과군 공통선택(가칭)은 교과군별로 1과목, 한문·교양 교과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문·교양 교과군을 제외한 공통선택은 국민공통기본과목의 성격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통교육과정의 성격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현재와 같은 선택교육과정 체제와 이에 따른 대학입시제도 아래서는 문과 학생은 수학과 과학을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며, 이과 학생은 국어와 사회를 ‘제대로’ 배울 기회를 잃게 된다.

셋째, 교과군을 나눌 때 한문·교양 교과군에서 한문은 국어교과의 영역 속에 포함시키고, 교양 교과는 1학년 과정에서 이수하게 하는 것이 과목의 성격에도 맞고 학교 현실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교양과목의 ‘기타’는 전문교과도 활용 가능하다고 표시하기보다는, 교양이 어떤 성격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타’에 속하는 과목도 이에 준하여 설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3. 개선안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 점

첫째, 교과군 중에서 교양 교과군을 한문·교양 교과군으로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또한 한문·교양 교과군이라는 명칭을 두고 2과목 이상 선택하도록 한 것은 한문 + 교양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이는 한문 선택 비율이 85%를 상회하여 거의 필수과목화 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문 과목에 대해서는 학교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2, 3안에서 제안한 집중과정은 교과의 선택과목을 교과전체 이수 단위 가운데 45%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45%로 책정한 근거를 밝혀주었으면 한다.

셋째, 교과별 선택과목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편제에서 교과별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감안하지 않고 선택 교육과정 편제를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교과에 포함되는 내용의 폭과 깊이가 어떠한가에 따라 학교와 학생들이 교과와 과목을 달리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행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이과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수학과목의 수와 수준이 매우 높고(10쪽: 학습부담이 가장 많은 과목이 수학으로 나타났음), 대수능의 수리 ‘가’형의 출제 범위

도 넓어서 학습부담이 크다는 점은 이과 계열을 기피(6: 대수능 자연계열 응시자 수가 97학년도 43.3%에서 2002학년도 26.9%로 하락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선택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별 내용의 범위와 깊이 문제와 별도로 제안할 수 없다. 또한 교과에 포함되는 과목들 간의 수직적 연계성과 수평적 연계성, 그리고 교과들간의 수평적 연계성도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학습부담에 영향을 미치므로 편제안과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3학년 2학기는 수시모집, 수능시험, 정시모집 등으로 실질적인 면에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3학년 2학기의 교과목 이수 단위를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4. 종합적 의견

토론자는 현재와 같은 선택중심 체제나 이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 안들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자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일반교육을 지향하는 공통교육과정 체제가 근간이 되고 선택과정 운영은 최소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개선 안 중에서는 1안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율 영역은 추가하였으면 한다.